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1



1부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1장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07
제2장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23

2부



2021년도 나라살림

제1장 2021년도 나라살림 종합	39
1. 재정운용 여건	41
2. 세입 규모	42
3. 지출 규모	49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53
제2장 재정운용 방향	57
1. 자원배분 방향	59
2. 중점 추진과제	64
3.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126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127
1. 보건·복지·고용 분야	129
2. 교육 분야	155
3. 문화·체육·관광 분야	162
4. R&D 분야	174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81
6. SOC 분야	190





7. 농림·수산·식품 분야	200
8. 환경 분야	211
9. 국방 분야	219
10. 외교·통일 분야	224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230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240

3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1장 2021년도 예산	249
1. 2021년도 예산총칙	251
2. 일반회계 (General Account)	256
3. 특별회계규모 및 개요 (Special Accounts)	290
4. 계속비 (Multiyear Expenses)	292
5. 명시이월비 (Authorized Carryover Expenses)	294
6. 국고채무 부담행위 (Act of Treasury to Bear Liabilities)	295
제2장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97
1. 기금요약 (Summary of Funds)	299
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Size of Fund Management)	301
3. 기금수입 (Fund Revenues)	302
4. 기금지출 (Fund Expenditures)	306
별첨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311
❖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313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1





제 1 부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1장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제2장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1

제 1 장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전 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올해 2020년은 세계적인 격변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며, 세계경제와 국제질서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의해 인류는 100년 만의 보건위기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이미 4,3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도 수십만 명의 확진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평범한 일상의 상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이동과 사람들의 교류가 단절되고,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며, 세계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입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동시 타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가 세계 경제를 벼랑 끝에 서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세계에서 어느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대 이후,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것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입니다.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재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주었습니다.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빠른 격리와 치료 등 세계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K-방역의 우수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재확산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8월의 재확산 위기와 추석 연휴의 고비도 잘 넘기며, 코로나를 질서 있게 통제해냈습니다.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비상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대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전망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평가기관이 올해 들어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 조정한 나라가 109개국이나 됩니다. 이와 비교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에 협력해주신 국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네 차례, 67조 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극복의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나와, 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하였습니다.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큼니다.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습니다.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방역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분야와 중소혁신 벤처 분야가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또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초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입니다.

일자리가 출발점입니다. 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긴급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며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고용지표가 조금씩 나아졌지만, 8월 코로나 재확산 위기를 맞으며 다시 일자리 감소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의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입니다.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9천억원을 공급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습니다.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1천억원으로 확대하여 투입하겠습니다.

수출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 반등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앞장선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 문화 콘텐츠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8천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정부와 민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하나가 되어 경제 반등에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21조3천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천억원을 투자하여,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우선,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최근 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IMD가 발표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도 2017년 세계

19위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는 8위까지 상승했습니다. 괄목할만한 발전입니다. ‘디지털’ 분야에 큰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9천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재난 재해 예방과 관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천억원을 투자합니다.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천 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천억원을 투자합니다.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천억원을 투자합니다.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람투자를 꾸준히 늘려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밀착형 생활SOC, 혁신도시, 규제자유 특구 등 국가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입니다. 지역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세계 1등 국가의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로 나아가며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차 역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악조건 속에서도, 올해 9월까지 미래차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전기차는 78% 이상, 수소차는 46%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껏 높아지고 있고, 바이오 헬스 분야가 우리의 새로운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속도를 더욱 높ی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천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습니다.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지역의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산단의 스마트화와 노후 산단의 대개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올해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29조6천억원을 투자합니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문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신산업과 벤처창업 등에 혁신모험 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 특구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왔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 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아져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소중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멍니다. 정부 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46조9천억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 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 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 5천 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 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한결같은 의지를 담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교통사고, 산재사망,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와 올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K-방역 예산을 1조8천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담았습니다.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의 성공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 예산을 52조9천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입니다.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8천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입니다.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합니다.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습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나라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대통령 **문 재 인**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1

제 2 장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존경하는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경제·사회적 위기를 맞아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국민들께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 버텨주시는 가운데, 정부도 올 한해 네 차례에 걸쳐 6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총 310조원 규모의 적극적인 재정·금융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코로나19 재정대응규모는 G20 국가 중 중간 수준(13위, GDP대비 3.5%)인 반면 OECD는 올해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회원국중 가장 높은 $\Delta 1.0\%$ 로 예측하는 등 위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해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로화 외평채를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했고, 달러화 외평채도 역대 최저 수준 금리로 발행했으며, Fitch사가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선방에 대한 해외의 평가도 긍정적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상반기 역성장을 극복하고 3분기 1.9%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는 등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하였다는 점에서 위기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 성장률(% , 전기비) : ('19.4/4) +1.3 ('20.1/4) $\Delta 1.3$ (2/4) $\Delta 3.2$ (3/4) +1.9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세가 심화되고, 美 대선 및 미중 갈등 등 불확실성도 남아있는 등 방역과 경제 양 측면에서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면서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기회복 견인 예산”입니다.

한번 꺼진 불씨는 아무리 풀무질을 하더라도 다시 살려내기 어렵습니다.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내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한국판 뉴딜의 물꼬를 트는 예산”입니다.

내년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는 원년인 만큼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셋째,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체감토록 하는 예산”입니다.

기초연금 확대 목표를 달성하고, 공적임대주택 보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는 등 국정과제의 성과 확산을 최대한 뒷받침하고, 고교무상교육 전면실시를 1년 앞당기는 등 추진속도도 과감히 가속화하겠습니다.

이렇듯 내년에 당면한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 8천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4차 추경대비로는 0.2% 늘어난 수준입니다. 총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0.3% 늘어난 483조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5.4%,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7.1%로 예상됩니다.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고자 투자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공공부문이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업추비 등 경상경비를 5% 이상 감액하며 공무원 처우개선율도 0.9%로 낮췄습니다.

또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처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융합과제를 선정하여 디지털 신기술 인력양성, 신약개발 등 협업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 확대 편성했습니다.

나아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고자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 데 이어 재정건전성과 경기대응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재정준칙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목표 하에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이라는 전략 과제와 ①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②미래 성장동력 확보, ③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④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의 4대 중점투자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의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로서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총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내년에는 국비 21조3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① 먼저 한국판 뉴딜의 첫번째 축으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확산을 위한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우선, D.N.A 생태계 강화에 5조4천억원을 투입합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생산하는 등 데이터 수집·가공·활용을 위한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민간수요가 높은 4.4만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겠습니다.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형 교실에서 ICT기반 교육을 제공하는 ‘그린스마트 스쿨’을 구축하는데 1천억원을 반영하고, 교육·보건·의료 등 비대면산업 육성에도 5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도로·철도·하천·공항 등 핵심기반시설 디지털화하는데 1조9천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전국 국도의 50%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국가하천의 57%에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② 다음으로,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두번째 축인 그린뉴딜에 8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친환경 전환하기 위해 2조4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1천동, 공공임대주택 8만 2천호 등 공공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통학로 주변의 전선·통신선을 지중화하겠습니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4조3천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1조원 규모의 보조·융자·보증을 지원하고, 전기·수소차를 11만 6천대 보급하며, 아파트 225만호에 대한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 등 지능형 스마트그리드를 구현하겠습니다.

7개 스마트산단을 저탄소·녹색산단으로 조성하는 등 녹색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1조3천억원을 반영했습니다.

❶ 마지막으로, 경제구조 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등에 따른 이·전직과 실업, 양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에 5조4천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천억원,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개편 등 사람투자에 7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 예산안 4대 투자중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❶ 그 첫 번째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입니다.

우선, 일자리를 200만개 이상을 지키고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8조6천억원 투입하겠습니다.

근로자 46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1조2천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청년·중장년·소상공인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하며, 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총 20조원의 민간소비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1조8천억원 반영하였습니다.

피해가 큰 농수산·문화·관광분야에 2조원 규모의 소비 창출을 위한 바우처·쿠폰 예산 5천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상권의 빠른 회복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과 3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도 발행하겠습니다.

한편, 미래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민간과 공공의 투자 확대에 65조9천억원을 지원합니다.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정책자금을 금년보다 18조원 이상 늘어난 72조9천억원 공급하는데 재정을 33조9천억원 투입하고, GTX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 SOC시설의 고속화·디지털화와 안전투자 등 공공부문 SOC 투자를 금년보다 11.9% 늘어난 26조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수출여건 극복을 위해 1조2천억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수출 플랫폼을 확충하는 등 수출마케팅 지원에 6천억원을 반영하고, 6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향후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정책자금을 5조8천억원 추가로 공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에 16조6천억원을 투입합니다.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7천억원을 지원합니다.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대형 SOC 사업은 연내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6개 사업은 본격 착공하며 특화산업 지원 등 R&D 4건은 실증·사업화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SOC 투자도 11조1천억원 반영하고 농어촌 등에 젊은 층이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귀농귀촌, 어촌·도시재생 뉴딜 등을 지원하는 2조3천억원 규모의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채 인수도 금년 7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으로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② 두 번째 투자중점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먼저, 첨단분야 R&D 투자, AI·SW 전문가 양성 등 혁신 생태계 구성에 29조 6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27조2천억원으로 12% 이상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BIG3, 한국판 뉴딜 등 분야에 주요 R&D의 70% 수준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디지털분야 고등인재 2만명 양성을 위해 1천억원을 신규로 투자하고, 실전형 전문인재 6만 3천명 육성을 위해 5천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모험자본을 7조원 공급하기 위해 약 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혁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구매 지원도 5백억원으로 5배 이상 늘렸습니다.

다음으로, DNA, BIG3 등 신산업 육성에 9조2천억원을 투자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Data, Network, AI 등 분야에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3조1천억원을 투자하고, 차세대반도체, 완전자율 주행차,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등 3대 핵심산업에 R&D·인력·인프라를 종합 지원하는데 4조원을 투자하여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한편,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5조5천억원을 투입합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조기 국산화 지원대상을 對日 100개 품목에서 對세계 338개로 다변화하기 위한 예산을 2조6천억원 편성했습니다.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의 재도약을 위해 7개 스마트산단과 5개 산단대개조 지역 지원을 통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재정비하고, 광주·울산 등 올해 추가 지정된 2개 경제자유구역도 지원하겠습니다.

③ 세 번째 투자중점은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입니다.

우선,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46조9천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내년에는 노인·한부모 15만 7천가구가 대상에 포함되어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146만원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보장성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고에서 총 11조원을 지원하고, 고교무상교육을 내년 전학년까지 전면실시하여 완성하는 소요재원 9천억원도 반영했습니다.

청년(5만호), 신혼부부(6만호)를 중심으로 19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노후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질을 제고하며, 다양한 소득·연령계층이 어울려 사는 통합형 공공임대주택도 신규로 도입하는 한편,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 3만 1천가구에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농어민·전상군경 등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단가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금년 농업 공익직불제 도입에 이어내년에는 수산 공익직불제도 도입하며, 전상수당도 월 9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숲국민 고용안전망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20조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 예술인·특수형태 근로종사자 46만5천명에게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합니다.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른 소요예산 8천억 원도 차질 없이 반영했습니다.

④ 마지막 투자중점은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입니다.

먼저,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한 예산을 1조8천억원으로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장기화 위기에 대비하여 예방·진단·치료 전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적 치료·진단 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를 착공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500개소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신속한 코로나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위해 다부처 협력 신약개발을 신규 추진하고, 2천억원 규모의 임상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금년과 같은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 수해예방 예산도 2조6천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IoT 기반 풍수해 조기경보시스템을 170개소 구축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을 390개소까지 추가 설치하며,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과 국가댐 실시간 안전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정신건강 등 국민생명 3대 위험요인 개선에 2조7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8천개 확충하고,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산재위험 기계·공정 개선에 7천억원을 지원하며 코로나

확진자·의료진, 소방관,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의 정신건강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200명 확충합니다.

한편,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녹색생활공간 등 「국민 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도 3조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량배출 사업장에 고효율 방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33만대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소요를 1조3천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수돗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수도에 ICT기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지방상수관망과 정수장을 정비하는 등 물관리 스마트화에도 1조1천억원을 투자합니다.

도시숲 조성,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등 녹색공간 확충을 위한 예산도 6천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국가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강군 육성 및 군 사기 진작에 52조 9천억원을 투입합니다.

핵·WMD 대응체계 구축에 5조8천억원,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에 2조2천억원 등 「국방개혁 2.0」에 필수적인 재원은 적극 반영하고, 핵심기술개발 및 부품국산화 지원 등 국방전력 고도화 투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35조8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했습니다. 특히, 병 인건비·급식비 단가 인상, 실손보험료 지원 등 「장병사기진작 7종 패키지」에 3조8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내년은 우리 경제가 회복의 모멘텀을 공고히 하면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촘촘하고 철저한 코로나 방역 하에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청사진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철저한 집행 준비를 거쳐 최대한 조속히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되어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금년 중 예산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 남 기**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1





제 2 부

2021년도 나라살림



제1장
2021년도
나라살림 종합

제2장
재정운용 방향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1

제 1 장

2021년도 나라살림 종합



01. 재정운용 여건
02. 세입 규모
03. 지출 규모
0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1

01 재정운용 여건



2021년 글로벌 경제는 미증유의 코로나 팬데믹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개선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다. 백신 보급에 따른 점진적 경제활동 정상화, 주요국 경기부양 노력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 상황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각국의 코로나 사태 전개양상에 따라 회복세는 차별화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도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비대면·디지털 경제 및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연간 %)

구분	세계	선진국	미국			신흥국	중국	브라질	러시아
			미국	유로	일본				
2020년	△3.5	△4.9	△3.4	△7.2	△5.1	△2.4	2.3	△4.5	△3.6
2021년	5.5	4.3	5.1	4.2	3.1	6.3	8.1	3.6	3.0

자료 : IMF(2021. 1.)

금년 우리 경제는 작년보다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정부의 적극적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성장세 반등이 기대된다.

내수는 소비가 완만히 개선되는 가운데, 투자도 IT부문 및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증가세 확대가 예상된다. 수출의 경우 글로벌 경기·교역 회복,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IT부문 및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코로나 상황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인구·가구·지역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시급하다.

[표 1-2] 2021년 경제 전망

(단위 : 연간 %)

	2019년	2020년 ^e	2021년 ^e
경제성장률(%)	2.0	△1.1	3.2
소비자물가(%)	0.4	0.5	1.1

자료 : 2021년 경제전망(2020. 12.)

02 세입 규모



2-1 총수입 : 2020년 예산 대비 0.2% 증가한 482.6조원

예산과 기금을 합한 나라전체 총수입은 2020년 예산보다 0.2% 증가한 482.6조원으로 전망된다.

예산수입은 2020년 예산(319.9조원) 대비 $\Delta 2.6\%$ 감소한 311.6조원 수준이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2020년 본예산 대비 $\Delta 3.2\%$ 감소한 282.7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입이 286.9조원, 특별회계 수입이 24.7조원으로 전망된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확대 등에 따라 2020년 본예산 대비 5.6% 증가한 171.0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1] 2021년 총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20년		2021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A	(C-B)/B
총수입	481.8	470.7	482.6	0.2	2.5
■ 예산	319.9	308.8	311.6	$\Delta 2.6$	0.9
(국세)	(292.0)	(279.7)	(282.7)	($\Delta 3.2$)	(1.1)
• 일반회계	295.9	284.8	286.9	$\Delta 3.0$	0.7
• 특별회계	24.0	24.0	24.7	2.8	2.9
■ 기금	161.9	161.9	171.0	5.6	5.6
(사회보장성기금) ¹⁾	95.8	95.8	99.5	3.9	3.9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참고 총수입이란 ?

재정수입은 회계·기금별로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회계·기금을 모두 합한 총수입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15개의 기타특별회계 및 67개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 회계간 전출입 금액 등을 중복계상 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총수입은 중앙 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으로 사실상 IMF가 국제적 비교를 위한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는 통합재정 작성방식과 거의 같은 개념이다.

☞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이 그룹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각각의 회계, 기금을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로 본다면 총수입은 그룹 전체의 연결재무제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는 이유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할 경우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보다 과대 계상된다. 예를 들면, 100원의 조세수입을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이를 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 일반회계 세입은 100원, 기금 수입도 100원이지만 총수입은 내부거래(100원)을 제외한 100원만 계상하여야 실질적인 정부 수입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있다.

또한 국채발행 수입·차입금 등도 총수입 계산시 제외된다. 국채발행 수입 등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정부전체 수입규모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총수입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따라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수입은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것이다. 제3부에서는 회계·기금별로 독립된 규모를 설명하기 위해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총계 개념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수입을 나타내고 있다.

2-2 예산 수입 : 2020년 예산 대비 △2.6% 감소한 311.6조원

예산 수입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으로 나뉘고, 수입 원천별로는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국세수입과 벌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회계 세입 : 2020년 예산 대비 △3.0% 감소한 286.9조원

일반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국세수입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2021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20년 본예산(284.1조원) 대비 △3.6% 감소한 274.0조원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20년 본예산(11.7조원) 대비 9.9% 증가한 12.9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1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20년 본예산 대비 △3.6% 감소한 274.0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수입은 2020년 본예산 대비 △4.6% 감소한 239.6조원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 및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등 정상적인 국세 외 수입으로서, 2020년 예산 대비 9.9% 증가한 12.9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2] 2021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20년		2021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A	(C-B)/B
합 계(Ⅰ+Ⅱ)	295.9	284.8	286.9	△3.0	0.7
■ 국세(Ⅰ)	284.1	271.9	274.0	△3.6	0.8
• 내국세 ¹⁾	251.1	240.3	239.6	△4.6	△0.3
• 관세	8.8	7.7	8.3	△5.1	8.2
• 교통·에너지·환경세	15.7	15.5	15.7	△0.2	1.5
• 교육세	5.2	5.0	5.3	2.3	5.3
• 종합부동산세	3.3	3.3	5.1	54.0	54.0
■ 세외수입(Ⅱ)	11.7	12.9	12.9	9.9	△0.4

1)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특별회계 세입 : 2020년 예산 대비 2.8% 증가한 24.7조원

2021년 특별회계 세입은 2020년 본예산(24.0조원) 대비 2.8% 증가한 24.7조원으로 전망된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세·농어촌특별세 등 국세와 용자회수·부담금 등 자체수입으로 구성된다. 2021년 특별회계 세입 중 국세는 2020년 예산(7.9조원) 대비 10.7% 증가한 8.7조원으로 전망되며, 자체수입은 2020년 예산(16.1조원) 대비 △1.0% 감소한 16.0조원으로 전망된다.

[표 2-3] 2021년 특별회계 세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20년		2021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A	(C-B)/B
합 계(Ⅰ+Ⅱ)	24.0	24.0	24.7	2.8	2.9
■ 국세(Ⅰ) ¹⁾	7.9	7.8	8.7	10.7	11.3
■ 자체수입(Ⅱ) ²⁾	16.1	16.2	16.0	△1.0	△1.2

1) 주세·농어촌특별세 2) 각종 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 용자회수, 수수료 등

참고 2020년 세법개정 주요 내용

◆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 투자세액공제 확대(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주류산업 규제 개선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및 법인을 활용한 투기 근절

◆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관세평가 제도 정비
-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 추가,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최우선으로
포용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함께 추진**



2-3 기금 수입 : 2020년 대비 5.6% 증가한 171.0조원

2021년 기금 수입은 2020년 대비 5.6% 증가한 171.0조원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은 5.0% 증가한 77.0조원, 용자원금 회수는 3.5% 증가한 26.2조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7.3% 증가한 67.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금 수입은 크게 사회보장기여금, 용자원금 회수, 기타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사학연금의 연금기여금과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로 구성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2020년 대비 5.0% 증가한 77.0조원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등에 용자한 자금을 만기에 회수하는 용자원금 회수규모는 2020년 대비 3.5% 증가한 26.2조원으로 예상되며,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자산운용 규모 증가 등으로 인해 2020년 대비 7.3% 증가한 67.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표 2-4] 2021년 기금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률
합 계(Ⅰ+Ⅱ+Ⅲ)	161.9	171.0	5.6
• 사회보장기여금(Ⅰ)	73.4	77.0	5.0
• 용자원금 회수(Ⅱ)	25.3	26.2	3.5
• 이자수입 등 기타(Ⅲ)	63.2	67.8	7.3

기금 유형별로는 사업성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만기도래 용자원금회수 증가 및 주택도시기금의 재산수입 증가 등으로 2020년 대비 5.3% 증가한 46.1조원, 사회보험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증가로 4.2% 증가한 117.1조원, 계정성 기금은 복권기금의 복권판매수입 증가 등으로 36.8% 증가한 7.7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표 2-5] 2021년 기금유형별 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률
합 계(58개)	161.9	171.0	5.6
• 사업성 기금(48개)	43.8	46.1	5.3
• 사회보험성 기금(6개) ¹⁾	112.4	117.1	4.2
• 계정성 기금(4개) ²⁾	5.7	7.7	36.8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2)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참고로 앞서 설명한 기금 수입 171.0조원은 통합재정 관점에서의 기금 수입으로서, 국회에서 확정된 67개 전체 기금의 수입(기금운용규모) 773.7조원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에는 회계·기금 등 정부 내부간 거래, 민간차입금, 이미 기금으로 전입되어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던 것을 회수하는 여유자금회수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자체수입만을 반영한다.

둘째, 금융성 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순수한 재정활동이라기보다는 금융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통합재정 관점에서의 총수입에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통합재정 관점에서 예산과 기금을 합한 정부전체의 총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58개 기금의 자체수입만을 포함한다.

03 지출 규모



3-1 총지출 규모 : 2020년 예산 대비 8.9% 증가한 558.0조원

2021년도 총지출은 558.0조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8.9% 증가한 규모이다.

2021년 총지출은 2020년 예산 대비 8.9% 증가한 558.0조원이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빠르고 강하게 극복하고, 한국판 뉴딜 등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하였다.

예산 총지출은 375.0조원으로 2020년 예산 대비 6.8% 증가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6.4% 증가한 314.8조원, 특별회계는 9.3% 증가한 60.2조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0년 계획 대비 13.5% 증가한 182.9조원이다.

[표 3-1] 2021년 총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2020년		2021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A	(C-B)/B
총 지 출	512.3	554.7	558.0	8.9	0.6
■ 예 산	351.1	377.5	375.0	6.8	△0.6
• 일반회계	296.0	323.5	314.8	6.4	△2.7
• 특별회계	55.1	54.0	60.2	9.3	11.5
■ 기 금	161.1	177.3	182.9	13.5	3.2

참고 총지출 규모란 ?

정부의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MF 기준),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정부 재정규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말한다.

$$\text{통합재정규모} = \text{경상지출} + \text{자본지출} + \text{순융자(융자지출 - 융자수입)}$$

총지출 규모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뜻하며, 2005년부터 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우리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다.

총지출 개념은 국제적으로 재정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민에 대해 재정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총지출 규모는 통합재정규모가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융자거래와 기업특별회계를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므로 통합재정규모보다는 항상 규모가 크다.

일반정부 재정규모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국은 국민계정 작성기준(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OECD에서 각국의 공식적인 통계를 취합·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한국은행이 1993 SNA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반정부 통계를 작성해 왔으나, 재정통계 개편안을 마련(2011. 9월 국무회의)하여 정부의 국제기구 제출용 재정통계와 한국은행 통계기준을 일치시켰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 포괄범위는 일반정부가 기준이 되며, 제도단위 여부*와 시장성 기준** 등에 따라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된다.

* 제도단위: 자율적인 의사결정체계 및 독립적 자금운용계정 보유

** 원가보상률(판매액 ÷ 생산원가)이 50% 이하이면 일반정부, 초과하면 공기업으로 분류

3-2 예산지출 규모 : 2020년 예산 대비 6.8% 증가한 375.0조원

2021년 예산 지출 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6.8% 증가한 375.0조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4% 증가한 314.8조원, 특별회계는 9.3% 증가한 60.2조원이다.

일반회계는 경제회복·한국판 뉴딜·국정과제 등 필수투자 소요의 차질 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하여 2020년 예산 대비 6.4% 증가한 314.8조원 규모이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5개와 기업특별회계 5개의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예산 대비 9.3% 증가한 60.2조원이다.

예산의 경우 총지출 개념과는 별도로 예산총계에서 예산회계 내부간 및 계정간 거래를 제외한 예산순계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산순계의 2020년 예산 대비 지출증가율은 8.1%이다.

[표 3-2] 2021년 예산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2020년		2021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A	(C-B)/B
■ 예산지출	351.1	377.5	375.0	6.8	△0.6
• 일반회계	296.0	323.5	314.8	6.4	△2.7
• 특별회계	55.1	54.0	60.2	9.3	11.5
■ 예산순계	386.2	418.9	417.4	8.1	△0.4

3-3 기금지출 규모 : 2020년 대비 13.5% 증가한 182.9조원

2021년 기금지출 규모는 2020년 대비 13.5% 증가한 182.9조원으로 이 중 사회보장지출은 13.7% 증가한 62.3조원이다.

기금 사업비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소상공인지원용자 확대 등으로 2020년 대비 14.0% 증가한 164.0조원이고, 이 중 사회보험성 기금사업비는 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지출 확대 등으로 2020년 대비 11.9% 증가한 85.8조원이다.

한편, 기금운영비는 2020년 조원 단위 규모를 유지한 1.8조원이고, 차입금이자상환은 2020년 대비 11.7% 증가한 17.2조원이다.

[표 3-3] 2021년 기금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2020년		2021년 (C)	증감률	
	당초(A)	수정(B)		C/A	C/B
합 계(58개) (사회보장지출 ¹⁾)	161.1 (54.8)	182.0 (62.4)	182.9 (62.3)	13.5 (13.7)	0.5 (Δ0.2)
■ 사업비	143.9	165.9	164.0	14.0	Δ1.1
• 사업성 기금(48개)	63.0	75.0	72.0	14.3	Δ4.0
• 사회보험성 기금(6개) ²⁾	76.7	85.2	85.8	11.9	0.7
• 계정성 기금(4개) ³⁾	4.2	5.7	6.1	45.2	7.0
■ 기금운영비	1.8	1.8	1.8	-	-
■ 차입금이자상환	15.4	14.4	17.2	11.7	19.4

1)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지출

2)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3)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0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4-1 재정수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21년 통합재정수지는 △75.4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2.5조원 적자로 전망된다.

2021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7% 수준(△75.4조원) 적자이고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5.6%(△112.5조원) 적자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및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도 위기대응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전성 관리노력도 병행해 나감으로써 2020~2024년 계획기간 중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2024년 GDP 대비 △5% 중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표 4-1] 재정수지

(단위 : 조원)

구 분	2020년		2021년 (C)	증 감	
	본예산(A)	추경(B)		(C-A)	(C-B)
■ 통합재정수지(Ⅰ)	△30.5	△84.0	△75.4	△44.9	8.6
(GDP 대비, %, %p)	(△1.5)	(△4.4)	(△3.7)	(△2.2)	(0.6)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Ⅱ)	41.0	34.6	37.1	△3.9	2.5
■ 관리재정수지(Ⅰ-Ⅱ)	△71.5	△118.6	△112.5	△41.0	6.1
(GDP 대비, %, %p)	(△3.5)	(△6.1)	(△5.6)	(△2.0)	(0.6)

참고 관리재정수지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연금 등 장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이 시행 초기단계로 구조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실현하고 있으며, 실제 국가채무 증가와의 연관성 등을 감안할 때 관리재정수지가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부터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관리재정수지를 발표하고 있다.

4-2 ▶ 국가채무

2021년 국가채무는 956.0조원(GDP 대비 47.3%)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증가(135.2조원) 등에 기인한다.

2021년 예산의 국가채무 전망치 956.0조원 중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3.2% 수준인 603.8조원이며, 나머지 36.8% 수준인 352.2조원은 채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 융자채권 등 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이다.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총지출 관리 등을 통해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가 속도를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금융성 채무는 외평기금과 주택기금의 채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평기금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로서 현재 외화표시 외평채와 국고채로 구성된 자금에 의한 채무로 구분되며, 한국은행 예치금, 외화위탁자산 등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순수하게 국민부담으로 돌아가는 적자성 채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주택도시기금 채무는 서민주거 안정용 국민주택채를 발행하고, 대출금 형태의 대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금융성채무로 구분된다. 정부는 금융성채무에 대해서도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채무 상황이 가능하도록 대응자산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 4-2] 국가채무*

(단위 : 조원, %)

구 분	2019년 결산	2020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 국가채무 (GDP대비, %)	723.2 (37.7)	805.2 (39.8)	956.0 (47.3)
① 적자성 채무	407.6	476.6	603.8
• 일반회계 적자보전	334.7	397.0	532.2
•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72.9	79.6	71.6
② 금융성 채무	315.6	328.6	352.2
• 외환시장 안정용	247.2	260.7	264.2
• 서민주거 안정용 등	68.5	67.9	87.9

* 2020년, 2021년 본예산 국회 확정 기준

2021년 예산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3%이며, 정부는 지출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지속을 통해 2024년까지 50%대 후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제 2 장

재정운용 방향



01. 자원배분 방향
02. 중점 추진과제
03.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1

01 재원배분 방향



우리경제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소비·생산·투자 등 내수는 크게 위축되었고, 국민의 일상은 어려움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안팎의 도전요인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2021년도 예산은 경제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인 내용면에서 (1)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2)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3)미래 성장동력 확보, (4)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5)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1-1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2021년도 예산의 최우선 전략과제는, 대한민국 대전환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이다. 정부는 2020년 7월, 코로나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총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21년 예산에는 국비기준으로 21조원을 반영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파급효과가 크고 집행여건이 확보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및 안전망 강화에 2021년 예산의 80% 수준을 집중 편성했다.

우선,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에 7.6조원을 투입한다. 데이터 수집·가공·활용을 위한 ‘데이터 댐’을 구축하는 동시에, 5G·AI를 기반으로

공공서비스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지능형 정부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자율주행 등에 활용가능한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45%에 확대 구축하는 등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한다.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뉴딜에는 8조원을 계상하였다. 노후 공공건축물 1천동, 공공임대주택 8만 3천호의 단열재를 교체하는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추진하고, 아파트 138만호에 대한 스마트 전력량계를 보급하는 등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를 구현한다.

이러한 경제·사회질서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격차 및 실업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5.4조원을 투입하여 디지털·그린뉴딜의 양대 축을 견고히 뒷받침한다.

1-2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으로부터 조기에 회복하고, 경제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하여 일자리·민간소비·투자·수출 등 전방위적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을 적극 투입한다.

우선, 고용충격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예산을 8.9조원 반영하였다. 78만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중장년 등 맞춤형 일자리 57만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104만개 등 일자리를 200만개 이상 지키고, 새로 창출한다.

위축되어 있는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간소비 창출 예산을 2.1조원을 반영했다. 코로나 피해가 큰 농수산·문화·관광 분야에 2조원 규모의 소비를 유도하는 4대 바우처

및 4대 쿠폰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커 지자체 수요가 많은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5조원에서 18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민간·공공분야 투자 확충을 위하여 65.9조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다.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정책자금을 전년보다 17조원 늘어난 72.5조원 공급하고, 공공부문에도 도로·철도, 공항·항만,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SOC 분야에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뿐만 아니라, 수출활력 제고를 위하여 무역정책자금 규모를 2.9조원에서 5.8조원으로 늘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혁신도시', '생활 SOC' 등 3대 핵심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하는 등 전 방위적으로 경제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1-3 ▶ 미래 성장동력 확보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R&D 투자를 충분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BIG3, 기초원천 R&D, 인재양성 등에 중점을 두어 R&D투자를 전년 24.2조원에서 27.4조원으로 13%이상 확대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반도체·미래자동차·바이오헬스 등 3대 핵심 산업(BIG3) 육성에 4.2조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자율주행 기술개발,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 등을 통해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개방, 5G 기반 융합서비스 및 실감콘텐츠 개발, AI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D.N.A.(Data·Network·AI분야) 생태계 조성에 집중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 2.1조원을 반영했다. 자금·R&D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태양광단지 조성 및 풍력발전 초기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하고, 수소생산기지 확충 및 수소자동차 구매보조 등을 확대하여 수소산업을 육성한다.

한편,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5.5조원을 투입한다. 소재·부품·장비 조기 국산화 지원 대상 품목을 對日 100개에서 對세계 338개로 다변화하고, 산업단지 재도약을 위하여 스마트산단에 물류·관제·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한다.

1-4 ▶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2021년도 예산의 또 다른 핵심 과제는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이다. 경제 및 사회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분배악화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21년 예산은 고용·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저소득층 대상 생계급여 지원 단가(4인 기준)를 月 최대 142.5만원에서 146.3만원으로 인상하고, 차상위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10.4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늘린다. 특히 생계급여는 2021~2022년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또한, 장애인 소득지원·활동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참여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月 30만원 지급 대상을 차상위 계층에서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활동지원바우처를 9.9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수혜 대상을 5천명에서 8천명으로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등 지원금 지급 대상을

1.5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1월 30만원 지급하고, 노인일자리를 80만개 확충하는 등 고령층 소득기반을 확충한다.

이 밖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 기반을 구축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시를 위한 소요예산 0.8조원을 반영하였으며,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신규가입이 예상되는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저소득층 46.5만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한다.

1-5 ▶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집중호우 및 태풍 등 많은 위협요인이 있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충실히 계상하였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 위기에 대비하여 K-방역의 고도화·세계화·산업화를 위한 예산 1.9조원을 반영했다. ‘예방-진단-치료’ 전주기적 방역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확충하는 한편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다.

아울러 교통사고, 산업재해, 정신건강 등 위협요인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관련 소요예산을 전년 1.9조원에서 2.7조원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설개보수, 국가하천 및 댐 관리 등 수해예방 관련 투자에 2.6조원을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핵심기술 개발 및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등 국가안보 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예산 52.8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병 인건비 및 급식비·피복비 단가 인상, 병사 군 단체보험 신규지원 등 「장병 사기진작 7종 패키지 예산」도 3.9조원 반영하였다.

02 중점 추진과제



1.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1-1 한국판 뉴딜 개요

1) 한국판 뉴딜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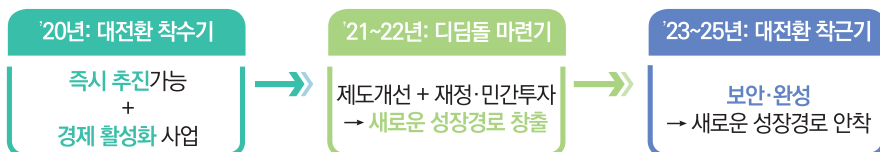
3대 분야 정책과제

정부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을 목표로 추진한다.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집중 투자하여 약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민간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신시장 창출을 도모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대 분야의 정책방향을 가지고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중심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를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한다.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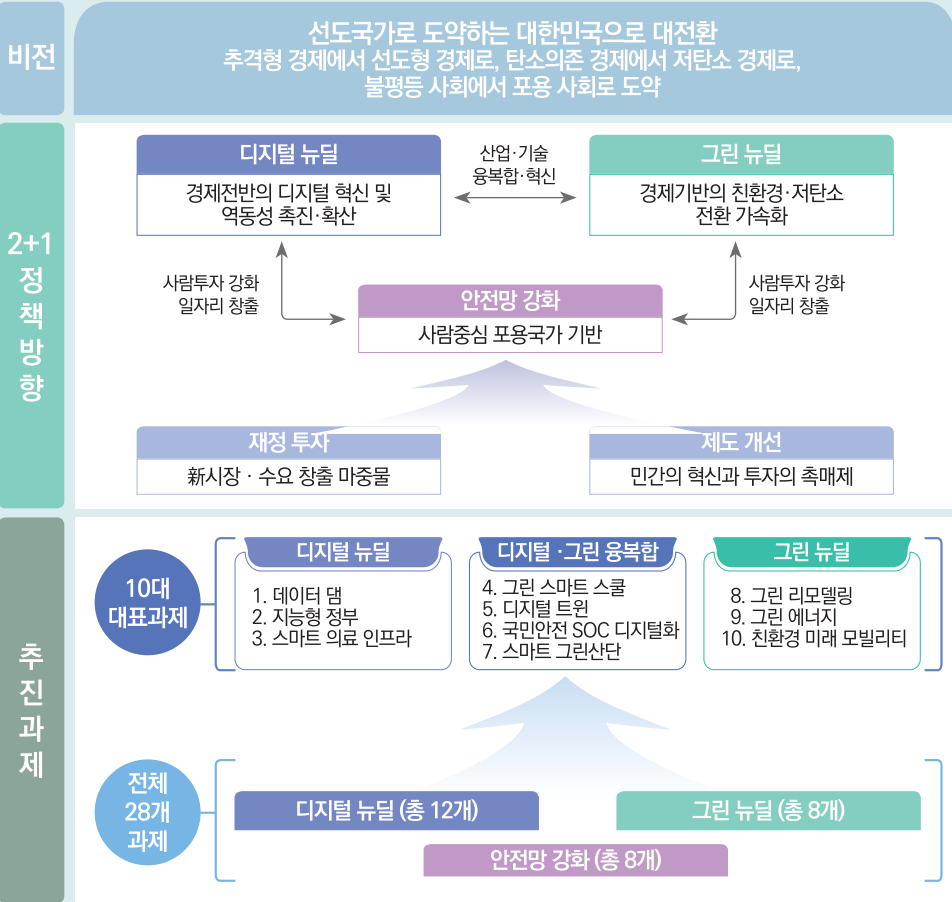
2020년은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 4.8조원을 반영하였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한 핵심 사업에 본격 투자한다.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22년까지 총사업비 68조원(국비 49조원) 투자, 일자리 89만개 창출

'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국비 114조원) 투자, 일자리 190만개 창출



📖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변화상

- D·N·A(Data·Network·AI)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로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 국가'
-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2) '20 ~ '25년 재정투자계획

한국판 뉴딜은 국비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4.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4.8조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에는 총 2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1년은 상징성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10대 대표과제(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 특히 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1-2 ▶ 부문별 세부내용

1) 디지털 뉴딜

📁 D.N.A. 생태계 강화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약 9천여명, 2,580개사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가공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6천개 보급,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200개사 지원, 6G 통신기술 개발, 모바일 운전면허증 보급도 추진한다.

📁 비대면 산업 육성

온라인 콘텐츠 활용 400개교에 교육용 스마트기기를 최대 8만대 지원하고, 평생교육 K-MOOC 강좌를 확충한다. 스마트 의료 확대를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1천개소, 닥터앤서 2.0 등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5.3만명 대상 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 SOC 디지털화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를 구축하고, 주요 도로에도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를 구축한다. 철도 62%에 IoT를 설치하고, 무인 차상검측시스템을 도입한다. 전국 도심지 3D 지형도 100% 구축, 85개市에 지하공간정보 3D통합지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트윈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배수시설 등 자동 원격제어 체계를 국가하천 57%에 도입한다. 아울러 첨단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개소 확충, 민간 스마트 물류센터 20개소 인증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2) 그린뉴딜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리모델링(그린리모델링)하고,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태양광·친환경 단열재 설치 및 교실 WiFi 구축(그린스마트 스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22년까지 총 7.7조원(국고 2.6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1.6만개를 창출한다.

도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을 통해 환경·ICT 기술 기반 맞춤형 환경개선을 지원(스마트 그린도시)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등 도심녹지 조성 및 국립공원과 도시공간 훼손지역·갯벌 등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추진하기 위하여 '22년까지 총 1.8조원(국고 1.2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6.6만개를 창출한다.

ICT·AI기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및 통합 물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상수도 노후관 및 정수장 등의 안전 관리 시설을 고도화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식수를 보급하기 위해 '22년까지 총 4.3조원(국고 2.3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2.6만개를 창출한다.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 호 대상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국 도서지역 디젤엔진 발전기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 발전시스템 구축 및 학교 주변 통학로 전선 지중화 등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해 '22년까지 총사업비 1.9조원(국고 1.1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1만개를 창출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주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을 구축하고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22년까지 총 4.5조원(국고 3.6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6만개를 창출한다.

또한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에 대하여 전기차,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차량의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 지원을 위하여 '22년까지 총 8.6조원(국고 5.6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5.2만개를 창출한다.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환경·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육성하고, 청정대기·생물소재·수열 등 녹색 융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며,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 및 친환경 제조공정 지원을 위하여 '22년까지 총 2.5조원(국고 2.0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2.5만개를 창출한다.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자원순환 촉진 연구개발(R&D)과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를 위한 융자, 펀드 등 녹색금융을 통해 녹색전환 인프라 기반을 강화하여 녹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2년까지 총 1.2조원(국고 1.2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0.7만개를 창출한다.

3)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예술인('20. 12. 10.)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21. 7. 1.) 고용보험 확대에 예술인 등에게 구직급여(64억원) 및 출산전후휴가급여(94억원)를 신규 지급한다. 산재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직종도 확대(9개 → 14개)하여 고용안전망을 확충한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고소득·고재산가 제외)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대상도 확대한다(10.4만 → 11.5만 가구). 아울러, 기초연금·장애인 연금의 최대 지급액(월 30만원) 지원 대상을 2021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여 노인·장애인의 소득확충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아플 때 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22년~)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15억원)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 40만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소득수준이 보다 높은 13만명에게는 상담, 훈련, 직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체험형, 인턴형 등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2.9만명)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17개교), 전직장려수당 및 사업화자금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창업·재기·성장을 지원한다.

“고용24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고용보험시스템(고용지원금), 워크넷(취업알선 및 상담), 직업훈련정보망(직업훈련),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외국인 고용관리) 등 개별 시스템을 통해 분산 지원하고 있던 고용서비스를 통합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능 고도화를 통해 AI 기반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시장 진입·전환도 지원한다.

청년층의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채용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장려금(14만명)을 지원하고,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학사, 석·박사)을 선발·교육하여 대학보유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전역량을 갖춘 맞춤형 인력으로 육성하여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700명).

신중년의 원활한 전직을 위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교육을 제공(49억원)하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디지털·그린 관련 직무·인원을 확대(243억원)하여 해당 분야로의 진입을 촉진한다. 고용위기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을 집중 지원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를 확대(5개소 → 8개소)하고, 경영위기에 놓인 중소기업 연구소의 R&D 활동 및 핵심연구인력 고용 유지를 위해 기본연구 과제를 지원(97억원)한다.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기술지도 및 원포인트 점검을 실시(361억원)하고, 안전보건지킴이 400명을 채용하여 건설·조선업 현장의 순찰활동을 강화하며, 화재·폭발 예방물품 지원도 확대(140억원)한다. 또한 분진·소음·냄새 등 유해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위험 제거를 위해 소공방 1,600곳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장년고용안정지원, 임금체계 개편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기업간 사례 공유 등도 병행(257억원)한다.

📁 사람투자

첨단산업과 AI 융합 분야에서 박사급 인력의 산학협력 연구 확대를 위해 KIURI 연구단을 추가 선정하여 지원(4개 → 6개)하고, AI대학원 지정을 확대한다. SW중심대학 및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권역별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충,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 재직자의 AI교육 등을 통해 AI·SW 핵심인재를 육성한다. 녹색융합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녹색 융합기술 분야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하고 환경산업 분야 재직자·실무자 교육을 확대한다.

기업, 대학 등을 활용하여 과제 해결형 훈련을 실시하는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K-Digital Training)(1,390억원)을 추진한다.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청년 구직자 중심으로 디지털 기초훈련(K-Digital Credit)(4만명)을 신설하고, 전국의 공동훈련센터 중 5개소를 지역 내 중소기업·청년 등에 디지털 훈련을 공유·개방하는 거점형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K-Digital Platform)으로 개편한다.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없는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200개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장소의 노후 공공 WiFi 1.8만개 교체 및 고성능 공공 WiFi 4.1만개 신규 설치 등 공공 WiFi에 대한 지역 주민의 통신 접근성을 강화한다. 주민센터·도서관 등을 ‘디지털 역량센터’로 지정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비율을 9% → 15%로 확대한다.

1-3 10대 대표과제 투자계획

10대 대표과제에 '20 ~ '25년 68.7조원 투자계획 ⇨ '21년 예산에 11.4조원 투자

1. 데이터 댐 ('20 ~ '25) 15.5조원 → ('21) 2.8조원

-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시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0.3조원) 및 의료기기안전 등 4.4만개 공공데이터 개방(0.2조원)
→ AI·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을 통한 신산업 육성·현안해결
-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 AI바우처 200개사 지원(560억원)
→ 1·2·3차 AI활용률 제고
- VR·AR·IoT 기반 전시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국공립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전국 93개소 구축(326억원)
→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확충, 박물관·미술관 이용 활성화

2. 지능형(AI) 정부 ('20 ~ '25) 9.7조원 → ('21) 0.7조원

- 전자소송, 국가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등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0.4조원)
→ 민원처리 등 공공서비스(등기, 보조금 등) 지능형·맞춤형 제공
-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 이력관리 등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133억원)
→ 전국민 생활서비스(식품 안전관리, 온라인 투표) 신뢰성·보안성 강화
- 5개 기관 5G 국가망 시범구축(115억원), 행정기관 클라우드 단계적 전환(570억원)
→ 언제·어디서나 신속한 스마트 업무환경, 실시간 대민서비스 구현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20 ~ '25) 0.1조원 → ('21) 0.06조원

-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 설치(누적 1,000개소, 500억원), 토종 AI의사인 닥터앤서의 분석기능 강화(8 → 20개 질환, 50억원)
→ 감염병 안전진료 환경 구축 및 AI 정밀검진 기반 마련

4. 그린 스마트 스쿨 ('20 ~ '25) 3.4조원 → ('21) 0.1조원

- 552개 초중고 노후건물(BTL 물량 포함 761동)을 에너지 절감 및 온·오프 융합형 교육환경으로 전환('25년까지 총 2,835동)
*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 Wifi, 전자칠판, 빔프로젝터 보급
→ 미래형(친환경 + 디지털) 교육환경 전국 초중고 확산

5. 디지털 트윈 ('20 ~ '25) 1.5조원 → ('21) 0.3조원

- '22년까지 국도의 100% 구현을 목표로 정밀도로지도 제작(160억원)
→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인프라 조기 완비
- 공동구, 상·하수관 등 15종 지하구조물 3D 지도 구축(406억원),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61억원)
→ 실시간 모니터링, 이상 상황(지하공동구·화재 등) 감지 정확도 향상

6.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20 ~ '25) 10.0조원 → ('21) 2.3조원

-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0.5조원), 철도 62%에 IoT 설치(0.3조원), 국가하천 57%에 원격수문제어장치 설치(0.2조원)
→ 안전사고 사전 예측·예방, 사고발생시 즉시대응 가능
-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68억원)
→ 신속·정확한 출입국 수속 지원 및 감염병 대응력 강화

7. 스마트 그린 산업 ('20 ~ '25) 3.2조원 → ('21) 0.7조원

- 7개 산업단지에 IC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40억원)
→ 에너지 사용 실시간 감시·예측·제어 등 산업 내 에너지 효율화
- 소규모 사업장(3,000개소)·시멘트 업종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0.5조원), 스마트 생태공장(30개소)·클린팩토리(300개소) 구축(506억원)
→ 미세먼지 최대배출원(38%)인 산업분야 미세먼지 방출량 저감

8. 그린 리모델링 ('20 ~ '25) 3.0조원 → ('21) 0.7조원

- 노후 공공건축물(1,085동), 공공임대주택(8.3만호) 대상 단열재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0.6조원)
→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및 주거환경 개선
-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역에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200억원, 40C-km)
→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등 공공 안전 증진, 도시 경관 개선

9. 그린에너지 ('20 ~ '25) 9.2조원 → ('21) 1.3조원

- 3G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 관련 기술·부품개발지원센터 구축 등 (145억원)
→ 최적입지 발굴을 통한 사업성 있는 해상풍력단지 조기 구축 유도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조·보증·융자확대(0.9조원)
→ 국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산 및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
- 수소생산 - 활용 순주기 원천 기술개발 및 수소도시 3곳 조성(770억원)
→ 수소산업의 조기 정착 기반, 수소경제 체험기회 확산

10.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20 ~ '25) 13.1조원 → ('21) 2.5조원

- 전기·수소차 11.6만대 보급(1.6조원), 노후 차량 3.5만대 친환경 전환 및 34만대 조기폐차(0.6조원)
→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
- 관공선·함정, 민간선박 26척의 친환경 전환 지원(0.1조원)
→ 황 배출량 감소 등으로 항만 대기질 개선

2.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2-1 ▶ 일자리 유지 및 창출

1) 고용유지 지원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351억원 → 13,728억원)한다. 지역 주도의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대상 광역·기초자치 단체 컨소시엄을 3개소 추가(5개소 → 8개소) 선정·지원한다.

2) 민간일자리 창출

코로나19 고용충격 진화를 위해 채용장려금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회복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청년들을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시 1인당 연간 900만원의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을 9만명 신규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에서 IT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도 5만명 신규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청년 신규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 10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1,2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지원(23만명)할 계획이며, 특히 I 유형은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10만명).

중장년을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을 확대하고 훈련생계비를 신설하여 실직자의 조기 재취업 및 안정적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이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450개 회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을 위해 창업·혁신 마케팅을 지원한다. 준비된 창업을 위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15개소로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도 1.5만개 확대하여 4.6만개를 지원한다. 스마트상점을 2.3만개 보급하고, 소상공인 스마트화 전용 용자 0.3조원을 신설하며, 비대면·온라인 판로지원도 확대하여 경제구조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적응을 지원한다.

3) 공공일자리

노인·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104.2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월 60시간 이상의 질 좋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0.8만개 확대하여 4.5만개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도 2.8만개 지원한다.

2-2 ▶ 소비활력 제고

1) 소비촉진

📁 4+4 바우처·쿠폰 지원

내수회복 효과가 큰 농수산물·문화·체육·관광분야에 2조원 규모의 소비창출을 위해 4대 바우처(농수산물·문화·체육·휴가)를 2020년 대비 대폭 확대하고, 2020년 추경예산으로 처음 지급된 4대 쿠폰도 확대하여 지원한다.

임산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친환경 농산물·우유급식 등을 제공하는 농산물 구매지원 대상을 2020년 64만명에서 2021년 106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2020년)

499억원 → (2021년) 773억원) 저소득층이 문화·체육·관광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단가를 2020년 9만원에서 2021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2020년 161만명에서 2021년 177만명으로 확대한다.((2020년) 1,032억원 → (2021년) 1,261억원)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강좌 수강을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을 2020년 5.9만명에서 2021년 7.2만명으로 확대하고, ((2020년) 277억원 → (2021년) 332억원) 중소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국내 관광시 휴가비를 매칭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지원대상도 2020년 8만명에서 2021년 10만명으로 확대한다.((2020년) 85억원 → (2021년) 110억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시 20%(최대 1만원)를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고,((2020년 추경) 620억원 → (2021년) 1,160억원) 2만원 이상 5회 외식시 1만원을 할인(환급)받을 수 있는 외식쿠폰을 지급한다.((2020년 추경) 343억원 → (2021년) 670억원)

온라인 숙박 예약·결제시 2~3만원 할인을 제공하는 숙박쿠폰을 지급하고,((2020년 추경) 290억원 → (2021년) 418억원)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 구매시 카드사를 통해 3만원을 환급하는 체육쿠폰을 지급한다.((2020년 추경) 120억원 → (2021년) 180억원)

[표 2-1] 4+4 바우처·쿠폰 지원사업 개요

(단위 : 만명, 억원)

구 분		지원내용	인원	예산
계			2,305	4,904
4대 바우처	농산물 구매지원	임산부·저소득층 등에 농산물·우유급식 등 제공	106	773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문화·체육·관광 활동비 연 10만원 지원	177	1,261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 유·청소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월 8만원 지원	7.2	332
	근로자휴가지원	국내관광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 10만원 매칭 지원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10	110

구 분		지원내용	인원	예산
4대 쿠폰	농수산물 쿠폰	농수산물 구매시 20% 할인(최대 1만원) 지원	1,140	1,160
	외식 쿠폰	2만원 이상 5회 외식시 1만원 모바일 쿠폰 제공	660	670
	숙박 쿠폰	온라인 숙박 예약시 2~3만원 할인쿠폰 제공	145	418
	체육 쿠폰	실내체육시설 월이용권 구매시 3만원 환급	60	180

2) 지역상권회복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발행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확대한다. ((2020년) 3조원 발행물량에 대해 721억원 지원 → (2021년) 15조원 발행물량에 대해 10,522억원 지원)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추가 할인판매 등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도 함께 추진한다.

📁 온누리상품권 할인·발행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이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3조원을 발행하여 전통시장·상점가의 매출 기반 확대를 유도한다. ((2020년) 2.5조원 → (2021년) 3조원) 특히 온누리상품권 발행분 중 2,000억원은 소상공인 간편 결제 가맹점에서 활용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으로 발행하여, 전통시장 내 간편 결제 시스템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 온누리상품권 발행(본예산 기준) : ('17) 0.8조원 → ('18) 1조원 → ('19) 2조원 → ('20) 2.5조원 → ('21) 3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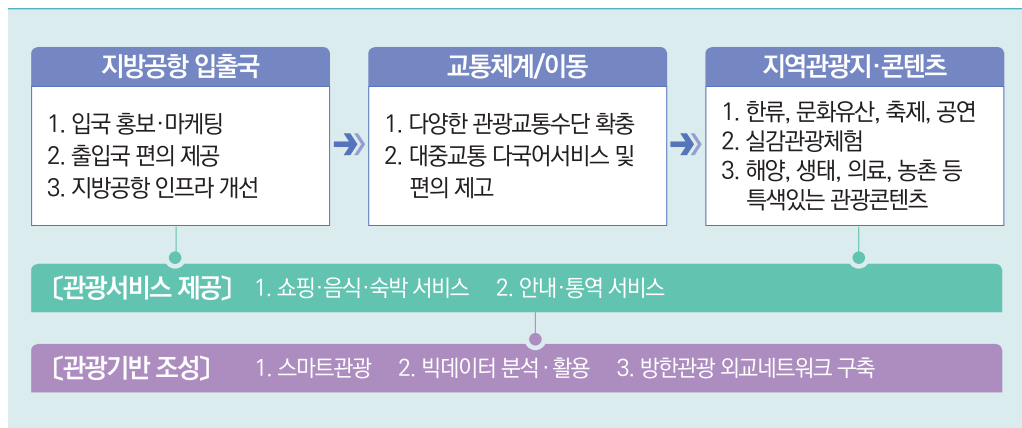
📁 전통시장 新마케팅 지원

구도심 상권을 자영업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전통시장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한 테마형 마케팅을 지원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7곳 신규 지원한다.((2020년) 누적 13곳 → (2021년) 20곳) 선정된 시장에 대해서는 상권 특색이 반영된 경관을 조성하고,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힐링(지역문화·예술)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3) 관광활성화

📁 코리아 토탈 관광패키지 지원

지방공항으로 입국하는 해외관광객에게 공항입국-숙소-관광지 등 동선에 따라 교통·숙박·볼거리 등을 빈틈없이 패키지로 제공하는 '코리아 토탈 관광패키지'를 2개 권역에 대해 시범 실시한다. ((2020년) 1,804억원 → (2021년) 2,354억원)



📁 디지털 관광콘텐츠 지원

국·공립박물관에 대한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을 지원하고, 국·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등의 스마트화를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왕릉 등 문화유산 관련 시설에 실감형콘텐츠 체험공간 조성을 확대한다. ((2020년) 267억원 → (2021년) 326억원)

📁 생태관광 지원

해외관광에 비해 1인당 탄소배출량이 적은 국립공원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조성한다. 생태문화교육플랫폼 사업(2021년, 300억원)으로 체험·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며, 다변화된 탐방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카라반, 케빈, 랫지 등 체류형 자연체험시설(2021년, 58억원)을 확충한다.

2-3 ▶ 민간·공공투자 확충

1) 민간투자 지원

📁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정책자금 72.5조원 공급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펀드, 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등에 2.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총 8.4조원 규모의 맞춤형 공공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 기업 설비투자, 경영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출자를 통해 융자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폭 늘리는 등 총 36.5조원의 융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비대면·언택트 관련 기술기업과 수출기업 등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신용·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에 1.4조원을 출연하여 총 27.6조원의 보증·보험도 공급한다.

[표 2-2] 민간투자 지원

(단위 : 조원)

	사 업	지원내용	자금공급	재정지원
	계		72.5	33.0
투자	모태펀드, 혁신모험펀드 등	• 창업초기 유망 벤처 집중투자 • 소재부품장비기업 투자 지원 등	8.4	2.1
	소 계		36.5	29.5
융자	산업·기업·수출입은행	• 산업구조고도화, 환경·안전투자 지원 등 • 초고위험국 인프라사업 지원 등	7.6	0.6
	중소기업진흥기금	• 中企 시설투자, 수출개척, 재도약 등 지원	5.4	5.4
	소상공인진흥기금	• 소상공인 경영안정, 스마트화 지원	3.7	3.7
	소 계		27.6	1.4
보증	신용·기술보증기금	• 소재·부품·장비, 비대면 분야 보증 공급 등	2.5	0.8
	무역보험기금	• 수출기업 해외수주 지원 등	5.4	0.4
	지역신용보증재단	• 지역신보 보증에 대한 재보증 지원	19.5	0.2

📁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금·인프라 지원 확대

벤처·창업기업 대상 마중물 투자 역할을 수행하는 모태펀드에 회수재원을 포함해 총 1.6조원을 출자하여 3.6조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소외된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버팀목펀드를 2천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유망분야로 떠오른 비대면·디지털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 바우처 프로그램을 신설(200팀, 300억원)한다. 그린 분야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창업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3년간 유망 스타트업 100개사를 선정하여, R&D, 사업화자금 등 총 30억원을 지원한다(30팀, 00억원). 유망 벤처창업기업들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그린 스타트업타운과 스타트업파크를 각각 2개소씩 구축할 계획이다.

📁 유턴기업·외투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확대

유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보조금을 대폭 한다((2020년) 550억원 → (2021년) 1,100억원). 투자와 함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 대상 고용창출 보조금도 늘린다((2020년) 11억원 → (2021년) 22억원). 국내 복귀기업 지정일(산업부 지정) 5년 이내인 기업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6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중견기업 30만원), 100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우수 해외 기업 대상 투자설명회(IR) ((2020년) 4회 → (2021년) 10회)와 유턴기업 원스톱 지원데스크((2020년) 6개소 → (2021년) 8개소)를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 투자 유치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해외의 관심이 높은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스탠포드 대학 연구센터와 해외대학 공동기숙사를 신설하여 인재유치에도 중점 투자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 기술원(GIST)와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사업((2020년) 411억원 → (2021년) 505억원) 등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R&D 지원도 확대한다.

2) SOC 등 공공투자 확충

☞ 교통

국가기간망 완성을 위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남부내륙철도, 안성 - 구리 고속도로 등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원한다. 특히 봉담 - 송산 고속도로, 부산 - 울산 복선전철 등 2021년 준공·개통 예정인 국가기간 도로·철도망을 중점 지원한다. 또한 3기 신도시 등 정주여건 확보,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진접선, 대구권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집중 투자한다.

☞ 물류

「스마트 물류 인증제」를 도입하고,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첨단시설 및 장비투자를 위한 약 5천억원의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스마트 물류센터 확충을 지원한다. 또한, 도심 공공 유희부지 등을 활용한 중소 물류업체 공동 물류시설을 확충(4개소)하여 도심 물류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물류 스타트업 등의 성장 및 육성을 지원한다.

☞ 도시·건축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 쇠퇴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120곳 내외를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중앙정부·공기업 주도로 실행력 높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12월 신규 도입한 新 재생수단(혁신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혁신적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스마트시티 사업(R&D 등)을 통해 검증된 혁신기술을 기존 도시에 1년 내에 빠르게 적용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챌린지 사업을 신설하여, 15곳(대 5곳, 중소 1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의 조성을 지원한다. AI·데이터허브,

사이버보안 플랫폼 등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종은 교통·교육 등, 부산은 에너지·환경 등 혁신 서비스 도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SOC 디지털화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까지 수도권 ITS를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일반수도 ITS 구축을 대폭 확대((2020년) 948km → (2021년) 2,200km)하여 돌발상황 감지, 교통 흐름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터널원격제어체계구축, 교량 및 비탈면 IoT 시스템 설치 등 SOC 디지털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철도 시설 유지보수의 경우도 인력위주 방식에서 자동검측 방식 체제로 조기전환하기 위해 차량검측시스템 구축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2020년) 1대, 120억원 → (2021년) 3대, 276억원)

📁 기반시설 안전투자

대규모 사고 예방, 국민편의 증진 등을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일반수도 상 포장보수, 비탈면 정비, 배수시설 개선 등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도로 유지보수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2020년) 6,262억원 → (2021년) 6,644억원).

또한, 철도의 기존 구조물, 전기설비 등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량을 위해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2020년) 10,081억원 → (2021년) 11,695억원),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2020년) 1,398억원 → (2021년) 1,462억원)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하천 유지보수((2020년) 1,808억원 → (2021년) 4,129억원), 스마트 지방상수도((2020년) 3,816억원 → (2021년) 4,526억원)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4 ▶ 수출활력 제고

1) 무역 투자 · 금융

📁 해외 투자 및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확대

국내 기업의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참여, 초고위험국 대상 인프라 사업 참여시 대출, 해외 건설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 등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무역금융을 연내 5.8조원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공급규모 내에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수출기업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공급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2) 수출 마케팅

📁 수출 중소중견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한 수출 바우처 확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수혜 받을 수 있는 수출 바우처를 확대한다. 특히,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소비재 · 서비스 기업 전용 바우처를 전년대비 50% 확대하여 수출 유망분야에 대한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 해외 진출을 위한 온라인 채널 활성화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 소비지들에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외 유망 상거래 플랫폼(Amazon, Qoo10 등) 입점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3,800개社) 대상 기업은 라이선스 발급, 인증 비용과 마케팅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IT 기술을 활용한 수출 지원 등 비대면 · 온라인 채널 활성화를 통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한다.

3) 수출 다변화

📁 수출 품목 및 수출 시장 다변화 촉진

국가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주력 품목 외에도 K-푸드 · 의료 · 뷰티 등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마케팅, 인프라, 패키지 지원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남방·신북방 등 시장 다변화를 통해 판매처를 확대하기 위해 무역투자 진흥공사의 비즈니스 협력센터를 3개소(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추가 설치한다.

📁 비관세 장벽 극복 지원

관세가 없더라도 규격, 인증 문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규격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역기술장벽 애로해소지원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2-5 ▶ 국가균형발전 본격투자

2021년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정부는 지역발전 투자,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지방재정 보강 등 ‘국가균형발전 4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1) 지역발전 투자

지역 발전을 위해 약 11.8조원에 해당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혁신도시, 생활 SOC 등 3대 핵심과제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 13건,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 등 6건의 총 19개 SOC를 설계·착공하였으며 4개의 R&D 실증·사업화를 지원한다.

지역의 혁신성장 지원방안으로 이전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지역특화산업과 접목시키는 투자사업 10대 과제를 추진(485억원)하고, 혁신도시 맞춤형 가족·어린이 특화 생활 SOC 10개소를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 지원(450억원)한다.

생활 SOC란 보육·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편익을 증진

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누린다는 비전하에 정부는 생활 SOC에 대한 투자를 2020년 10.5조원에서 2021년 11.0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역간 생활 SOC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생활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왔으며 2021년에는 안전한 삶터 구축에 0.2조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0.3조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의 의존적 경제 성장이 아닌 자생적 경제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 4,766억원의 투자를 실시한다. 지역인재, 지역특화산업, 문화·관광인프라 총 세 가지 분야를 입체적으로 지원한다.

📁 「지역인재-지역 내 기업 채용」 선순환 구조 구축을 지원

지역의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지속 투자한다.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 산업분야를 선정, 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 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2021년은 전년 대비 한 개 플랫폼을 확대하여 4개 플랫폼을 지원하게 된다(1,710억원).

지역특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녹색융합 클러스터 등 3대 특화산업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2,489억원).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해소와 지역 성장이 연계된 획기적인 제도로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주도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여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정책으로, 27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R&D과제·실증장비·사업화 패키지를 지원한다(1,653억원). 또한 R&D 성과물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사업화·매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12개의 강소특구에 600억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5대 클러스터인 청정대기, 수열, 생물소재,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에 대한 사업 착수도 시행한다(236억원).

쉽과 활력이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 문화·관광도시 지원을 17개로 확대하고 도시브랜드·관광콘텐츠 개발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567억원).

3)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 ‘젊은 층의 농어촌 유입 → 정착 → 지역 활성화’ 등 정착단계별 핵심 프로젝트 2.3조원 지원

농촌지역 활력을 위한 젊은 층의 인력 유입을 위해 지역 디지털 청년일자리 7천명을 지원하고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영농 진입을 위해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금을 지급한다. 이로써 지역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를 유입·양성하고 청년자립마을, 귀농귀촌 패키지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공동터전을 조성하고 빈집을 개량한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동을 창출할 수 있는 청년자립마을 12개소를 추가 구축한다. 또한 ‘농촌 6개월 미리 살아보기’ 등 80개 시군에서 귀농귀촌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귀농 기반을 마련한다.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을 실시하는 어촌뉴딜을 250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노후 주거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쇠퇴한 도심의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도 0.8조원으로 증액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 다양화를 위한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4) 지방재정 보강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 감소를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장기미집행 공원의 차질 없는 보상·매입 지원을 위해 지방채 인수를 지원한다 (2.1조원).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6,134억원), 지역사회활성화기반 조성(430억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자율계정사업을 2020년 2.4조원에서 2021년 2.5조원으로 확대한다.

3. 미래 성장동력 확보

3-1 R&D · 인재 · 금융 · 조달 등 혁신생태계 조성

1) R&D 투자

📁 투자확대

2021년 R&D 투자 규모는 27.4조원으로 2020년 24.2조원 대비 13.1% 증가한 규모이다.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할 핵심 및 원천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어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편성하였다.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BIG3 (시스템반도체·미래자동차·바이오헬스), 기초원천 R&D, 혁신인재양성 등 5대 분야에 주요 R&D 투자의 70%를 집중하였다.

[표 2-3] 5대 분야별 R&D 투자 내용

지원분야	주요 지원내용	예산
한국판 뉴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탄소에너지 등 녹색산업 기술 R&D 투자 전산업 디지털화를 위한 AI 등 기술 고도화 	2.0조원
소재·부품·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對日 100대 핵심전략품목 조기 공급 안정 238개 품목을 추가하여 對세계 공급망 관리 철저 	2.2조원
BIG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자율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상용화, 신약개발 등 바이오헬스 투자 강화 	2.4조원
기초원천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기초과학연구원(IBS) 지원, 우주·원자력 핵심기술 등 투자 확대 	7.3조원
혁신인재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SI대학원 지원 강화,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등 산업별 특화과정 신설 등 	0.3조원

☞ 효율화

R&D 성과 제고를 위해 부처 간 상호보완적 역할과 책임에 기반한 多부처 공동 기획의 융합 R&D를 확대하여 신시장·신기술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한다((2020년) 1.2조원 → (2021년) 1.8조원, 50.5% 증가). 한편,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임무와 주요역할(Role & Responsibility, R&R)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을 수행하여 연구생산성을 제고한다. 이는 R&D 투자의 효율성과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연구과제 중심 예산지원 제도인 PBS(Project Based System, 1996년~)의 성과 제고에 한계가 있어 수정, 보완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서, 기관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국가·사회를 위한 출연(연)의 미래지향적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핵심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2) 혁신인재

☞ 혁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고등인재 양성

신기술 분야의 혁신·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를 신설하여 지원한다. 신기술 분야별 대학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등 체계적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2021년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로 8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분야별로 104억원을 지원한다.

☞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실전형 전문인재 양성

이노베이션 스퀘어((2020년) 159억원 → (2021년) 326억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2020년) 257억원 → (2021년) 350억원) 등 산학연 교육훈련 자원 공유를 통해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실전형 전문인재 6.3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3) 혁신금융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신산업, 벤처창업 등을 지원하는 투자·보증·융자 등 혁신모형 자금 6.9조원(재정 1.9조원)을 공급한다.

[표 2-4] 혁신금융

(단위 : 조원)

사 업		지원내용	자금공급	재정지원
계			6.9	1.9
투자	혁신투자펀드	• 혁신기업·프로젝트 지원 • 비대면·바이오·그린 분야 중소기업·벤처 지원	5.0	0.9
	소계		1.0	0.1
보증	엔택트 보증	• 비대면 기술개발·활용 중소기업 지원	0.6	0.05
	녹색기술 보증	• 신재생에너지 대형 프로젝트 지원	0.4	0.05
	소계		0.9	0.9
융자	친환경설비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비 구축지원	0.4	0.3
	신재생에너지융자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원	0.6	0.6

4) 혁신조달

우수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및 시장 테스트 기회 확대를 지원한다. 정부는 혁신 신기술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고(2020년 99억원 → 2021년 530억원), 혁신 의료기기 테스트 지원 등 민간의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표 2-5] R&D·인재·금융·조달 등 혁신생태계 조성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비 고
R&D 투자	242,195	274,005	
- 한국판 뉴딜	9,741	19,558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884억원, 신규)
- 소재·부품·장비	17,206	21,545	• 소재부품기술개발(6,027 → 8,866억원)
- BIG3	16,903	23,526	•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900 → 1,839억원)
- 기초원천 R&D	69,065	73,389	• 개인기초연구(12,408 → 14,770억원)
- 인재양성	2,565	2,878	•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인력(60억원, 신규)
혁신인재	3,934	5,509	

구 분	2020년	2021년	비 고
- 고등인재 양성	-	832	•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832억원, 신규)
- 실전인재 양성	3,934	4,677	• 4대 권역별 이노베이션스퀘어(159 → 326억)
혁신금융	3,020	19,201	• 투자 9,400억원, 보증 980억원, 융자 8,821억원
혁신조달	134	586	• 공공부문 시범구매 확대 등(99 → 530억원)

3-2 ▶ D.N.A., BIG3 등 미래산업 육성

1) D.N.A.(Data, Network, AI)

📁 Data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 강화를 위해 민간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개방(1,863억원)하고, 新서비스 창출에 필수적인 AI학습용 데이터를 구축(2,925억원)한다.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자원을 디지털DB로 전환(536억원)하고, 언제 어디서나 연계·검색·활용하는 디지털집현전을 구축(6억원)한다.

📁 Network

5G 조기 확산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5G기반 융합서비스 및 실감콘텐츠 개발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 등 공공분야에 5G 융합서비스를 선도 적용(400억원)하고, 문화·예술·방송 등 실감형 콘텐츠산업을 육성(626억원)한다. 이외에도 언제 어디서나 근무가 가능한 스마트 오피스 구현을 위해 5G 국가망을 단계적으로 구축(115억원)한다.

📁 AI

1차·2차·3차 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 개발(140억원)과 의료·건축 분야 등 산업별 특화 AI기술 개발(673억원)을 지원한다. 산업

AI활용률 제고를 위한 AI바우처를 200개사에 지원(560억원)하며, 의료·치안 등 7대 분야의 AI+X 융합프로젝트(523억원)를 추진한다.

2)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 시스템반도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는 핵심기술 확보,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2020년) 891억원 → (2021년) 1,223억원)과 팹리스 육성(신규 60억원)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파워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신뢰성평가 인증센터를 구축((2020년) 16.5억원 → (2021년) 19.5억원)하고, 시스템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육성((2020년) 36억원 → (2021년) 72억원)을 확대한다.

📁 미래자동차

미래차 분야는 2027년 완전자율차(LV4) 상용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업(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 신규 884억원)을 강화한다. 또한 2025년까지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수준의 주행거리((2세대) 400km → (3세대) 600km)를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 등 친환경차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7.3만대 → 10.1만대) 및 수소자동차(1만대 → 1.5만대)의 확산을 위해 보급 등도 지원한다.

📁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 분야의 고도화를 위해 신약 개발을 쉼주기적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협업 R&D(국가신약개발사업 : 신규 452억원, 총사업비 2.2조원(2021년~2030년))를 신설한다. 또한, 바이오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신규 31억원)을 신설하고,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을 확대((2020년) 1만명 → (2021년) 1.5만명)한다.

한편,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백신·치료제 개발에 중점 투자(후보물질 발굴 등 전임상 지원 214억원,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1,314억원 등) 하고, 방역물품·기기 고도화 등

방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발생주기가 점차 짧아지며 인류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신속한 진단,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속가능한 국가보건의료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3-3 ▶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육성

1) 태양광·풍력

☞ 태양광 확산을 위한 금융·R&D 등 지원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저리 용자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주택·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집약한 기업 공동 활용 연구센터 1개소를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다.

☞ 풍력 발전 입지 확보 및 인프라·R&D 지원

양질의 풍력을 통해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공공 주도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적합한 입지 발굴을 위한 권역별 타당성 조사를 확대한다.(계속 3개소, 신규 1개소) 아울러, 해상풍력 기업 지원을 위한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를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한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2) 수소산업

☞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소규모 수소 생산기지 9개소, 중대규모 수소 생산기지 1개소 총 10개소의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출하센터 설치를 통해 생산 인프라를 구축한다. 아울러, 수소의 생산·저장 고도화를 위해 생산·저장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R&D)을 함께 확대한다.

☞ 수소 유통 기반 확대

수소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소 거래소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을 병행한다. 아울러, 원활한 유통을 위한 튜브트레일러 16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 수소 활용도 강화

수소 에너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수소 충전소를 56개소 구축하고(일반 26기, 버스 21기, 집중형 9기), 수소자동차 보급도 총 1.5만대로 확대한다. 활용 인프라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수소 충전소에 가격차 지원을 통해 운영을 보조하고, 수소도시 3개소를 조성하여 활용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3) 에너지효율

☞ 전력수요 관리 효율화

전력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후 아파트 138만호를 대상으로 스마트 전력량계(AMI)를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건물 800동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을 진단하고 DB를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4) 녹색기업

☞ 녹색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환경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기술 보유 기업을 선정하고, 성장 단계별로 사업화·R&D 등 맞춤형으로 신규 지원한다. 또한, 탄소 발생 저감에 기여하는 Net-zero 기업 대상 용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3-4 ▶ 주력 제조·서비스산업 역동성 강화

1)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가 시급한 고부가가치 對日 100대 품목을 對세계 338개로 확대(2.1→2.6조원) 하고 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펀드·보증 등 1.6조원 규모의 자금(출자·출연 0.34→0.39조원)을 공급한다.

2) 산업단지

📁 스마트 산업 등을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 지원

기 지정된 7개 스마트 산업에 대하여 통합관제센터(신설 3개소), 물류플랫폼(신설 1개소), 공정혁신시물레이션센터(신규 2개소) 등 산업 내 자원관리를 위한 스마트 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5개 산업대개조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2020년) 148억원 → (2021년) 350억원)과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화(2021년 120억원)도 신규로 지원한다.

📁 경제자유구역 고도화

광주와 울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누적 9개소)하고, 진입도로, 용수공급 등 필수기반시설 구축(2020년) 383억원 → (2021년) 684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2.0 도약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운영도 신규로 지원한다(30억원).

3) 중소기업 스마트화

📁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 고도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 공장 보급목표를 확대((2020년) 5,500개 → (2021년) 6,000개)하는 한편, 지원체계를 고도화 위주로 재편한다. 3레벨 이상의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시에는 지원단가를 1.5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고, 4레벨 이상은 4억원을 지원한다. 보급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가치사슬 내 기업군을 대상으로 상호 통합·연계된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착수할 계획이다(3개소, 12억원).

📁 스마트 공장 관련 금융·R&D 지원 확대

스마트 공장 보급목표 확대와 연계하여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융자((2020년) 5,000억원 → (2021년) 6,000억원)와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2020년) 300억원 → (2021년) 320억원)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AI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R&D 지원도 확대한다((2020년) 592억원 → (2021년) 756억원).

4) 유망 서비스업 육성

📁 문화·관광분야 온라인·비대면화 선도분야 육성

AI, 실감콘텐츠 등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관광기업을 선정하고 판로개척, 네트워킹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15 → 51억원). 온라인 K-Pop 공연(265억원, 신규), 국립박물관 온라인 전시(53억원, 신규) 온라인 스포츠코칭 서비스(39억원, 신규) 등 지원을 통해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미중물 역할을 제공한다.

📁 헬스케어 분야

건강관리·의료·돌봄 등 헬스케어 분야에서 비대면·온라인화를 촉진하기 위해 건강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9만명까지 확대 보급하고(27.5억원), 감염병 온라인·비대면 진료 등 유망 ICT 新의료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스마트병원 모델의 개발 투자(30억원)를 강화한다. 아울러,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맞춰 돌봄로봇 개발 투자도 확대(22 → 28.6억원)한다.

4. 포용적 고용 · 사회안전망 공고화

4-1 ▶ 4대 사회안전망 확충

1) 생계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가구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약 15.7만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고소득 · 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산출 기반 통계를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공식 소득통계이자 중위소득 수준이 더 높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여 생계급여의 수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독거노인 등 1·2인 가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구균등화지수를 조정하여 급여 수준을 인상한다.

📁 취약계층 냉 · 난방비 부담 경감

하 · 동절기 냉난방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어컨 등 냉 · 난방 물품을 지원하고, 이 대상을 3.3만 가구로 전년보다 1만 가구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도 67.3만 가구에서 70.2만 가구로 수혜 대상이 늘어날 예정이다.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20.9월)에 따라 한부모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저소득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25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청년 한부모(만25~34세)의 양육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청년 한부모의 만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 만 6세 ~ 17세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2) 의료

☞ 저소득층 건강·의료보장 지원 확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현실화 및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에 포함되었던 정신요법료는 건강보험과 같이 행위별 수가로 전환(2021년 296억원)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500명 목표, 15억원)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퇴원 후 재가 복귀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의료, 돌봄, 식사 등 필요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9.0 → 9.5조원)한다. 아플 때 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도입을 위한 시범사업('22년~)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15억원)하고, 흉부(유방)·심장초음파, 척추디스크(추간판탈출증) 등 기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에 대응하고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를 법정비율인 20%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1.2 → 1.5조원)한다.

3) 주거

☞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1년 공적임대주택을 20.9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2020년 16.4조원에서 2021년 22.2조원(전년대비 +5.8조원, +35.4%)으로 대폭 확대하였다(기금변경 2.56조원 포함).

특히, 2021년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기존의 복잡한 건설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다양한 소득 및 연령계층이 어울려 거주할 수 있는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한다.(0.4만호) 이중 0.1만호는 중형 임대주택(60 ~ 85㎡)으로, 3~4인 가구도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전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 지원을 위해 공공 전세주택 0.9만호, 신축 매입약정 2.1만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0.6만호 등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7.5만호를 공급한다. 2022년까지 11.4만호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계층별로 보면 청년층에게는 도심 내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5.4만호(전년대비 +0.9만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게는 국민임대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등 임대주택 총 6.0만호(전년대비 +0.8만호)를 공급한다. 다자녀 가구에 0.4만호를 신규 공급하고, 고령 가구에는 총 1.2만호(전년대비 +0.2만호)를, 기타 저소득층 등에게는 7.9만호(전년대비 +0.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주거급여 기준임대로 인상 및 청년 분리지급 제도 시행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2021년 기준임대료를 급지에 따라 3.2 ~ 16.7% 인상한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5% 이하) 중 20대 미혼 청년이 자립하여 취업, 구직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4) 교육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20년 고2·3 → '21년 수학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확대 시행('19년 2학기 고3 → '20년 고2·3 → '21년 수학년)을 위해 국고 0.9조원을 지원(총 124만명, 학생당 年 160만원)한다.

📁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확대

대학생의 근로경험 확대 및 생활비 지원을 위해 교내·교외 근로 장학금 수혜자를 전년대비 1.1만명 확대한다(12만명, 0.4조원). 또한, 선취업·후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기업에 취업중인 후학습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Ⅱ 장학금도 확대한다.(456억원)

📁 원격교육확산

미래교육환경을 대비한 비대면 원격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의 필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온라인 원격교육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준별 교육콘텐츠를 개발(343억원)하고, 개인별 학습수준 진단을 위한 수준별 진단문항을 개발(83억원)한다. 또한,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바우처 지원을 확대(8,000명 → 15,000명)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15억원)·장애유형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70억원)·장애대학생 대상 보조기기 지급(15억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학습지원을 강화한다.

4-2 ▶ 취약계층 보호 강화

1) 장애인

📁 소득지원 : 장애인연금 30만원 지급을 수급자 전체로 확대

근로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인상(25 → 30만원)을 종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모든 수급자로 확대 적용한다. 그 결과 2021년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37.7만명 모두 장애인연금 인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 활동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지원대상을

'20년 9.1만명에서 '21년 9.9만명으로 8천명 확대한다.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 단가를 13,500원에서 14,020원으로 3.9% 인상하고, 특히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단가를 추가적으로 인상(14,500원→15,520원)하여, 최중증장애인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65세 도래시 장기요양 전환으로 서비스 시간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2021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 근로지원 : 장애인 근로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

미취업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및 소득확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2,500개 추가적으로 지원한다(2.2만개 → 2.5만개). 아울러, 저임금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출퇴근비용 월 5만원(교통비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신설(6.3천명)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신체적 장애요인을 보완하여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을 확대(5천명 → 8천명)한다.

2) 농어민

☞ 농가소득

대농 지급비중이 높았던 역진적 직불금 지급체계를 중소농 소득안정에 기여하도록 '20년 개편한 공익증진직불금(2조 3,610억원)을 '21년에도 차질 없이 지속 지원한다. 또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고령농 대상 연금지급 규모를 확대(13천명, 1,479억원 → 14천명, 1,809억원)하고, 농업인 고령화로 소득여건이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건강·보험료 지원도 강화(3,330억원 → 3,362억원)한다. 한편,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부채상환을 위한 농지매입도 확대(1,400ha, 2,800억원 → 1,419ha, 2,979억원)한다.

📁 어가소득

'20년 농업분야 공익직불금 도입에 이어 '21년에는 어가소득 안정과 어업의 공익성을 함께 제고하기 위해 수산 공익직불제를 도입한다. 2톤 이하 소규모 어선 어업인에는 연 150만원 소득을 보장하는 등 총 5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농어가 경영자금 금융지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의 신용보증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정부 출연금 1,300억원을 지원한다.

3) 보훈

📁 2021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3.0% 인상

2021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을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3.0% 공통 인상하였다. 이에 더하여 전투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을 2.3만원에서 9만원으로 약 4배 인상한다. 또한,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32만원에서 34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월 38 ~ 40만원에서 40 ~ 42만원으로 인상한다.

📁 국립묘지 확충 등 국가유공자의 사망시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와 연천에 국립묘지를 새로이 조성하고(2021년 280억원), 대전현충원 등 기존 6개 국립묘지의 만장 대비를 위해 안장시설 확충사업(2021년 220억원)을 추진한다. 또한, 국립묘지 외 전국 산재 합동묘역중 신청을 받아 국립묘지에 준하는 '국가관리묘역' 지정 관리 사업(2021년 17억원)과 기초수급자중 생계급여자만 지원했던 장례지원 서비스를 기초수급자 전체로 확대(2021년 17억원) 추진한다.

📁 급성기-재활-요양을 연계한 의료환경 개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근접 진료 지원을 위해 위탁병원을 추가 지정(2021년 14억원)하고, 노후화된 보훈병원의 시설 환경 개선사업(2021년 103억원)과 재활센터 건립사업(2021년 173억원)을 추진하여 진료 환경을 개선하며,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입소하여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권보훈요양원 건립 사업(2021년 232억원)을 추진한다.

4) 다문화 · 정보취약계층

📁 다문화 가족 ·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위기다문화가족 등을 관리하는 사례관리사를 확대((2020년) 174명 → (2021년) 208명)하고, 통·번역서비스 지원인력을 확충((2020년) 282명 → (2021년) 312명)한다. 아울러, 2021년에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16개 지역에 공동화합공간을 처음으로 조성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37억원을 투입하여 도서벽지 등 574개소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공공 Wi-Fi 1.5만개소 확충을 위해 6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소외계층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1,000개소의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할 계획이다(678억원).

4-3 ▶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

📁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5만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에 대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64억원),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지급(94억원) 한다. '20.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된 5개 직종 종사자에게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한다.

📁 고용사각지대 해소

기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을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에서 일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와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한다. 일경험이 필요한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체험형·인턴형 2가지 방식으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 근로자 생활안정

실직에 대비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수혜자 규모를 확대 (137만명 → 164만명)한다. 임금체불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직자 체당금 신설, 지급절차 간소화(7개월 → 2개월) 등 체당금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0.4조원→0.7조원)를 추진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확대, 고시임금 인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개선 등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급여 지급 규모도 확대(5.9조원 → 6.5조원)한다.

☞ 필수노동자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기사·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5.9만명) 하고, 고혈압·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자 등 과로사 고위험군 1.5만명을 사전 선별하여 심층진단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근골격계 질환 위험이 높은 사업장 4,600개소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및 보호장비를 지원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51억원). 전국 근로자건강센터(센터 및 분소 44개소)에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및 장비를 확충(30억원)하여 필수노동자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저소득 재가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등 방문돌봄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9만명, 1인당 50만원)한다.

☞ 직업훈련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첨단소재, 바이오, 클라우드 등 6대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초-중-고급 수준을 단계별로 연계한 다부처 협업 인력양성트랙을 신설(13만명)한다. 제품의 설계부터 완성까지 공정 쏘단계 통합교육이 가능한 스마트팩토리형 인프라를 전국 모든 캠퍼스(35개)에 조기 구축·외부 개방하여 직업훈련, 기업 시제품 제작, 고교 진로체험 등을 지원하고, 온라인훈련 콘텐츠, 학습 관리시스템(LMS) 등 민간훈련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비대면 인프라를 확충(73억원 → 409억원)한다.

4-4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1) 저출산 극복

📁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질 제고 지원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는 전년 대비 4.0%, 유아교육비는 전년대비 2만원 인상(24 → 26만원)하고,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휴게시간 보장 및 보육공백 방지 등을 위해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을 확대(5.5 → 6.2천명)한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을 600개소 확대하여 공공보육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소규모 어린이집(20인이상 ~ 50인 미만)의 보존식 보관 의무 신설에 따라 어린이집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및 보존용기를 지원(신규, 8,592개소)한다.

📁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가정양육 시 발생하는 긴급·일시적인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200개반 추가 설치·운영할 계획이다(690 → 890개반). 추가 지정은 각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통해 실시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시간제 보육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부모들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돌봄 품앗이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적으로 64개소 확충한다. 또한 양육공백이 있는 맞벌이, 한부모, 장애가구 등에게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시간 한도를 120시간 확대((2020년) 연 720시간 → (2021년) 연 840시간)하고, 아이돌보미를 8천명 수준으로 양성한다. 또한 특히 돌봄지원이 절실한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장애가구에 대하여 정부지원비율을 영아, 미취학 아동의 경우 90%, 취학 아동의 경우 80%로 각각 5%p씩 추가 인상한다.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초등 돌봄 확대

초등생 학부모의 방과 후·방학 중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시작된 온종일

돌봄사업을 2021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수준과 무관히 모든 아동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 700개소,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초등교실을 활용한 돌봄을 '21년부터 신규 추진하여 최대 1.5만명(750실)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 주거지원 확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신혼·고령가구의 주거사다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층에게는 도심 내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5.4만호(전년대비 +0.9만호)를 공급한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5% 이하) 중 20대 미혼 청년이 자립하여 취업, 구직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신혼부부에게는 국민임대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등 임대주택 총 6.0만호(전년대비 +0.8만호)를 공급하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사업의 신혼부부 전용 상품을 통해 대출한도 상향,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지속 제공한다.

고령가구를 위해서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10 → 20개소) 서비스를 강화(여가·식사 + 돌봄 등)하는 한편, 매입임대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대 거주기간을 폐지하여 고령자가 오랜 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맞벌이 근로자 일·가정양립 지원

맞벌이 근로자의 육아 지원 확대 등 일·가정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등의 활용을 허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을 강화한다. 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가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보다 더 지급한 임금과 인사·노무관리에 사용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워라벨 일자리장려금(0.8만명 → 1만명), 유연근무제 및 육아휴직 등 부여 시 지급하는 사업주 간접노무비(2.3만명 → 3.1만명) 등을 확대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는 사업주에 지급하는 1인당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사업장당 첫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한다.

2) 고령화 대응

📁 소득지원 :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확대

은퇴 후 소득공백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노인일 자리를 통해 소득기반 확충을 지원한다. 우선,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종전 소득하위 40%에서 수급대상 전체로 확대한다. 그 결과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597만명 모두 기초연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아울러, 노인일자리도 74만개에서 80만개로 지속 확충하여, 어르신들의 소득보충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지원한다.

📁 돌봄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및 돌봄고도화 추진

고령인구 증가 및 가족돌봄의 약화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50만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비대면 돌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IoT·AI 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 비대면 건강 관리, 노인·장애인 집단거주시설 디지털돌봄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실버산업 : 고령친화 R&D 및 유망기업 지원 확대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치매의 원인규명 및 예측·진단, 예방·치료를 위한 R&D를 확대(60억원 → 157억원)한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고령친화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친화제품 신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리빙랩을 운영하고, 유망기업의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바우처(20개사, 1개사당 최대 3천만원)를 신설한다.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① 구직부터 취·창업까지 일자리 쏠단계 지원

민간부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채용 시 연간 900만원씩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을 IT 분야에 채용 시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를 최대 190만원, 6개월 지원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 5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청년특례를 마련하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청년 13만명에게는 상담·훈련·취업 알선을 단계별로 맞춤형 제공한다(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를 신설하여 전공에 관계없이 대학생에게 신기술분야 교육을 제공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전형 전문인재 6.3만명 양성을 지원한다. 또한 신진예술가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2,700명 양성 등 차세대 청년 문화·예술인력 육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한편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창업 기업 중 민간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TIPS 프로그램을 400개 신규 팀에 대해 지원하고, 전통문화분야 창업도 100팀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창업 전단계에 걸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② 주거·금융·자산형성 등 생활안정 지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5.4만호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5%)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 3.1만 가구에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청년 대상 전세 및 월세대출을 2.5조원으로 확대하고, 공실 상가 등의 주거용도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 용자를 신설한다.

대학생·청년들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소액 금융을 1,330억원 공급한다. 1인당 연 600만원씩,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10만명에 대해 2년간 최대 1,200만원 적립을 지원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위해 8,000명에게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③ 교육사다리, 청년맞춤형 복지 등 지원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직업계고 졸업생 3.1만명을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경우 연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고졸 재직자 중 대학에 진학한 학생 2만명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또한, 우수 학생 양성을 위해 교외근로 장학금 6만명, 인문100년 장학금 3천명, 꿈사다리 장학금 3천명 등 장학금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 1일 급식비를 8,790원으로 인상하고, 병사 군 단체 실손보험을 새로 도입한다. 월 1만원 이발비도 신규 지원한다.

5.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5-1 ▶ K-방역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 지원

1) (고도화) 순주기적 방역 시스템 보강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예방 - 진단 - 치료’의 전주기적 방역시스템 보강을 중점 지원한다.

개인보호구(600만개), 항바이러스제(1,295만명분) 등 비축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노인 대상 폐렴구균 접종 시행기관 확대(보건소 → 보건소·민간의료기관) 등 국가예방접종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기, 인플루엔자 등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원활한 진료가 어려워짐에 따라,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2배 확대한다(500 → 1000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동선 분리, 음압 설비 등 감염을 차단하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개인보호구 착용, 소독, 환기 등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진료 환경을 제공한다.

지방의료원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동 및 긴급 음압병실 설치 등을 중점 지원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의료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착공(3개소), 권역(12 → 17개소)·지역(28 → 35개소) 책임의료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2) (산업화) 국내 치료제·백신개발 등 방역·바이오산업 육성

국내 코로나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제약사 등의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발굴, 효능평가와 임상단계별 맞춤 지원을 추진(1,846억원)한다. 또한, 의료 빅데이터, AI 활용 신의료기술 등 의료현장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데이터 중심병원(7개소, 94억원)을 지정하고,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30억원), 의료정보 표준화·교류를 지원(79억원)한다. 아울러, 민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바이오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형 NIBRT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30억원)하고, '24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NIBRT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실습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융합형의사과학자 양성도 강화(59억원)한다.

3) (세계화) K-방역 글로벌 선도 지원

K-방역 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방역제품의 국제인허가(예: 유럽 CE-MDR), 국제표준·인증 획득과 해외 조달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고 해외 감염병 병원 건립, 글로벌 백신개발 투자(100억원) 등 해외진출과 연계한 공적 원조를 확대 (3,377억원)한다.

[한류 확산(K+X) 지원]

최근 BTS·기생충 등 한류 재확산 분위기 속에서 K-방역, 무관중 스포츠 중계 등 신속하고 창의적인 대응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기류를 적극 활용하여 K-문화, K-방역, K-건축 등 한국의 우수한 대표 정책을 통해 한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① K-문화: 신한류 인프라·콘텐츠 확산

우리 문화와 경제를 견인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한류 인프라·콘텐츠 확산을 지원한다. 재외문화원을 통해 한국문화 관련 종합문화제를 개최(80억원, 신규)하고, 세종학당을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332 → 390억원)하는 등 한류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654 → 875억원)

대형 전통공연(신규, 16억원), 한류문학(10 → 28억원) 등 우수 한류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하고, K-Pop·K-드라마 활용 한류관광 프로그램 지원(62 → 90억원)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속 지원한다.(295 → 356억원). 실감콘텐츠 해외박물관 및 체험관 조성(40 → 30억원), 재외문화원 외벽 미디어아트(신규, 74억원) 설치 등 한류 홍보·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강화한다(188 → 573억원).

② K-방역: 방역선도국가 위상 확립과 해외진출 촉진

우수한 방역성과와 연계하여 K-방역모델 및 의료기기·생활용품 등 관련 제품의 국제표준·인증 획득, 국제수준의 성능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성능시험 인프라 구축 등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2 → 63억원)한다. 또한, 해외 감염병 병원 등 인프라 건설, 글로벌 백신개발 투자(100억원) 등 보건의료 ODA도 방역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대폭 확대한다(2,488 → 3,377억원).

③ **브랜드K: 세계로 진출하는 국가브랜드 육성**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브랜드K’로 선정(200개)하고 홍보·유통 등 집중 관리하여 실제 수출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한다.(4 → 62억원)

또한 유망 상품에 대한 글로벌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온·오프라인 플랫폼 활용 수출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확대한다.(984 → 1,103억원) 화장품, 식품 등 주력상품에 대한 인증·컨설팅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도 구축한다.(129 → 179억원)

④ **K-건축·뷰티·농식품**

해외 저명인사들이 재외공관 방문시 우리 건축기술과 역량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신축시 전통건축 양식·디자인을 접목(6개소)하고, 친환경 기술을 도입한 그린 스마트 리모델링(3개소)을 지원한다.(3 → 40억원) 화장품 등 K-뷰티 수출 확대를 위해 피부유전체 분석센터를 구축하고 체험·홍보관을 설립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56 → 91억원) 스마트팜 수출패키지(교육 등) 지원 확대(2 → 3개국) 및 한식 글로벌화를 위한 외국어 표준 메뉴판 보급(6,000개소, 신규) 등 K-농식품 확산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28 → 72억원)

5-2 ▶ 국민생명 및 인권 보호

1)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 교통안전 강화시설 확충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 (2020년) 1,768억원 → (2021년) 2,511억원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 '19.12월)을 계기로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등 설치를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완료할 계획이다.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계획(개소) : (2020년) 3,700 → (2021년) 8,227 → (2022년) 8,228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율(%) : <당초> (2020년) 18.4 → (2021년) 38.0 → (2022년) 43.6
 ⇨ <수정> (2020년) 18.4 → (2021년) 40.8 → (2022년) 40.8

☞ 산업재해 축소를 위한 위험기계·위험공정 개선

2022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50% 감축을 목표로, 중소 사업장(50인 미만) 대상으로 구조적 안전성이 미흡한 위험기계의 교체(4,911대), 뿌리산업 위험공정 개선(921개소) 비용을 보조하고 산재예방시설 구비·교체를 위한 저리 융자를 확대(2,000억원)한다.

※ 미인증 3대 위험기계(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전면교체(3,634개소, 신규),
 뿌리산업(주조업, 소성가공업, 표면처리업) 위험공정 개선(921개소, 신규)

또한, 산업단지, 건설현장, 소규모 제조공장 등 산재위험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불시 순찰 및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패트롤카를 확대 운용(108대 → 404대)한다.

☞ 코로나 블루 대비 자살 등 정신건강 관리 강화

코로나 블루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진, 자가격리자 등 심리상담 강화 및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인력 465명을 신규 확충(2020년 1,577명 → 2021년 2,042명, +116억원)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시행 지역을 7개 시도에서 12개 시도로 확대(+139억원)한다. 아울러,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상담, 감염병 심리물품 제공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2) 수해예방

☞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풍수해 관리시스템 구축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저수지 범람, 사면 붕괴 등의 풍수해 대비 IoT기반 조기경보시스템 510개소('20 ~ '22년, 연간 17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하수관거, 하천정비, 펌프장 설치 등 개별사업 단위의 재해예방 사업은 지역 중심의 생활권 종합정비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재해예방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신규, 개소) : (2019년) 5 → (2020년) 15 → (2021년) 15

안전진단 D등급 미만의 수리시설 개보수도 지속 추진하여 홍수·가뭄 등에 대비한 용수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 수리시설 개보수 : (2020년) 5,381억원 → (2021년) 6,365억원

☞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 강화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댐을 지속 확충하고(2020년 296개소 → 2021년 390개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에 대한 기초조사 대폭 확대(2020년 0.5만 개소 → 2021년 1.8만 개소) 및 실태조사(신규 900개소)를 실시하여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디지털 기반 국가 하천 및 댐 관리 추진

국가하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2020년 3,415억원 → 2021년 3,523억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20년~'22년, 3,580개소) 국가하천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댐 붕괴 예방, 홍수조절 능력 강화 등을 위해 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3년까지 국가댐 37개소에 디지털 트윈·드론 등 첨단기술 기반 실시간 안전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댐 안전성 강화사업(1단계) : 14개 용수전용댐('14년~'24년, 총사업비 2,803억원)
 댐 안전성 강화사업(2단계) : 15개 다목적댐('21년~'27년, 총사업비 6,013억원)

3) 인권보호

📁 아동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치료를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71 → 81개), 학대 피해아동 쉼터(76 → 91개)을 확충하고, 심리치료, 사례관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 2-6] 아동 인권보호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비 고
아동학대피해자보호	226	288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71 → 81개소) 및 심리치료 전담지정기관(17개) 운영 등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59	90	•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대(76 → 91개소) 등

📁 여성

여가부·교육부·과기부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계별 대응을 강화한다.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홍보 등을 실시하고, 유포 차단을 위한 유해미디어 차단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단속·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불법촬영 탐지장비 구입 등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 7개소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수사단계 인권보호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휴대용 DNA 분석기(+3대), 지문진공 현출장비(+1대) 등 첨단 과학수사 장비를 확충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전용 조사실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챗봇” 및 AI를 활용한 상담, 진술 조서 작성 등 비대면 시스템 구축도 적극 추진한다.

[표 2-7] 수사단계 인권보호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비 고
휴대용 DNA 분석기 등 경찰 과학수사장비	157	215	• 휴대용 DNA 분석기, 훼손지문 분석장비 등
전용조사실확충(검찰, 경찰)	168	268	• 여성 - 아동 전용조사실 확충(검찰) 및 사무 - 조사공간 분리(경찰)

5-3 ▶ 국민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실시

1) 깨끗한 공기(산업, 수송, 생활, 감시)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 미세먼지 다량 배출시설 대상(시멘트 업종 등)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 융자지원('21년 10개소, 3,000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21년 3천개소, 1,500억원)도 지원한다.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21년 34만대), 저감장치(DPF) 부착('21년 9만대), 건설기계 엔진교체('21년 7천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21년 2.8만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지원('21년 2만대) 및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시스템 운영('21년 80억원) 등 수송 분야 저감투자도 확대한다.

☞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저소득층 대상 저녹스 보일러 지원금 상향('21년 50 → 60만원, 5만대), 도로청소차 보급('21년 164대),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21년 750개소)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굴뚝 원격감시('21년 19억원), 드론·이동측정차량, 첨단 감시장비('21년 173억원) 및 민간 불법감시단('21년 1,000명) 등 사업장 감시도 대폭 강화한다.

2) 맑은 물(상수도, 수질개선)

☞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관리

전국 상수도에 ICT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광역('21년 189억원), 지방('21년 4,676억원)을 지원하고, 노후 지방상수관망·정수장 정비(4,531억원)도 계속 지원한다. 아울러 유충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방정수장 위생관리 사업을 신규 추진('21년 412억원)한다.

☞ 하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하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본류·지류에 대한 수질측정망을 고도화('21년 신규 60억원)하고,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구조물 개선 시범사업('21년 115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3) 녹색공간

☞ 도시적응력 강화

도시의 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스마트 그린도시를 신규 조성('21년 25개소 526억원)하고, 기업·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21년 249억원) 등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 국토 대청소

재활용품 비축사업('21년 259억원), 에너지융복합 폐기물처리시설('21년 23억원) 등 도시의 생활폐기물, 농촌 가축분뇨, 해양쓰레기 등 생활환경 저해요소에 대한 처리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5-4 ▶ 스마트 강군 기반 구축과 군 사기 진작

1) 국방비 52.8조원 투자

📁 국방개혁 2.0 추진 여건 보장 및 무기체계 투자 확대

2021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52.8조원으로 2020년 50.2조원 대비 5.4% 증가한 규모이다. 전방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 중이며,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전력운영비 규모는 35.8조원으로 2020년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전투역량 강화, 군 사기진작, 비전통적 위협 대응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방위력개선비 규모는 17조원으로 2020년 16.7조원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핵·WMD 대응전력 등 첨단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국방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2) 국방전력 고도화

📁 핵·WMD 대응

적의 공격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표적타격', 적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적의 공격에 즉각 대응하여 적의 지휘·통제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압도적 대응' 전력 등 핵·WMD 대응을 위한 무기체계 전력화를 적극 지원한다.(2020년 6.2조원 → 2021년 5.8조원)

📁 국방 R&D 투자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군 정찰위성 개발 등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 연구개발과 국방 핵심기술개발 등을 통한 방산기술 국산화 및 우리 군의 미래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국방 R&D 예산을 적극 투자한다.(2020년 3.9조원 → 2021년 4.3조원)

3) 전투역량 강화

📁 국방인력구조 정예화, 과학화 훈련 체계 지속 구축 등 전투역량 강화

첨단장비 운영에 적합한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위해 정원구조를 개선하고 병력 감소 자원을 간부·군무원으로 대체하기 위해 전투부대는 장교·부사관 중심으로 보강하여 전투력을 강화하고, 비전투부대는 민간인력 활용으로 전문성을 확보한다.(부사관·군무원 7,682명 증원)

또한, 중·소대급 포병 사격훈련용 마일즈 장비를 지속 도입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실제 전장 환경 체험이 가능한 AR·VR 기반 훈련체계를 확대하여 복무기간 단축에도 장병들이 실질적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화 훈련체계를 지속 구축해 나간다. (538억원) 전투능력 향상을 위해 개인전투체계(위리어플랫폼) 보급을 확대하고 (1,209억원), 주둔지 및 해안 경계력 강화를 위한 CCTV 설치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1,968억원)

4) 군 사기진작

📁 병 봉급·급식·피복 등 기본 복지 대폭 개선

2017년 최저임금의 45% 수준으로 병 봉급을 인상하였으며(병장기준, 월 60.9만원), 급식비 단가 3.5% 인상(일 8,493원 → 8,790원), 피복 단가 인상 등 튼튼한 안보태세의 기초가 되는 장병 기본 복지를 확대하고 장병 자기개발 비용을 지속 지원(연 10만원) 하며,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병사 군 단체보험을 도입한다.(실손 보험료의 80% 국가지원) 또한, 현역 및 상근예비역 병사에게 이발비를 지급(월 1만원)하고, 간부숙소를 개선(3,764 → 4,890실)하여 간부의 복무여건을 향상시킨다.

5) 비전통적 위협 대응

📁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 능력 보강

비축용 마스크 구매, 전 부대 대상 방제용역 실시, 의무장비·물자 추가 도입 등 감염병 대응 능력을 보강한다. (1,152억원) 아울러, 대테러·대화생방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장비·물자 도입 예산도 반영하였다. (544억원)

5-5 ▶ 전략적 외교·협력 강화

1) 전략적 소통외교

📁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한 전략적 양자·다자외교 강화

미국 신 행정부 출범 대비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미간 새로운 협력분야 발굴을 위한 대미 아웃리치를 확대하는 한편(신규, 5.6억원), 한-중 교류·협력을 전면 복원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28 → 31억원).

신남방정책 강화를 위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본격 추진하며, 아세안 대상으로 우리 보건·방역 경험을 공유하고(신규 3.5억원),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 메콩 국가들과 문화·관광·교육 등 분야에서 인적교류 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것이다. 나아가, 한-메콩 협력기금 확대(36억원 → 48억원)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신설(12억원)을 통해 아세안과의 다층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신북방정책과 관련하여 외교부 유라시아1과(러시아 전담) 신설('20.2월)에 따라 '대러 전략외교 강화' 사업을 신규 편성(3.9억원)하여, 체계적·전략적인 대러 외교정책 추진 역량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또한 외교 다변화의 일환으로 외교부에 아프리카2과 신설('20.8월) 및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를 통해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다자외교 강화를 위해 2021년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고, 그간 평화안보·보건안보 등 다자 외교 분야에서 강화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바탕으로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신규, 74억원) 및 글로벌 신안보 포럼(신규, 9.5억원)의 성공적 국내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를 주도할 것이다. 또한 한-UN 건축비확산회의 20주년 행사 및 新한미원자력협정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하여 원자력·비확산 분야 양자·다자 외교를 강화할 예정이다(20 → 25억원).

📁 현지 시민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다면적 공공외교 지원

코로나19로 촉진된 비대면 소통 확대라는 대외환경 변화를 감안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반 대중의 정치적 영향력이 빠르게 증대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각국의 여론주도층을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등 다면적 공공외교 활동 전개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803 → 844억원)

2) 한류·비대면 외교

📁 재외공관·문화원을 한류콘텐츠 세계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재외공관에 국내 우수한 녹색 기술을 적용하여 우리 기술이 해외의 친환경 녹색건축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고, 공관 내 그린 기업 홍보관 마련 및 해외 시장진출 상담 등을 통해 국내 그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의 모범정책 사례·발전경험 등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배포

2020년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교훈을 바탕으로 디지털·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확산하고 글로벌 캠페인을 추진한 경험을 토대로 2021년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사업(신규 64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문화·지식·정책 관련 디지털 콘텐츠를 지속 제작하여 전 세계에 전파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와 공감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3) 융합 ODA

📁 신남·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유·무상 패키지 지원 등 융합 ODA 지원 확대

ODA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부처가 협업·연계하는 ODA 융합프로그램(예: 기재부는 다리건설 + KOICA는 교량 안전관리 역량강화)을 적극 지원(2,733 → 3,256억원)하여 부처 간 분절화를 해소하고, ODA 사업 효과성을 제고한다. 인프라 건설을 통한 물적 기반 구축과 이에 대한 후속관리까지 패키지로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원조 효과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남·북방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 해당 지역 중심으로 융합 ODA를 적극 발굴한다.(1,769 → 2,277억원)

4) 남북협력

📁 평화·안보·생명공동체 기반 조성

남북관계 교착 상황 속에서도 평화경제 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하여, 2021년에는 우리 측이 자체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경원선 철도 복원공사 재개(475억원), DMZ 평화통일문화공간을 조성(48억원) 등 핵심 사업을 단계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등을 남북이 공동으로 극복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생명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보건·의료 및 농축산·산림 분야 등 인도적 지원 및 민생협력 사업을 확대한다.(4,511 → 5,131억원)

03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단위 : 조원, %)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 (B-A)	%
총지출	512.3	558.0	45.7	8.9
1. 보건·복지·고용	180.5	199.7	19.2	10.6
2. 교육 (교부금 제외)	72.6 (17.2)	71.2 (18.0)	△1.4 (0.8)	△2.0 (4.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4	53.2	△2.2	△3.9
3. 문화·체육·관광	8.0	8.5	0.5	5.8
4. 환경	9.0	10.6	1.6	17.8
5. R&D	24.2	27.4	3.2	13.1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3.7	28.6	4.9	20.8
7. SOC	23.2	26.5	3.3	14.1
8. 농림·수산·식품	21.5	22.7	1.2	5.3
9. 국 방	50.2	52.8	2.6	5.4
10. 외교·통일	5.5	5.7	0.2	3.5
11. 공공질서·안전	20.8	22.3	1.5	7.0
12. 일반·지방행정 (교부세 제외)	79.0 (26.8)	84.7 (32.9)	5.7 (6.1)	7.2 (22.8)
※ 지방교부세	52.2	51.8	△0.4	△0.9

제 3 장

분야별 투자계획

01. 보건·복지·고용 분야
02. 교육 분야
03. 문화·체육·관광 분야
04. R&D 분야
0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06. SOC 분야
07. 농림·수산·식품 분야
08. 환경 분야
09. 국방 분야
10. 외교·통일 분야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1

01 보건·복지·고용 분야



1-1 재정지원 방향

2021년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99.7조원 수준으로 총지출 대비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인 35.8%에 이른다. 사회·고용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포용국가 실현을 적극 뒷받침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저출산·고령화 대비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K-방역, 건강보험 등 관련 투자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축소 및 저소득층 생계비부담 경감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기반 통계 변경(가계동향조사 →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가구균등화지수 조정을 통해 생계급여 수준을 강화한다. 금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총 15.7만 가구가 신규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 중심 지원에서 교육활동지원비 통합 지원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차상위 청년(만15~39세)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10만원 저축 시 1:3 매칭)하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하여 확대 지원(8천 → 13.4천명)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투자 및 노인 소득·돌봄지원 확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출산, 보육, 노인돌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20. 12월) 하고 동 계획에 따라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0 ~ 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는 전년대비 4.0% 인상하였고, 보조·대체교사 확대(5.5 → 6.2천명) 등 통해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600개소·다함께 돌봄센터 450개소 및 초등학교실활용 지자체-학교 협업돌봄 750실을 확충하여 공공 돌봄 인프라를

확대한다.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를 확대(74→80만명)하고, 기초연금은 수급자 전체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원인원을 5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및 소외아동·위기청소년 지원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65세 도래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장애인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차상위 계층에서 전체 수급자로 장애인연금 인상(25→30만원) 대상을 확대한다. 한편, 학대아동 보호·지원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 신설하고(76→91개소), 쉼터퇴소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한다(3년간 월 30만원).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 지원 및 코로나 대응 강화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 강화, 공공의료의 핵심 인프라·인력투자, 해외백신 도입 등 K-방역분야에 전년보다 약 1.6조원 증액된 2.8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호흡기 전담클리닉 2배 확대(500→1,000개소, 500억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4개소 건립(459억원), 권역(12→17개소)·지역(28→35개소) 책임의료기관 확대(105억원)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고,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1,846억 원) 등 K-방역 산업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백신개발 투자(100억 원) 등 보건의료 ODA확대 지원(3,377억원)으로 K-방역 세계화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을 조기 종식을 위해 코로나 해외백신 도입에 9,000억원(예비비)을 추가 지원한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국민건강 보장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9.0→9.5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1.2→1.5조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흉부(유방)·심장초음파, 척추디스크(추간판 탈출증) 등 기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 취약계층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15억원) 착수와 함께, 국립암센터에 Day-care센터, 희귀암치료 병상 등 설치(78억 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권역재활병원 지원 강화

(136억원)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블루' 상황에서 국민 정신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인력, 사례관리 등을 확대 지원(976 → 1,281억원)한다.

보건·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바이오-ICT융합 촉진을 위해 데이터중심병원(5개소, 94억원)·스마트병원(30억원)을 구축하고 줄기세포 연구·임상 지원 등 목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15억원)를 지원한다. 또한, 제약 스마트팩토리(7억원), 미래기술연구동(5.4억원), 바이오헬스 기술상용화 센터(10억원)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인프라 확충으로 바이오신약 연구 개발·사업화 지원, 임상연구 등을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형 NIBRT(30억원), 융합형의과학자(59억원), 제약특성화대학원(15억원) 등 바이오분야 핵심 인재를 적극 양성한다.

[표 1-1]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률 ((b-a)/a)
합 계	1,805,430	1,997,427	10.6
기초생활보장	139,659	153,243	9.7
취약계층지원	39,603	45,132	14.0
사회복지일반	14,215	14,749	3.8
아동·보육	85,127	85,582	0.5
여성·가족·청소년	10,950	12,001	9.6
노인	166,323	188,723	13.5
주택	297,314	335,184	12.7
공적연금	554,491	600,408	8.3
보훈	57,345	58,866	2.7
건강보험	101,956	107,688	5.6
보건의료	27,694	33,194	19.9
식품의약품안전	5,568	6,086	9.3
고용	222,759	258,402	16.0
노동	77,133	92,595	20.0
고용노동일반	5,291	5,574	5.3

1-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 부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교육급여 제도개선 및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 (2020년) 13조 9,659억원 → (2021년) 15조 3,243억원 (9.7% 증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2021년에 약 15.7만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수혜를 받도록 지원한다.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자산·고소득자 제외).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MRI(척추질환), 초음파(심장·혈관) 등을 급여화하고 면역항암제 등 사회적·임상적 요구가 큰 의약품에 대한 급여기준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도 개선하여 정신요법료는 행위별 수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환자에 의료, 돌봄, 식사 및 이동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도 지속 실시한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준임대료를 급지에 따라 3.2 ~ 16.7% 인상한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5% 이하) 중 20대 미혼 청년이 자립하여 취합, 구직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하며, 초등학생은 286천원(+38.8%), 중학생은 376천원(+27.5%), 고등학생은 448천원(+6.1%)으로 전년대비 평균 24% 인상한다.

아울러, 차상위 청년(만15~39세)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10만원 저축시 1:3 매칭)하는 청년저축계좌 지원인원을 확대(8천 → 13.4천명)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자립지원도 강화한다.

【표 1-2】 기초생활보장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139,659	153,243	9.7	
생계급여	43,379	46,079	6.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의료급여	70,038	76,805	9.7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의료보장성강화 등
주거급여	16,305	19,879	21.9	기준임대료 인상 및 20대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설
교육급여	1,016	1,030	1.4	교육활동지원비 통합 지원및 초·중·고 평균 24% 인상
자활사업	5,808	6,200	6.7	급여단가 인상(1.5%), 내일키움일자리 확대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1,006	913	△9.2	가입수요 고려, 일부 통장 지원규모 조정

취약계층지원 부문

장애인 3대 애로요인(생계·일상생활·일자리) 완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일자리 등 근로참여 기회를 집중 지원한다.

☞ (2020년) 3조 9,603억원 → (2021년) 4조 5,132억원 (14.0% 증가)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에 필수적인 소득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2021년부터 전체수급자로 확대한다. 아울러, 미취업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도 2천 5백개 추가 확대하여 근로가 가능한 장애인에게 소득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2020년 91천명에서 2021년 99천명으로 8천명 확대하고, 활동지원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단가를 13,500원에서 14,020원으로 3.9% 인상한다. 아울러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돌봄시간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낮 시간 활동수요가 높은 성인발달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주간활동 서비스는 4,000명에서 9,000명으로,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방과후 활동 서비스는 7,000명에서 10,000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게도 주간활동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별도 배치하는 특화 서비스도 2021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표 1-3] 취약계층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39,603	45,132	14.0	
장애인연금	7,862	8,291	5.5	37.7만명에 대해 월 30만원 지급
장애인일자리 지원	1,415	1,596	12.8	일자리 22.4 → 24.9천개
장애인활동지원	13,057	15,070	15.4	대상 9.1 → 9.9만명 단가 13,500 → 14,020원
발달장애인지원	816	1,524	86.8	〈주간활동〉 대상 : 4천명 → 9천명 단가 : 13,500 → 14,020원 시간 : 월 100시간 〈방과후활동〉 대상 : 7천명 → 10천명 단가 : 13,350 → 14,020원 시간 : 월 44시간

사회복지일반 부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 시범사업을 지속 수행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확대 운영하는 등 사회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2020년) 1조 4,215억원 → (2021년) 1조 4,749억원 (3.8% 증가)

노인, 장애인 등 대상 유형과 관계 없이 종합적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16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중 8개를 선정하여 융합형(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 주거·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등을 지자체에서 시범운영하여 지자체별·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 중('19. 6월 ~ '21. 12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은 '20년 11개 시·도에서 '21년 14개 시·도로 확대 운영한다.

※ 긴급돌봄, 안전점검 및 컨설팅 등 민간제공기관 지원, 종합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기여

지역의 부족한 복지를 확충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전년 대비 +138억원).

※ 지자체가 직접 돌봄·재활·상담 등의 지역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 기획 및 운영

아울러,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화재·폭력 등 각종 상해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한다(14 → 24만명).

※ 사회복지종사자의 각종 상해사고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표 1-4] 사회복지일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14,215	14,749	3.8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178	182	2.4	8개 지자체 대상 융합형 선도사업 실시 등
사회서비스원	121	147	22.2	중앙지원단 1개소 사회서비스원 14개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115	3,253	4.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수혜자 증가(증 2만명) 산모신생아 및 가사간병사업 단가 인상(1.5%)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14	24	71.4	상해보험 가입지원 인원 10만 명 확대 (14만명→24만명, 71.4%)

아동·보육 부문

영유아 보육의 질 제고, 위기아동 보호 및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아동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 (2020년) 8조 5,127억원 → (2021년) 8조 5,582억원 (0.5% 증가)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여 16시 이후 어린이집 연장반을 운영·지원 중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장보육료 및 보조·대체교사 (5.5 → 6.2천명)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보조·연장교사에 대한 사용자부담금도 30% 지속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종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위해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를 전년 대비 4.0% 인상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600개소 확대하여 공공보육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어린이집(20인 이상~50인

미만)의 보존식 보관 의무 신설에 따라 어린이집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및 보존용기를 지원(신규, 8,592개소)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동을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하고 111개 시군구에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을 확대한다.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심리치료 등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76 → 91개소) 및 아동보호전문기관(71 → 81개소)을 신규 설치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인건비를 4.9% 인상한다.

초등생 학부모의 방과 후·방학 중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온종일 돌봄사업을 2021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수준과 무관히 모든 아동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 700개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를 확대하여 설치하고,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하는 지자체-학교 협업돌봄 모델도 750실 추가 확충한다.

[표 1-5] 아동·보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85,127	85,582	0.5	
아동수당	22,834	22,195	△2.8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다함께 돌봄 사업	262	413	57.3	• '21년 다함께 돌봄 센터 450개소 확충 • 초등교실활용 지자체 - 학교 협업모델 750개 설치
영유아보육료지원	34,162	33,952	△0.6	• '20년 대비 4% 인상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4,242	16,141	10.1	• 인건비 단가 0.9% 인상 • 보조·대체교사 지원 5.5 → 6.2천명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률 ((b-a)/a)	비 고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2,654	4,313	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고도화(+14억원) 지자체 상담조사시설 신규 설치 지원 * 111시군구 × 20백만원 × 50%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226	287	2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 '20년 71 → '21년 81개소 상담 · 심리치료 전담 인력 확충(+51명)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59	87	4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확대 * '20년 76 → '21년 91개소

여성 · 가족 · 청소년 부문

여성경제활동 지원, 여성폭력 방지,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청소년활동 및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지원한다.

☞ (2020년) 1조 950억원 → (2021년) 1조 2,001억원 (9.6% 증가)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새일여성인턴 인원을 1,600명 확대하고, 인턴 종료 후 6개월간 고용유지시 기업에게 고용장려금 8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 간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화형 지역양성평등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역사 속 여성의 삶과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 7개소를 운영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구축, 교육콘텐츠 제작 등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전담지원센터를 17개소로 확대한다.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월 5~10만원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와 통번역지원사를 확충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가족교육·상담·돌봄 등의 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27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64개소 추가 설치한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장애가구 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율을 소득 '가형'(중위 75% 이하) 온종일돌봄 지원율을 80 → 85%, 소득 '나형'(중위 120% 이하) 시간제(미취학) 지원율을 55 → 60%로 인상하고, 시간제돌봄 정부지원시간한도를 120시간 확대한다. 또한 저소득층(중위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가구에 대하여 정부지원율을 영아, 미취학 아동의 경우 90%, 취학 아동의 경우 80%로 각각 5%p씩 추가 인상한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청소년 쉼터에 입·퇴소한 청소년들의 원활한 학업·자립 활동을 위해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1인당 매월 30만원씩 3년간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위기청소년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교육부 등)과 연계를 강화하는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표 1-6】 여성·가족·청소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률 ((b-a)/a)	주요내용
부문 계	10,950	12,001	9.6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585	702	19.9	새일인턴확대(6,177→7,777명), 고용장려금(80만원) 신설 등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544	3,067	20.5	생계급여수급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등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률 ((b-a)/a)	주요내용
아이돌봄지원	2,440	2,515	3.1	정부지원시간한도 +120시간, 저소득 한부모·장애가구 5%p 정부지원을 인상
여성가족부 정보화 추진	38	123	225.5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마련

노인 부문

노인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반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활력있는 노후를 지원하며, 돌봄·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보강하고 지원인원을 확대한다.

☞ (2020년) 16조 6,323억원 → (2021년) 18조 8,723억원 (13.5% 증가)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원을 확대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2020년 561만명에서 2021년 597만명으로 늘어나며,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자는 '20년 소득하위 40%에서 '21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전체인 소득하위 70%로 확대된다.

노년기 사회참여를 통한 소득확충 및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도 확대한다. 2020년 74만개 일자리를 2021년에는 6만개 늘려 80만개로 확대하여, 국정 과제상 목표 80만개(~'22)를 조기에 달성한다. 아울러 종전 노인일자리 신청대상이 아니었던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저소득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급속한 고령화 및 가족돌봄 약화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5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자의 신체·정신적 기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기 돌봄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장기요양 진입을 억제하여, 노인 의료비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256개 시군구 보건소별로 구축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상담·등록, 조기검진, 치매쉼터, 가족지원, 사례관리 등 치매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등 치매국가 책임제 이행을 차질없이 지원한다. 2020년에는 21만명의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했으나 2021년에는 25만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치매 관련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원격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치매검진, 예방과 인지강화프로그램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양질의 치매전담형 공립노인 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신축비를 계속 지원하고 민간 일반시설도 치매전담형 전환도 계속 지원한다.

[표 1-기] 노인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률 ((b-a)/a)	주요내용
부문 계	166,323	188,723	13.5	
기초연금	131,765	149,635	14.6	561 → 597만명 월 30만원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2,015	13,151	9.5	74 → 80만개(+6만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728	4,183	12.2	지원대상 50만명
치매관리체계구축	2,068	2,047	△10.7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노인건강관리	252	282	11.9	21 → 25만명(4만명 증)
노인요양시설 확충	694	669	△3.6	공립시설 10개소 추가 확충

주택 부문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지속 지원한다.

☞ (2020년) 29조 7,314억원 → (2021년) 33조 5,184억원 (12.7% 증가)

2021년에는 생애주기별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신혼·고령가구의 주거사다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20.9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2020년 16.4조원에서 2021년 22.2조원(전년대비 약 5.8조원, +35.4%)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기존의 복잡한 건설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다양한 소득 및 연령계층이 어울려 거주할 수 있는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한다.(0.4만호) 이 중 0.1만호는 중형 임대주택(60~85㎡)으로, 3~4인가구도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전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 지원을 위해 공공 전세주택 0.9만호, 신축 매입약정 2.1만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0.6만호 등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7.5만호를 공급한다. 2022년까지 11.4만호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9.9조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주택저당증권(MBS)·은행채권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필요시 저리의 정책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예산을 0.3조원 확보하였다.

수혜계층별로 보면 청년층에게는 도심내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임대주택 5.4만호(전년대비 +0.9만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에게는 국민임대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등 임대주택 총 6.0만호(전년대비 +0.8만호)를 공급하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사업의 신혼부부 전용 상품을 통해 대출한도 상향,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지속 제공한다.

고령가구를 위해서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10 → 20개소) 서비스를 강화(여가·식사 + 돌봄 등)하는 한편, 매입임대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대 거주기간을 폐지하여 고령자가 오랜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 1-8] 주택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297,314	335,184	12.7	
주택구입·전세자금 용자	93,992	99,000	5.3	
다가구매입임대 출·용자	37,973	86,952	129	2.6 → 5.4만호
전세임대 용자	38,733	43,663	12.7	4.05 → 4.1만호
통합공공임대 출·용자	-	1,813	순증	신규 0.4만호

공적연금 부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 및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체계를 강화한다.

☞ (2020년) 55조 4,491억원 → (2021년) 60조 408억원 (8.3% 증가)

공적연금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민의 노후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국민, 공무원, 교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퇴직, 사망, 공무상 부상·질병·장애에 대한 급여를 지속 지급한다.

특히, 4대 공적연금의 성숙으로 노령·퇴직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급여 지급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561.3 → 605.3만명으로 44만명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급여지급액도 2.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여타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수도 각각 53.3 → 56.2만명, 9.2 → 9.8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1-9] 공적연금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554,491	600,408	8.3	
국민연금	274,111	300,025	9.5	561.3 → 605.3만명
공무원연금	196,030	211,044	7.7	53.3 → 56.2만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	49,689	53,908	8.5	9.2 → 9.8만명
군인연금	34,661	35,430	2.2	9.8 → 10.0만명

보험 부문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선양한다.

☞ (2020년) 5조 7,345억원 → (2021년) 5조 8,866억원 (2.7% 증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금을 지속 지급한다.

상이처와 질병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진료비를 지속 지원하며,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100개소 추가 지정하여 520개소까지 확대한다.

올해 11월 개관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사업(2021년도 314억원)외에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미국 ‘추모의 벽’ 등 현충시설 건립 사업(2021년 301억원)을 추진한다.

[표 1-10] 보훈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57,345	58,866	2.7	
보상금	29,444	30,593	3.9	단가 : 3% 인상
위탁병원진료	2,268	2,350	3.6	인원 389만명 위탁병원확대 14억원
국립묘지조성	192	280	46.4	제주, 연천 지역 2개소
현충시설건립	228	620	72.3	임시정부기념관, 美 '추모의벽' 등 7개 현충시설 건립

건강보험 · 보건 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 부문

공공의료 확충 및 미래성장 동력인 보건산업 R&D 투자를 강화하고, 전 국민의 의료이용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도모한다.

☞ (2020년) 13조 5,219억원 → (2021년) 14조 6,968억원 (8.7% 증가)

국민건강 보장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9.0 → 9.5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1.2 → 1.5조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흥부(유방)·심장초음파, 척추디스크(추간판 탈출증) 등 기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 취약계층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15억원) 착수와 함께, 국립암센터에 Day-care 센터, 희귀암치료 병상 등 설치(78억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권역재활병원 지원 강화(136억원) 등도 추진한다.

코로나 블루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진, 자가격리자 등 심리상담 강화·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인력 465명을 신규 확충(1,577명 → 2,042명, +116억원)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시행 지역을 7개 시도에서 12개 시도로 확대(+139억원)하였다.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전국을 17개 권역과 70개의 진료권으로 분류하고,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며,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필수공공 의료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료취약지 주민들을 위해 분만실 설치 및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내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중증 소아환자와 그 가족들의 의료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단기입원병동 건립을 2021년에도 1개소 추가한다.

신약·의료기기 산업을 고도화하고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을 지속한다. 신약·의료기기 개발의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를 위해 국가신약개발 사업('21 ~ '30, 총사업비 2.2조원) 등 범부처 협업R&D 중심으로 쉐주기적 지원(기술개발→임상·실증→제품화)을 강화하고, 전략품목 중심으로 핵심기술 국산화 R&D 및 임상실증 투자 확대 등 신약·의료기기 산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력양성·규제과학·데이터 등에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모든 지역의 어린이 급식시설에서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안전한 급식과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20년 12월 4일부터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에 대한 재범예방 의무화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중독재활센터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앞당기기 위하여 식약처에서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지정하여 임상진입 심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1-11] 건강보험·보건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률 ((b-a)/a)	주요내용
합 계	135,219	146,968	8.7	
건강보험	101,956	107,688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가입자자원 (일반 : 70,826 → 75,834억원) (기금 : 18,801 → 19,167억원)
보건의료	27,694	33,194	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 증진사업 (685 → 919억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291 → 368억원)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 (53 → 58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264 → 1,433억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133 → 173억원)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25→20억원) 공익적 의료기술 연구사업(R&D) (신규, 42억원)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R&D) (30→79억원)
식품의약품안전	5,568	6,086	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504억원 → 562억원)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6억원 → 15억원)

고용 · 노동 · 고용노동일반 부문

청년 · 여성 · 중년 ·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화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저소득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확충한다.

☞ (2020년) 30조 5,183억원 → (2021년) 35조 6,570억원 (16.8% 증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여건을 확충하고,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 일자리 사업들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9만명 신규 지원하고,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0만명 신규 지원한다.

중소기업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의 제도 사용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를 사업장당 첫 번째 근로자에서 세 번째 근로자까지 확대 지원한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예술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규 지급(94억원)하여 모성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지원 사업장을 확대한다(840개소 → 1,000개소).

신중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력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2,500명 → 5,000명), 퇴직 신중년이 비영리법인 · 사회적기업 등에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한다 (13,000명 → 11,700명). 또한,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하여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디지털 · 그린 등 29개 직무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기업의 비자발적 이직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동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안착 도모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사업을 신규 실시한다(450개소).

장애인의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지원인(5,000명 → 8,000명) 및 보조공학기기(1.1만점 → 1.2만점),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75개소 → 90개소)을 확대하고,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신설한다(6,300명). 또한, 미래 디지털산업 사회 대비를 위한 ‘장애인 IT특화 맞춤형훈련센터’를 신설·전환(각 1개소)한다.

기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15~69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청년(18~34세)은 최대 120%)이하인 저소득층(재산 합계액은 3억원 이하) 등에게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지급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에서 일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와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도 함께 시행한다. 일경험이 필요한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체험형·인턴형 2가지 방식으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실직에 대비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수혜자 규모를 확대(137만명 → 164만명)하고,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에 대해서도 구직급여를 지급한다(64억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하여 월 보수 지원 기준(월 215만원 → 220만원 미만)을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예술인(3.5만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명)까지 확대한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1.5%)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속 지원한다(2.2조원 → 1.3조원).

[표 1-12] 고용·노동·고용노동일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률 ((b-a)/a)	비 고
부문 계	305,183	356,570	16.8	
일자리안정자금지원	21,647	12,966	△40.1	185만명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1,490	8,103	△29.5	81만명
구직급여	95,158	113,486	19.3	164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2,771	8,286	199	40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2,820	14,017	9.3	10만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919	12,018	21.2	9만명
청년디지털일자리	-	4,676	순증	5만명
고용창출장려금	1,512	1,865	23.3	고용촉진 장려금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15,432	15,915	3.1	육아휴직급여(12만명) 등

※ 관련 기금 현황

고용보험기금	154,986	189,787	22.5	구직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69,061	80,990	17.3	산재급여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5,975	6,789	13.6	장애인고용 장려금등
임금채권보장기금	4,868	7,304	50	체당금 등
근로복지진흥기금	1,453	2,288	57.5	생활안정자금 등

[참고 1] 일자리 분야

참고 1-1 ▶ 재정지원 투자방향

2021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총 30.5조원으로 2020년 25.5조원 대비 19.8% 증가한 수준이다. 코로나 19 극복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 사람투자에 초점을 맞춰 지원을 확대한다.

☞ (2020년) 25조 4,998억원 → (2021년) 30조 5,476억원 (19.8% 증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과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고용안전망의 대폭적인 강화를 추진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정부 재정지출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3.2조원(10.4%)으로, 104만명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이 2.3조원(7.4%),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가 1.7조원(5.7%) 규모이다. 또한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장려금에는 8.5조원(27.6%), 창업지원은 2.4조원(7.8%)을 투자한다. 구직자가 실업기간에 마음 놓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에는 12.5조원(41.0%)이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1년에도 일자리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성과평가에 기초한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사업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부처별 일자리사업을 통합 공고하여 국민들이 더 쉽고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이 되도록 예산 집행상황도 매월 관리하여 부진하거나 중요한 사업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도 재편하여 일자리사업이 더욱 더 현장의 고용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자리사업평가 전문위원회’(고용정책심의회內) 및 ‘유형별 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성과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사업별 자체평가 및 정성평가지표를 신설하여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보다 다면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등급을 3단계로 평가하고, 저성과사업은 개선이행계획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표 참고1-1] 일자리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률 ((b-a)/a)
합 계	254,998	305,476	19.8
직접일자리	28,587	31,630	10.6
직업훈련	22,434	22,709	1.2
고용서비스	11,994	17,331	44.5
고용장려금	64,950	84,450	30.0
창업지원	23,585	23,974	1.6
실업소득 유지·지원	103,447	125,387	21.2

참고 1-2 ▶ 주요 지원내용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원 및 고용서비스 질 제고

향후 5년간 신기술 분야 현장 투입이 가능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을 목표로 'K-Digital Training'(1,390억원)을 추진하고, PBL 기반 자기주도 학습 등 혁신적 훈련방식을 적극 도입해 나간다. 아울러, 전국의 공동훈련센터 중 5개소를 'K-Digital Platform'로 개편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도 개방, 디지털 융합훈련을 제공한다.

취업취약계층, 일자리함께하기, 신중년, 국내 복귀기업 등 유형에 따라 맞춤형 고용장려금을 지원(1,865억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위한 기간제 상담원 600명 한시 채용, 고용서비스 전문상담사 자격제도 개편 및 종사자 보수교육(20억원) 등 고용서비스 질 제고 위한 인적 인프라를 강화한다.

전 취업자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한국형 고용안전망' 구축

2021년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수준 220만원 미만 예술인(3.5만명), 특수형태근로 종사자(43만명) 및 그 사업주가 납부할 고용보험료의 80%를 신규 지원하고, 구직급여를 확대(137만명 → 164만명)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40만명)도 본격 시행하며,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2.9만명)한다.

수요자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10만명, 취업성공패키지 13만명, 청년디지털일자리 5만명 등 신규 지원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자 지원을 위해 중장년층에 대한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지원(450개사)한다. 노인 일자리를 4.5만개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 확충(94개소), 중증

장애인 출퇴근비용 신규 지원(6천명) 및 근로지원인 확대(5천명 → 8천명) 등 여성·장애인의 직업 안정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전, 일·가정균형 등 근로환경 개선

미인증 고위험기계·기구 교체(4,911대), 뿌리공정 보유업종 위험공정 개선 지원(921개소), 사업장 산재예방시설 교체비용 용자(2,000억원) 등 일자리 안전을 위한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근무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 지원을 확대(3.0만명 → 4.1만명)한다.

02 교육 분야



2-1 재정지원 방향

2021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71,2조원으로 2020년도 72,6조원 보다 2.2%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자동 감소에 따른 것으로, 교육교부금을 제외할 경우 4.1% 증가한 수준이다. 2021년 교육분야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과 신산업으로의 경제구조 변화에 대비한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중점으로 지원한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도 신규 추진한다.

초·중고 및 대학의 온라인 강의 환경 조성

코로나19로 확대된 온라인 수업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 교대·사대에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현직·예비 교원의 온라인 수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2020년 10개소 → 2021년 28개소). 또한, 교사 및 학부모가 최신 에듀테크 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는 에듀테크 소프트웨어도 3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한다(3개소, 48억원).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확대에 따른 학습공백 및 학력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을 대폭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학습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권역 내의 대학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LMS의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공동으로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여 강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전국 10개소, 180억원).

④ 신기술분야 인력양성 및 미래대비 교육환경 조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융합교육 과정을 공유하는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를 신설, 디지털 분야 고등인재 2만명 양성을 지원한다(8개 분야, 832억원).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지방 국립대 및 사립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그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산학연 협력 인재양성 플랫폼을 확대 지원한다(2020년 3개 플랫폼, 1,080억원 → 2021년 4개 플랫폼, 1,710억원).

신산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신산업특화 전문대학 12개교를 신규로 지정하여 지원하고(120억원), 고숙련 실무중심 인재(名匠)를 육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대한 고등 직업교육 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신산업·융합·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가·첨단 기자재를 중점적으로 지원(150개 장비, 582억원)하고 동물실험의 여건 개선을 위해 동물실험센터 신축을 신규 지원한다.

④ 사립학교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 지원

사립학교 및 법인의 회계비리 근절, 공정한 입시 및 채용절차 확보를 위해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여(5개교, 53억원) 사립대학의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및 회계투명성 강화 등을 지원한다.

[표 2-1] 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률 ((b-a)/a)
〈 합 계 〉	726,344	712,076	△2.0
• 유아 및 초·중등교육	604,126	586,375	△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3,722)	(532,300)	(△3.9)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률 (b-a)/a
• 고등교육	110,139	113,270	2.8
• 평생·직업교육	10,715	11,052	3.1
• 교육일반	1,365	1,380	1.1

2-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을 지속 확충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및 교육콘텐츠 개발·학습진단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하여 원격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며, 미래 교육환경 대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을 본격 추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 (2020년) 60조 4,126억원 → (2021년) 58조 6,375억원 (2.9% 감소)

학부모의 유아학비·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 단가를 2만원 인상(24→26만원)하여 총 3조 9,168억원을 편성하였다.

2021년 고등학교 수학년(약 124만 명)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9,431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의 온라인 비대면 원격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준별 교육콘텐츠 개발 및 AI를 활용한 학습진단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기초학력 제고를 통한 학습격차 완화를 위하여 국가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을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 장애유형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학습지원을 강화한다.

학생들의 건강권·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학교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그린 기반의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을 위하여 국비 943억원을 지원한다.

[표 2-2]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604,126	586,375	△2.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3,722	532,300	△3.9
•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40,316	39,168	△2.8
• 고등학교 무상교육	6,594	9,431	43
• 교육콘텐츠 개발	—	343	순증
• AI활용 학습진단시스템 구축	—	83	순증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	10	순증
• 특수교육내실화 기반 구축	97	137	41.2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	943	순증

고등교육 부문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장학금 및 우수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인하한다. 미래사회 대비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도 확대한다.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 및 학습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대학 시설확충 등의 사업도 지원을 강화한다.

☞ (2020년) 11조 139억원 → (2021년) 11조 3,270억원 (2.8% 증가)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저소득 학생의 생활비 지원 및 취업을 위한 근로경험 확대를 위해 교외근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한다(2020년 4.9만명, 3,183억원 → 2021년 6.0만명, 3,579억원). 인문·예체능계열 및 전문대학의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우수장학금의 지원대상도 증가한다(2020년 4,097명, 369억원 → 2021년 5,603명, 472억원).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학자금 대출금리도 인하한다(2020년 1학기 2.0% → 2학기 1.85%, 2021년 1학기 1.7%).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 소득을 인상하여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실직·폐업시 일반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1만9천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학원 본부가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의 질을 관리함으로써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지속 지원한다.

미래먹거리인 혁신사업(그린산업, DNA, BIG3 등)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대학간 협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지원도 확대한다.

국립대학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도 강화한다.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1,217 → 1,493억원)하고, 노후화된 국립대학의 시설 개선을 위해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도 전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확대한다(7,167 → 7,710억원).

[표 2-3] 고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110,139	113,270	2.8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40,018	39,946	△0.2
BK21 플러스 사업	3,840	4,216	9.8
국립대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1,217	1,493	22.7
국립대 시설확충	7,167	7,710	7.6
산학연협력 고도화지원	3,689	4,306	16.7

평생 · 직업교육 부문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의 강좌 수 확대 및 다양한 신규 사업 추진 등 평생교육을 강화한다.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졸취업활성화를 추진하고, 전문대학의 고등 직업교육 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 (2020년) 1조 715억원 → (2021년) 1조 1,052억원 (3.1%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혜자 수를 확대(8,000명 → 15,000명)하고, 지원단가를 10만원 인상(32 → 42만원)하여 성인의 교육격차를 완화한다.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시스템(K-MOOC)에 강좌수를 대폭 확대하고, 매치업 강좌 확대, 우수 해외 MOOC 강좌 도입, 국내 · 외 석학강좌 신규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언제든 양질의 대학수준의 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고 졸업 후 대학 진학 외 다양한 성공경로의 구축 및 적극적인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 → 현장실습 지원 → 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 → 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장려금 지원단가 인상 및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고졸취업활성화를 추진한다.

전문대학이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 · 직업교육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고숙련 실무중심의 인재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 대학을 시범적으로 선정(5개교, 100억원)하여 고숙련 단계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소 · 중견기업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신산업 선도 전문대학을 지정하여 지원한다(12개교, 120억원). 또한,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의 약정을 통해 직무 심화교육을 제공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운영한다(5개교, 60억원)

[표 2-4] 평생·직업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률 ((b-a)/a)
합 계	10,715	11,052	3.1
평생교육 바우처지원	34	74	114.4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	135	259	91.6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18	22	22.2
현장실습기업 현장교육지원	205	205	-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	1,107	1,669	50.8
전문대학 혁신지원	3,908	4,130	5.7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육성	993	1,005	1.2

03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3-1 재정지원 방향

2021년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5조원 수준으로 2020년 8.0조원보다 5.8% 증가하였다.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 및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 촉진과 문화 · 체육 · 관광분야의 투자 · 소비심리 개선을 위한 지원을 병행한다. 매력적인 관광거점 조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관광인프라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문화재 보존 관리 등을 통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한다.

한류의 지속적 확산 및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이와 연계한 소비재 · 관광 등 연관산업 동반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해외 현지 한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략적 해외 한류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 · 비대면 방식을 통한 한류 확산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문화에 관심이 높은 신남방 · 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 보급이 지속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문화콘텐츠 디지털화 및 투자 · 소비 지원

VR · 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박물관 · 미술관 실감형 문화콘텐츠 확산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문화향유방식의 일환으로 디지털 · 비대면 문화콘텐츠의 제공을 확대한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문화분야 기업들의 재기 · 활성화를 돕기 위해 펀드 · 융자 공급규모를 확대한다.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을 1인당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숙박 · 체육분야의 할인쿠폰을 신규 발행하는 등 문화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㉞ 글로벌 수준의 관광인프라 구축

외래객 체감형 지역관광 활성화 및 볼거리가 있는 매력적인 관광거점 육성 등 글로벌 수준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 지방공항으로 입국한 외래객에게 권역 내 교통·숙박·볼거리 등을 빈틈없이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코리아토탈관광 패키지’를 도입하고, 관광거점도시·스마트관광도시 등 글로벌 관광지를 집중 육성한다.

㉞ 생활체육 향유기회 확대 및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고 여성·청소년·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2032하계올림픽 등 향후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유치·준비를 지원한다.

㉞ 신기술 접목 문화재 보존·관리 및 문화유산 활용·향유 확대

ICT·디지털 기술 기반 수리이력 관리, 드론을 활용한 문화재 방재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재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궁능원·왕릉 등 대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 및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표 3-1]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80,181	84,816	5.8
문화예술	35,371	37,226	5.2
관광	13,491	14,998	11.2
체육	16,961	17,594	3.7
문화재	10,911	11,416	4.6
문화 및 관광 일반	3,447	3,582	3.9

3-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문화예술 부문

비대면·온라인 문화예술 확산, 실감콘텐츠 등 신규 시장형성을 적극 지원한다. 전방위적 관점의 한류 확산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저작권 보호 강화에도 노력한다. 지역 및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을 확대하여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도 강화한다.

☞ (2020년) 3조 5,371억원 → (2021년) 3조 7,226억원 (5.2% 증가)

전방위적 관점의 한류 확산을 위해 한류장르 다변화 및 전략적 홍보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전통공연 해외진출 콘텐츠(신규, 16억원), 한류 연계지역 한국문화 해외진출 지원(10 → 28억원) 등 기초문화예술 분야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재외문화원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설치(신규, 74억원), 한국문화 관련 종합문화행사인 한국문화제 개최(신규, 80억원) 등을 통해 해외 현지 중심의 전략적 한류 홍보를 추진한다.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학당 지정을 확대(213 → 235개소)함과 동시에 급격히 수요가 증가하는 신남방·신북방 지역의 교육인력 확보를 위해 현지 인력양성 기반을 마련한다.(신규, 88억원)

코로나19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비대면·온라인 문화예술의 확산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온라인 K-Pop 공연을 위한 전용 공연장 조성과 공연제작비를 지원하고(신규, 265억원), 비대면 온라인 예술콘텐츠 제작 지원 및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예술가들이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예술작품을 발표·보급·홍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신규, 49억원), 민간단체들도 활용이 가능한 공연 영상화 종합 스튜디오를 예술의 전당에 마련하고(신규, 32억원), 공공도서관 이용객이 자유롭게 영상미디어 등을 제작·편집할 수 있는 창작스튜디오도 조성한다(신규, 22.5억원). 문화예술관련 전문분야 교육을 위한 온라인 과정을 개발하고(신규, 20억원), 게임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온라인으로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마련(신규, 10억원)하는 등 교육효과성을 제고한다.

실감콘텐츠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시장 육성을 위한 제작 및 인프라 지원을 확대한다. 실감콘텐츠 분야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실무형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하고, (20 → 70억원) 실감콘텐츠분야 중소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위한 입주공간도 확대한다. 국민들이 실감형 콘텐츠를 보다 손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실감형 콘텐츠 체험공간 조성도 지속 추진한다. 박물관, 문화유적, 관광자원이 집약된 광화문 일대를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구성하는 광화문 프로젝트를 연내 완성하고(총 400억원, '21년 140억원) 국립 박물관·미술관 소장 자원에 다양한 첨단기술을 적용한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100 → 100억원)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게임 제작지원(신규, 50억원), 인공지능 연계 실감콘텐츠 제작지원(신규, 43억원) 등 차세대 융합형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관련 시장이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예술인 복지 강화를 통해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저소득층 예술인의 기본적인 예술활동 보장을 위해 기존 예술인에게만 지원 중이던 창작준비금(연 300만원)을 경력 2년 미만의 신진예술인에게도 신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연 200만원, 60억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규모도 약 2,690명에서 3,400명으로 확대한다. (190 → 240억원) 장애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창작·향유를 위한 전문 공연장을 조성(신규, 84억원)한다.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제고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다양한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인상(1인당 9 → 10만원)하여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1,033 → 1,261억원), 저소득층·다문화가정 등에 지원하는 북토큰(도서교환권) 지원대상도 7.7만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한다. (10 → 12.5억원)

지역간 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국립지방박물관(13개관)별 특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국가문화 유산 특화 대표박물관으로 정립(신규, 154억원)하는 등 국립문화시설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립박물관, 공공도서관 등 공공 문화시설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도시 사업 지원 대상도 7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한다. (100 → 184억원)

문화예술기업을 위한 지원도 보다 확대한다. 영세한 문화콘텐츠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투자 기피영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험투자펀드 출자규모를 대폭 확대(600 → 819억원)하고, 완성보증 출연규모도 확대(200 → 250억원)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영세 콘텐츠기업을 위한 재기 지원펀드를 마련한다(신규, 140억원 출자) 예술분야의 경우 산업적 기반 강화를 위해 예술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81 → 101억원)

콘텐츠 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저작권 보호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한류콘텐츠의 경제적 권리 확보를 위해 해외 저작권 분쟁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해외저작권보호 이용권을 도입(신규, 18억원)하고, 문체부-경찰청 합동수사,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등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표 3-2] 문화예술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35,371	37,226	5.2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250	541	116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870	626	△28.0
게임산업 육성	447	646	44.5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323	321	△0.5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34	283	21.1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1,130	1,148	1.6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518	586	13
예술의 산업화 추진	116	146	26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	49	순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190	240	26.3
문화예술 향유지원	1,433	1,671	16.6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231	256	10.8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645	892	38.3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751	902	20.1
문화도시 조성	100	184	84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116	163	40.4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220	311	41.3

관광 부문

스마트 관광 기반 조성, 관광산업 디지털 혁신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국내여행 활성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지원한다.

☞ (2020년) 1조 3,491억원 → (2021년) 1조 4,998억원 (11.2% 증가)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대표 지역관광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159 → 383억원). '20년에는 부산·강릉·전주·목포·안동 등 총 5개 도시를 선정하여 도시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관광데이터 수집·분석, 필수적인 관광 환경정비 및 홍보마케팅사업을 운영했다. '21년부터는 도시별 기본계획에 따라 관광콘텐츠 개발, 인프라, 서비스 개선 등 도시관광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육성사업(국제관광도시(부산) 100억원, 지역관광거점도시(강릉·전주·목포·안동) 각 65억원, 통합홍보·컨설팅 지원 23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형 비대면 홍보 및 방한 관광 상품 개발 등으로 코로나19 이후 관광 수요를 선점하는 사업을 4개 권역별(중화권 95억원, 일본 64억원, 아중동 102억원, 구미주 96억원)로 편성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대비, 수도권에 집중된 방한관광시장구조를 개선하고 동북아 연속 개최 올림픽과 연계하여 한국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를 시행한다. 외래관광객의 입국관문을 지방공항으로 확대하고 지방 관광 해외홍보·활성화를 위해 '관광-항공 연계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20억원 → 47억원)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지방관광 해외홍보'(신규, 9억원) 사업을 도입하였다. 동북아 연속 올림픽과 연계한 환승관광 상품개발 및 해외홍보를 위하여 '관광상품 개발지원 사업'(31억원 → 46억원)을 확대 편성하였다.

축제, 생태자원,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생태녹색관광육성(23 → 23억원), 한류관광활성화(62 → 90억원) 등을 통해 한국 관광에서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를 적극 발굴 활용한다. 한국 대표 관광명소를 실감형콘텐츠로 제작(신규, 12억원)하여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관광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직접관광 수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5G 상용화를 선도하는 IT강국의 이점을 살려 스마트관광 도시 조성(45 → 132억원) 확대, 관광빅데이터 구축 고도화(50 → 102억원) 등으로 관광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고 시의성 있는 관광객 움직임 등 데이터 분석·제공을 통해 기업, 지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관광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한 관광산업의 조기 회복 및 혁신성장을 위해 관광벤처기업의 창업과 관광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벤처기업의 창업 및 시장안착을 위해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개최 등 관광벤처기업 발굴, 지원(85 → 97억원) 규모를 확대한다. 관광중소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 또한 '20년 108억원에서 '21년 166억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특히, 관광중소기업의 혁신 활동(경영개선, 스마트기술도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바우처 사업(37 → 59억원), 코로나19 이후 해외 관광산업을 선도할 관광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15 → 51억원)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관광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출자규모를 확대(300 → 450억원)하고 관광기업지원센터의 입주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22 → 32억원)

[표 3-3] 관광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13,443	14,998	11.2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172	399	131.9
외래관광객유치마케팅 활성화지원	782	565	△27.7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202	142	△29.7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172	203	18.0
스마트관광 활성화	157	302	92.4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515	745	44.7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114	108	△5.3
관광산업 용자지원	5,500	5,990	8.9

체육 부문

코로나 19로 위축된 생활체육 및 스포츠산업 분야의 활력을 제고하고,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스포츠의 위상강화를 도모한다.

☞ (2020년)1조 6,961억원 → (2021년)1조 7,594억원 (3.7% 증가)

생활체육 분야는 일부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종료로 '20년 대비 410억원(△4.5%)이 감액된 8,727억원이나, 이를 제외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의 지원은 '20년 대비 267억원 (4.2%) 증액된 6,658억원을 편성하였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스포츠체험기회 제고를 위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을 확대(연 59천명 → 72천명)하고,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유소년 스포츠기반 구축사업'(신규, 40억원)을 신설하고, 국내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강습과 캠프활동을 지원하는 '또바기 체육돌봄'사업(신규, 10억원)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그 외에도 국민체육센터의 지속적 확충(2,553 → 2,694억원)과 야구·탁구·당구 종목 승강제리그(디비전)를 '20년 시군구 리그에 이어 '21년에는 시도 리그까지 확대 운영(108 → 128억원)함으로써 스포츠클럽을 기반으로 한 생활체육 활동의 저변확대에 노력한다.

전문체육 분야는 '20년 대비 58억원(1.5%)이 증액된 3,939억원을 편성하여,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연계 운영 및 생애주기별 이력 관리를 위한 스포츠 정보통신 기술(ICT) 통합체계 구축 지원(신규, 30억원), 코로나19, 기후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종목에 대해 가상현실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학적 비대면 훈련 콘텐츠 개발(신규, 100억원), 회원종목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건비 추가 지원(308 → 317억원) 등 선수들의 경기력향상과 선수육성 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들을 편성하였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의 확대 지원(23 → 53억원)을 통해 권역별 지역사무소(3개소)를 신설하여 각 지역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상담·조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육분야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스포츠 산업분야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체육시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체육소비 할인권 지원(122 → 180억원) 및 용자 지원(662 → 1,062억원)을 확대하고, 비대면·온라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신규, 3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대면 스포츠 체험 및 관람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스포츠 분야 연구 개발(R&D) 사업을 2배 이상(78 → 177억원) 증액하였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월 2,414천원 → 월 2,436천원/800명 → 1,000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인다(269억원). 이와 더불어,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301억원),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339억원)을 통하여 한국 장애인스포츠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국제스포츠 분야에서는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본격적인 대회준비와 성공개최를 위하여 40억원을 지원하고, ‘2032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 추진을 위하여 40억원을 지원한다. 그 외에도 ‘2022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를 위해 11억원, ‘2021 서울 ANOC 총회’ 8억원 등 각종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업에 지원한다.

또,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태권도 진흥(184억원), 태권도진흥재단운영(보조) 지원(206억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핑방지활동 사업 지속 지원(91억원) 및 개도국스포츠 발전지원 사업을 확대(72억원)한다.

[표 3-4] 체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16,961	17,594	3.7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1,021	1,119	9.7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77	332	20.2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2,553	2694	5.5
안전한 스포츠활동지원	54	230	324.1
우수선수양성지원	1,131	1,106	△2.2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367	395	7.5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23	53	131.9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762	1,192	56.4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556	604	8.7
주최단체지원	1,568	1,510	△3.7
국제체육교류지원	176	155	△12.1
도핑방지활동 지원	77	91	18.2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107	182	70.3
태권도 진흥	187	184	△1.7
태권도진흥재단운영(보조)지원	234	206	△12.2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ODA)	72	72	△0.7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342	301	△11.8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257	269	4.8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316	339	7.4

문화재 부문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을 통해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실현한다.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선진적인 문화재 안전·방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채로운 문화유산콘텐츠를 제공한다.

☞ (2020년) 1조 911억원 → (2021년) 1조 1,416억원 (4.6% 증가)

신기술을 도입한 선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활용기술 연구(79억원), 문화재 수리이력정보(BIM) 관리시스템 구축(50억원), 문화재 방재 드론스테이션 구축(15억원) 사업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문화유산 3D 원천 데이터 구축 사업(23 → 145억원)을 확대·강화 하였다.

매장문화재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69억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35억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근대역사문화공간 건축자산 원형회복 사업(32억원), 무형문화재 안전한 전승체계 구축을 위한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30억원)을 각각 신규 도입하였다.

한국의 대표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의 궁궐 및 왕릉의 가치확산을 위하여 궁궐 포레스타루미나 콘텐츠 구축(13억원), 비대면 궁궐 활용 온라인 콘텐츠 개발(9억원)을 신규 도입하고, 경복궁, 창덕궁에 이어 덕수궁·창경궁의 야간 관람 콘텐츠 사업(6억원)을 신설하였다.

대국민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45억원), 문화유산 무장에 공간 조성(10억원), 야간경관조명 설치(15억원)를 각각 신설하였고,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182 → 195억원) 및 세계유산축전사업(77 → 92억원)을 강화하여,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균등화 실현 및 지역문화관광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적 위상 강화,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국제기구 지원 사업(10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표 3-5] 문화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10,911	11,416	4.6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74	161	117.6
문화유산 교육·연구	651	746	14.6
문화재 보존관리	5,835	6,206	6.4
궁·능원 관리	1,227	1,231	0.3
문화재 보호	506	553	9.3
문화재 국제교류	137	150	9.5
문화재 활용	1,149	1,256	9.3

04 R&D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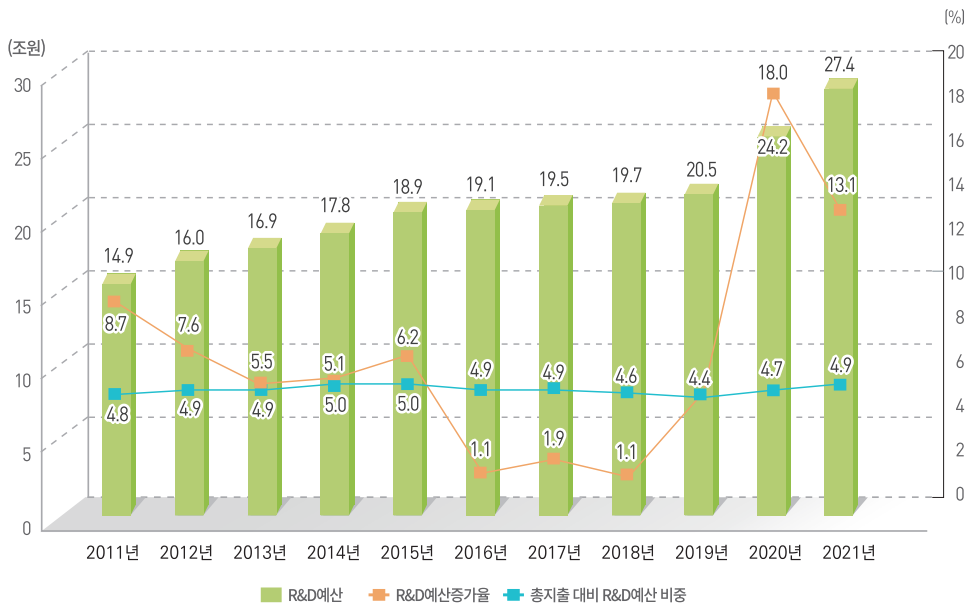


4-1 재정지원 방향

2021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0년 대비 3,2조원 증가한 27조 4,005억원이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13.1%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R&D 분야의 예산 편성은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BIG3, 기초원천 R&D, 인재양성 등 5개 분야에 주요 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었으며, '20년 대비 20.2% 증가하였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 유지를 통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그래프 4-1] 정부 R&D 투자 추이(2011~2021년)



미래 먹거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본격화 및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도 R&D예산은 전년대비 13.1% 증가한 27.4조원으로 편성하였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인 8.9%의 1.5배 수준이며, 2020년 증가율인 18.0%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리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R&D 투자 확대와 함께 성과제고 및 지출효율화를 위한 투자 전략도 강화한다. 개별부처 중심 R&D 사업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 간 융합 R&D 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신시장·신기술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등 실질적인 R&D 성과 및 효율화를 제고한다. 또한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R&R(Role & Responsibility, 기관의 미션 및 주요 역할)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 및 사업 개편을 수행하여 연구생산성을 제고한다.

[표 4-1] R&D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계	242,195	274,005	13.1
과학기술	72,225	78,903	9.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8,230	67,866	16.5
교육	23,105	24,368	5.5
사회복지·보건·환경	10,457	14,140	35.2
SOC	8,883	10,137	14.1
기타	69,295	78,591	13.4

4-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한국판 뉴딜 뒷받침

(디지털 뉴딜) 핵심기술 · 신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그린 뉴딜) 친환경 도시 인프라 구축 및 저탄소 에너지 보급을 지원한다.

☞ 한국판 뉴딜 R&D 투자: (2020년) 1조 4억원 → (2021년) 1조 9,104억원 (91.0% 증가)

빅데이터(Data), 5G(Network),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디지털 대전환의 미래를 선도한다.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지속 투자((2020년) 62억원 → (2021년) 140억원)하고, 6G 기술개발에 신규 투자(172억)한다. 블록체인, 홀로그램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일상 뿐 아니라 전 산업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특화기술과 산업 간 융합기술을 육성한다. 실감 콘텐츠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 디지털 워크 등 원격업무 관련 기술개발 등 비대면 특화 기술을 개발하여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통한 공정 관리 등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과 같이 기존 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한 융합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재해 예방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교통 · 항공 · 철도 · 공동구 등 공공시설 디지털 안전체계 개발 연구를 확대((2020년) 96억원 → (2021년) 337억원)한다. 특히, 지하시설은 디지털트윈 기반 관리체계연구에 집중 지원하여 화재 · 고장 등에 의한 사고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재난대응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녹색도시 인프라, 저탄소 에너지, 녹색기업 지원 등 녹색관련 기술 R&D 투자를 확대하여 녹색산업의 육성을 가속화한다. 녹색도시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에너지 공유형 커뮤니티 모델 개발 및 관련 건축기술((2020년) 10억원 → (2021년) 115억원),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통한 생태복원((2020년) 60억원 → (2021년) 116억원) 및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 통합 물관리 기술개발((2020년) 215억원 → (2021년) 305억원)을 지원한다.

저탄소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 : (2020년) 1,721억원 → (2021년) 2,140억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 (2020년) 2,535억원 → (2021년) 2,839억원)을 지원하여 고효율화를 가속화한다.

녹색산업의 혁신을 위해 바이오소재, 자원 순환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 중소기업의 R&D((2021년) 238억원)를 지원하여 이들을 육성하고, CO2 포집·활용 등 청정 제조기술개발((2021년) 214억원)을 확대한다.

[표 4-2] 한국판 뉴딜 R&D 지원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한국판 뉴딜 R&D	10,004	19,104	91.0
• 디지털 뉴딜	5,386	10,853	101.5
• 그린 뉴딜	4,618	8,251	78.7

주력산업 고도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제가치사슬(GVC) 재편 등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R&D는 對日 100대 품목을 對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3대 핵심사업(BIG3) 투자를 확대한다.

☞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예산 : (2020년) 1조 7,206억원 → (2021년) 2조 1,545억원 (25.2% 증가)

☞ BIG3 분야 R&D 예산 : (2020년) 1조 6,411억원 → (2021년) 2조 3,526억원 (36.8%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GVC 재편을 대응하기 위해 對日 100대 품목 외 글로벌 238개를 추가 확대하고, 이 중 정부 R&D 지원이 필요한 기술·품목을 선별(공급안정성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 고려)하여 기술 내재화를 추진한다. 2021년에는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2020년) 148억원 → (2021년) 611억원)을 선정하고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등을 추진하여 소재·부품·장비 R&D의 효율화를 제고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 (2020년) 764억원 → (2021년) 1,047억원)과 미래 유망소재 원천기술 확보(철강산업 재도약 기술 : 신규 167억원, 나노융합2020+ : 신규 30억원) 등을 통한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고도화를 위해 신약 개발을 쉼주기적 지원하는 범부처 협업 R&D(국가신약개발사업 : 신규 452억원, 총사업비 2.2조원(2021년~2030년))를 신설한다. 또한, 바이오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신규 31억원)을 신설하고,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을 확대((2020년) 1만명 → (2021년) 1.5만명)한다.

미래차 분야는 2027년 완전자율차(LV4) 상용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업(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 신규 884억원)을 강화한다. 또한, 2025년까지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수준의 주행거리((2세대) 400km → (3세대) 600km)를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 등 친환경차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초저전력·고성능 차세대반도체(AI 반도체 등) 및 미세 공정·장비 개발 지원을 확대(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 (2020년) 891억원 → (2021년) 1,223억원)하고, 고급·전문 인력 양성(과학기술 혁신인재 양성(시스템반도체) : (2020년) 26억원 → (2021년) 72억원)을 통해 대학 및 기업 간 협업을 유도한다.

[표 4-3] 주력산업 고도화 R&D 지원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주력산업 고도화	34,408	45,071	31.0
• 소재·부품·장비 R&D	17,206	21,545	25.2
• BIG3 분야 R&D	17,202	23,526	36.8
– 시스템 반도체	2,488	2,890	16.2
– 미래차	3,223	3,721	15.5
– 바이오 헬스	11,491	16,915	47.2

④ 혁신성장 기반 조성

기초·원천R&D 및 혁신인재 양성 등에 투자를 확대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 기초·원천 R&D 예산 : (2020년) 6조 9,065억원 → (2021년) 7조 3,389억원 (6.3% 증가)

☞ 혁신인재 양성 R&D 예산 : (2020년) 2,565억원 → (2021년) 2,878억원 (12.2% 증가)

미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원천 R&D의 투자를 지속하고,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 투자를 강화한다.

기초·원천 R&D는 자유공모 방식의 창의·도전적 기초연구를 내실화하고 투자를 확대(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 (2020년) 20,278억원 → (2021년) 23,484억원)하며,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화 지원을 지속(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 (2020년) 2,237억원 → (2021년) 2,493억원)한다. 이와 더불어 우주·원자력 핵심기술 자립화 및 활용 지원(한국형발사체 개발 : (2020년) 2,100억원 → (2021년) 1,718억원, 국제 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 (2020년) 926억원 → (2021년) 1,315억원)을 통해 세계 신시장 선점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제고한다.

AI·SW 등 ICT 분야의 핵심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인공지능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대학원의 지정을 확대((2020년) 8개소 → (2021년) 10개소)하고 공용 컴퓨팅, 해외 석학 초빙 등 공용 인프라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반도체, 미래차 등 각 산업 수요별 특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인재양성 과정을 확대·신설하여 고급인력 부족을 해소한다.

[표 4-4] 혁신성장 기반 조성 R&D 지원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혁신성장 기반 조성	71,630	76,267	6.5
· 기초·원천 R&D	69,065	73,389	6.3
· 혁신인재양성 R&D	2,565	2,878	12.2

R&D 투자 효율화

R&D 성과 제고를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를 확대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조직 및 사업 개편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한다.

☞ 다부처 융합 R&D 예산 : (2020년) 1,2조원 → (2021년) 1,8조원 (50.5% 증가)

개별부처 중심 R&D 사업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 간 상호보완적 역할과 책임에 기반한 다부처 공동기획의 융합 R&D를 확대·신설하여 신시장·신기술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예타, 계속) (2020년) 923억원 → (2021년) 1,903억원
복지부 주관(임상 등) + 산업부(사업화) + 과기부(기초원천) + 식약처(인·허가 지원)

** 지능형 재활운동 체육 중개연구사업(다부처, 신규) (2021년) 145억원
복지부 주관(재활기기·서비스) + 과기부(플랫폼) + 문체부(생활체육서비스) + 산림청(재활서비스)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임무와 주요역할(Role & Responsibility, R&R)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을 수행하여 연구생산성을 제고한다. R&D 투자 효율성 및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한 PBS 제도를 수정·보완하여 출연연구기관 스스로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정부는 안정적 연구환경¹을 뒷받침한다.

1 기관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R&R에 따른 사업계획, 기관별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이행 정도 등에 관한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0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5-1 재정지원 방향

2021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규모는 28.6조원으로 전년대비 20.8% 증가한 수준이다. 2021년에는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 총력지원 및 제조업 경쟁력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그린뉴딜 투자, 벤처붐 분위기 사수, 영세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와 성장지원 등에 역점을 두었다.

④ 무역금융 확대, 마케팅 및 수출 다변화 등 수출 활력 제고

2021년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대규모 인프라 공사 수주 지원, 건설사업 수주 지원 펀드 조성, 초고위험국 인프라 사업 대출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금융 공급을 2.8조원 확대한다.(2,960억원 → 3,500억원)

마케팅 부분에서는 소비재·서비스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를 전년대비 50% 확대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여(1,407억원 → 1,525억원), 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K-뷰티·의료 등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신남방·신북방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355억원 → 613억원)

④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 탄소중립 관련 투자 확대

脫탄소 사회로의 이행에 대비하기 위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강화한다.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태양광 생산 기반을 확산하고, 풍력 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R&D·입지 지원을 병행한다. 특히 ‘국민주주프로젝트’를 통한 금융 지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신규, 4개 권역) 시행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8,390억원 → 12,714억원)

수소경제 조기 도래를 위해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되는데, 수소산업의 가치 사슬인 생산-유통-활용 분야에 시급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기지, 출하센터 생산·저장시스템 기술개발(이상 생산), 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트레일러 구축 등(이상 유통),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운영비 지원 등(이상 활용) 핵심 과제들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4,297억원 → 6,101억원)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코로나19로 벤처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마중물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원 출자한다. 특히, 소외된 분야에 자금이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2,000억원 규모의 버팀목펀드를 신설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스마트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하고, 비대면·디지털 분야의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용 바우처도 신설한다(200팀, 300억원). 유망 스타트업과 관련기업, 기관들이 한데 모여 혁신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린스타트업타운, 스타트업파크도 각각 2개소씩 구축한다.

우수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 보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을 확대((2020년)34억원 → (2021년)75억원)하고,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신설(200팀, 300억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재기·성장지원 확대

코로나19 이후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영불안을 겪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신보의 보증공급((2020년)25.5조원 → (2021년)45조원)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2020년)2.3조원 → (2021년)3.7조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비대면·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상점(1,054개사 → 23,000개사), 스마트 공방(20개사 → 600개사), 스마트슈퍼(신규 800개사) 예산을 대폭 확대((2020년) 27억원 → (2021년)581억원)하여 체질개선도 뒷받침한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구독경제화 지원, 쇼핑몰 입점, 라이브커머스 제작 등의 지원(2020년) 313 → (2021년) 726억원을 늘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을 가속화한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2.5 → 3.0조원)하여, 매출회복을 지원한다. 상권주변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313 → 20곳)하고, 디지털 매니저(38 → 88곳)를 늘려 젊은층이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표 5-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237,154	286,487	20.8
무역 및 투자유치	10,182	11,519	13.1
창업 및 벤처	44,011	44,617	1.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84,448	117,970	39.7
에너지 및 자원개발	38,751	45,872	18.4
산업혁신지원	47,325	55,893	18.1
지식재산일반	3,223	3,472	7.7
산업금융지원	2,640	365	△86.2
산업·중소기업일반	6,575	6,779	3.1

5-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코로나 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후퇴로 침체된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금융 확충, 수출마케팅 강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급증하는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2020년) 1조 182억원 → (2021년) 1조 1,519억원 (13.1% 증가)

2021년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대규모 인프라 공사 수주 지원, 건설사업 수주 지원 펀드 조성, 초고위험국 인프라 사업 대출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금융 공급을 2.8조원 확대한다.(2,960억원 → 3,500억원)

마케팅 부분에서는 소비재·서비스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를 전년대비 50% 확대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여(1,407억원 → 1,525억원), 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의 지원을 강화한다.

상계관세 등 WTO 분쟁과 같은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대폭 확대한다.(49억원 → 163억원) 또한, 수출기업의 해외 규격인증 획득(107억원 → 153억원), 무역기술장벽해소(49억원 → 70억원) 지원 등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표 5-2]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10,182	11,519	13.1
무역보험기금출연	2,960	3,500	18.2
수출지원기반활용	731	817	11.8
수출경쟁력강화지원	407	412	1.2
통상분쟁대응	234	250	6.8

창업 및 벤처 부문

포스트 코로나시대 유망 창업기업을 집중지원하고, 우수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기반을 강화한다. 벤처 붐 확산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마중물 투자 역할도 지속할 계획이다.

☞ (2020년) 4조 4,011억원 → (2021년) 4조 4,617억원 (1.4% 증가)

비대면·디지털 분야 창업기업 대상 전용 바우처 사업을 신설(300억원)하고, 그린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R&D와 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한다(총 35팀, 716억원). 상당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향후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아기유니콘 지원사업도 확대한다.(120억원 → 180억원)

우수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 보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을 확대(34억원 → 75억원)하고,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국내 우수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신설(200팀, 300억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벤처투자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에 재정지원(8,000억원)을 지속한다. 특히, 소외된 분야의 벤처기업들에 지속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0억원 규모의 버팀목펀드를 신설한다.

[표 5-3] 창업 및 벤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44,011	44,617	1.7
창업사업화지원	4,008	4,425	10.4
민관협력창업자 육성	864	1,024	18.6
창업생태계 기반구축	1,023	1,266	23.8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8,000	8,000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부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스마트화·디지털화와 관련된 투자를 확대한다.

☞ (2020년) 8조 4,448억원 → (2021년) 11조 7,970억원 (39.7% 증가)

불확실한 경기여건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난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자금 용자(68,900억원 → 91,100억원)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코로나 19 과정에서 늘어난 보증지원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보, 기보, 지신보 등에 대한 재정보강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3레벨 이상의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시에는 지원단가를 인상(1.5억원 → 2억원)하고, 4레벨 이상의 지원트랙(4억원)도 신설한다. 동일 가치사슬내 기업군을 대상으로 상호 연계된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착수할 계획이다.(3개소, 12억원)

소상공인의 체질개선을 위해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슈퍼 예산을 대폭 확대(27억원 → 581억원)한다. 구독경제화 지원, 쇼핑물 입점, 라이브커머스 제작 등의 지원(313억원 → 726억원)을 늘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을 가속화한다. 카드 매출정보, 임대료 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상권정보시스템 개발도 착수한다(28억원 → 33억원).

[표 5-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84,448	117,970	39.7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4,468	4,377	△2.0
인력유입인프라조성	3,087	3,182	3.1
소상공인지원(용자)	23,000	37,000	60.9
시장경영혁신지원	3,281	3,625	10.5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에너지 전환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 등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 안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 (2020년) 14조 1,695억원 → (2021년) 15조 7,688억원 (11.3% 증가)

脫탄소 사회로의 조기 이행 필요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등 태양광 보급을 확산하고, 풍력 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국민주주프로젝트 등)·R&D(종합평가센터, 공동연구센터)·입지(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함께 지원한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력수요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스마트 전력량계(AMI)를 138만호에 보급하고, 노후건물 800동을 대상으로 에너지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에너지 복지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도 전년 대비 확대하여(순에너지 바우처기준, 67.3 → 69.1만명) 수혜자는 증가할 예정이다.

[표 5-5]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38,751	45,872	18.4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926	3,133	7.1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용자)	2,820	5,340	89.4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2,535	2,839	12.0
에너지바우처	1,675	1,139	△32.0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1,041	1,033	△0.8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 구축	53	113	113.2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25	75	200.0

산업혁신지원 부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를 강화하고,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 기술 집중지원, 주요제조업 투자확대 및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 (2020년) 4조 7,325억원 → (2021년) 5조 5,893억원 (18.1% 증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산화가 시급한 고부가가치 對日 100대 품목을 對세계 338개+α 로 확대(2.1조원 → 2.6조원)하고 R&D를 집중 지원한다. 자율차,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완전 자율주행차(Lv4) 상용화를 위한 R&D사업을 신규 착수(200억원)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아울러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302억원 → 641억원) 등 바이오헬스 분야 예산도 확대한다.

국내 제조업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혁신을 위해 7개 스마트산단 대상 지역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물류(3 → 4개)·에너지 플랫폼(신규 7개) 구축을 확대한다. 또한 산단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과 유턴기업 대상 투자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기업 대상 IR 등 투자유치활동도 강화한다.(500억원 → 1,100억원)

[표 5-6]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47,325	55,893	18.1
소재부품기술개발(R&D)	2,360	6,027	155.4
자율주행 기술개발혁신사업(R&D)	-	200	순증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R&D)	467	637	36.4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R&D)	302	602	99.3
투자유치기반 조성	945	1505	59.3

지식재산일반 부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건전한 IP기반의 혁신 성장 및 생태계 조성하고, 특허, 상표, 디자인 심사품질 제고를 위해 선행기술조사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 (2020년) 3,223억원 → (2021년) 3,472억원 (7.7% 증가)

창의성·기술혁신에 기반한 고품질의 강한 특허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며, 심사·심판 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여 조기 권리화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원 할 계획이다(730억원 → 748억원)

또한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은행의 리스크를 경감하고자 채무 불이행시 담보특허를 매입하고 활용(38억원 → 93억원)할 계획이며, 지역 IP기업 육성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한 지원(컨설팅, 로드맵, 기술사업화 등)을 확대한다.(187억원 → 207억원) 아울러 우수 IP보유기업이 미래 가치에 기반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연계 평가지원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72억원 → 96억원)

초·중·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내는 발명·창의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특허화고 발명·특허교육(18억원 → 20억원)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표 5-7] 지식재산일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3,223	3,472	7.7
특허, 상표, 디자인 심사지원	730	748	2.5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38	93	144.7
지식재산 창출지원(비우처포함)	187	207	10.7
지식재산 평가지원	72	96	33.3
특성화고 발명·특허교육	18	20	11.1

06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1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5조원으로 2020년 23.2조원 대비 14.1% 증가하였다. SOC 분야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 지원,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 및 주요 간선망 구축에 집중하고, IoT 등을 활용한 SOC 디지털화, 노후SOC 유지보수 및 생활안전 인프라 고도화, 드론·자율차·스마트도시 등 혁신성장 및 미래 신산업 관련 투자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대도시권 교통 혼잡 완화 및 주요 간선망 구축 강화

대도시권 순환도로·혼잡도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C), 진접선, 별내선 등 지속 투자로 출퇴근시간 단축 및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거점 연결을 위한 주요 고속도로, 철도망 구축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SOC 안전투자 확대

SOC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하여 도로 유지보수 및 철도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를 확대한다. 노후 교량과 터널 개·보수, 위험도로 개선, 노후 선로시설 개량, 내진성능 보강, 선로전환기 개량, 국가하천시설물 개보수 등 SOC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를 중점 지원한다. 특히 25년 이상 경과한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국비지원을 처음으로 반영하는 등 출·퇴근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한다.

④ SOC 디지털화 및 미래 신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까지 수도권 ITS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일반수도 ITS 구축을 대폭 확대하여 돌발상황 감지, 교통 흐름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터널원격제어체계구축, 교량 및 비탈면 IoT시스템설치 등 SOC디지털화를 적극 지원한다. 철도 시설 유지보수의 경우도 인력위주 방식에서 자동검측 방식체제로 조기전환하기 위해 차량검측시스템 구축을 구축한다.

④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 추진

남부내륙철도,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관광도로, 제2경춘수도 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한다. 기본계획 완료, 설계 및 착공 실시 등 각 공정별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표 6-1] SOC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232,311	265,090	14.1
도로	72,588	77,829	7.2
철도	69,474	80,956	16.5
해운·항만	18,974	21,099	11.2
항공·공항	2,691	3,564	32.4
물류 등 기타	28,097	30,795	9.6
수자원	12,909	15,915	23.3
지역 및 도시	24,474	30,693	25.4
산업단지	3,103	4,239	36.6

6-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도로 부문

고속도로, 국도 등 기간교통망 확충을 통해 물류비용 절감 및 국민편익 제고를 추진한다.

※ (2020년) 7조 2,588억원 → (2021년) 7조 7,829억원 (7.2% 증가)

고속도로는 연차별 투자소요, 집행률 및 집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성-구리, 함양-울산, 새만금-전주 등 주요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제천-영월, 계양-강화 등 신규 고속도로 사업도 기본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 대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을 '21년까지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일반국도의 경우, 준공소요 등 필수 소요 위주로 반영하고 개량사업 비중 확대 등을 감안하여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SOC디지털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도 ITS 구축을 대폭 확대하고, 터널원격제어체계구축·교량IoT시스템·비탈면IoT시스템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자도로의 의무지출성 예산(MRG, 건설보조금)은 필요 소요로 반영하고, 토지보상비는 민자先보상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와 금융비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지자체 도로건설 지원은 연차별 배분기준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를 반영하였다.

[표 6-2] 도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72,588	77,829	7.2
고속도로	18,636	20,609	10.6
국도	18,601	19,169	3.1
민자도로	8,427	5,940	△29.5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광역도로	389	356	△8.3
국가지원지방도	2,576	2,569	△0.3
도로관리	20,536	25,254	23.0

철도 부문

수도권의 교통 혼잡해소 및 통근시간 단축,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는 등 빠르고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한다.

☞ (2020년) 6조 9,474억원 → (2021년) 8조 956억원 (16.5% 증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고막원), 인천발·수원발 KTX 연결사업의 착공 및 고속철도 병목구간 해소(평택~오송 2복선화)을 통해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일반철도는 '21년 개통 예정인 진접선 복선전철, 부산~울산 복선전철, 울산~포항 복선전철 등 사업의 성공적 개통 및 도담~영천,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등 계속사업의 적기 완공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 도심 주요거점을 빠르게 연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및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며, 별내선 등 그 외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도시철도의 경우 광주도시철도 2호선 및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사업의 본격 추진과 신림선·동북선 등 경량전철 사업의 지자체 보조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망 확충 이외에도 기존 노후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교량, 터널, 전기설비 등 각종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및 노후시설물을 개량하고, 스크린도어, 재해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에스컬레이터, 역사 증·개축 등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등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비용을 신규 반영하여 출퇴근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한 안전도 지속 강화한다.

[표 6-3] 철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69,474	80,956	16.5
고속철도	1,086	3,469	219.4
일반철도	30,074	32,696	8.7
광역철도	6,274	8,311	32.5
철도안전 및 운영	28,215	30,976	9.8
도시철도건설	3,825	5,505	43.9

해운·항만 부문

해운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선박 선박 보급과 해운물류 스마트화 지원을 강화하고, 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해상교통의 공공성 강화에 지속 투자한다.

☞ (2020년) 1조 8,974억원 → (2021년) 2조 1,099억원 (11.2% 증가)

해운업계의 국제환경 규제 대응 지원과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외항선박 대상 친환경선박 대체 건조 지원을 확대(154 → 191억원)하고, 내항선박 대상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 사업을 신규 지원(49억원)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설비 지원금을 확대(85 → 95억원)하는 한편, 친환경 관공선(순찰선) 대체 건조 지원을 확대(118 → 138억원)하고, 항만 야드트랙터(YT)의 LNG 연료 전환(70대, 8억원)을 지속 지원한다.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300억원)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36억원),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200명, 3억원) 등 해운물류 스마트화도 지원한다.

항만물동량 증가와 선박 대형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신항(744 → 1,109억), 광양항(281 → 570억), 새만금 신항(458 → 744억) 등 항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재해안전항만구축(482 → 789억), 태풍피해복구(381 → 780억) 등을 확대 추진하여 안전한 항만 조성을 도모한다.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민 여객선 운임보조(146 → 146억원),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19 → 19억원)를 지속 지원하고, 연안 화물선 저유황유 사용 의무화에 따른 선사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 보조를 확대(252 → 765억원)한다.

[표 6-4] 해운·항만 부문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18,974	21,099	11.2
항만개발 및 관리	15,027	16,352	8.8
해운산업 선진화	2,617	3,322	26.9
해양 및 해상교통	1,330	1,425	7.1

항공 · 공항 부문

항공수요 대응을 위한 공항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감염병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 (2020년) 2,691억원 → (2021년) 3,564억원 (32.4% 증가)

항공수요 대응 등을 위해 6개의 공항에서 건설절차가 진행 중이며, 울릉공항에 대해서는 설계 등의 사전절차 이행 완료로 공사비를 대폭 반영하였으며, 기타 공항은 설계비 위주로 반영하여 공항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항공안전과 관련해서는 신속 · 정확한 출입국 수속 지원 및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비행검사용 항공기 교체도입, 레이더시설 현대화 등에도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드론 산업의 경우 드론택시 등 드론교통산업활성화를 위해 드론택시 비행시험장 및 장비구축 등의 인프라 구축,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연행사 등에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조기 상용화 착수를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착륙료 수입 급감, 공항공사의 영업손실 확대 등의 상황을 감안, 그간 중단되었던 국비지원을 재개하여 공항주변 거주 주민들에 대한 소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표 6-5] 항공 · 공항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2,691	3,564	32.4
공항건설	1,394	1,784	28.0
항공안전	442	738	66.7
드론인프라	462	513	11.1
소음대책	93	201	115.9
기타	300	328	9.3

물류 등 기타 부문

스마트 물류, 자율자동차 등 미래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및 서비스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해외건설 수주 지원 및 기술 선진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 (2020년) 2조 8,097억원 → (2021년) 3조 795억원 (9.6% 증가)

「스마트 물류 인증제」를 도입하여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해 첨단시설 및 장비투자비를 지원하여 IoT, AI 등을 활용한 자동화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또한, 도심 공공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공동 물류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광역버스 및 벽지노선 지원 확대,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속 추진한다. 한편 생활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등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등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해외건설 수주지원 강화를 통한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ODA)과 연계하여 해외시장 다변화와 투자형 해외사업 진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실제 도로상 자율주행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주변 차량·인프라와 협력을 위한 자율운행 기반기술을 마련하고 건설의 디지털·자동화 기술, 외국에 의존적인 철도차량 부품의 국산화 및 고성능 부품개발 등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표 6-6】 물류 등 기타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28,097	30,795	9.6
교통 및 물류정책	12,543	13,124	4.6
국토교통 R&D·정보화	6,125	7,119	16.2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해양정책 등	6,253	6,916	10.7
해양수산 R&D·정보화	1,941	2,095	7.9
경제자유구역사업 등	1,235	1,537	24.5

수자원 부문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기반을 구축하고, 친수시설 개선 및 확대 등을 통해 건강한 삶과 여가생활 기반 등을 제공한다.

☞ (2020년) 1조 2,909억원 → (2021년) 1조 5,915억원 (23.3% 증가)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하천정비, 국가하천유지보수 등에 지속 투자하고, 특히 홍수에 대비한 효율적 수문 제어를 위해 IoT를 활용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정비사업의 선행계획인 하천기본 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연구를 위한 치수연구개발비를 반영하였다.

다만, 지방하천정비는 재정분권에 따라 해당 하천관리청인 지자체에서 예산을 자체 확보하여 추진한다.

[표 6-7] 수자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12,909	15,915	23.3
수자원정책 및 홍수관리	4,670	4,916	5.3
댐건설 및 치수능력증대	1,497	1,640	9.5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1,211	1,188	△1.9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개발, 도심재생을 지속 추진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지역 및 도시 : (2020년) 2조 4,474억원 → (2021년) 3조 693억원 (25.4% 증가)
- ☞ 산업단지 : (2020년) 3,103억원 → (2021년) 4,239억원 (36.6% 증가)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을 추진하고, 새만금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 출자,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입 및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산업단지 준공시기에 맞추어 진입도로가 적기 공급 될 수 있도록 총 64개 사업을 지원하며, 노후공단의 재정비를 지원하고 부처 연계형 노후산단을 개발하기 위해 산단대개조 지역 선정지에 대한 계획수립비를 반영하여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표 6-8]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지역 및 도시	24,474	30,693	25.4
- 지역개발	5,333	5,994	12.4
- 도시정책	9,741	13,986	43.6
- 국토정보관리	1,676	2,011	20.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3,388	4,344	28.2
- 새만금개발	3,309	2,962	△10.5
산업단지	3,103	4,239	36.6
- 산업단지진입도로	2,371	3,045	28.5
- 산업단지지원	733	1,194	63.0

07 농림·수산·식품 분야



7-1 재정지원 방향

2021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2.7조원으로 2020년 21.5조원 대비 1.2조원, 5.3% 증가하였다.

포스트코로나, 농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이행, '생산-유통-수출' 전 분야의 디지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농수산물 가격안정 도모 및 농어촌 지역의 활력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농수산 공익 직불제 지원을 통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및 가치를 확산한다. 둘째, 농어업의 디지털·스마트화, 농수산식품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경쟁력 있는 청년농어업인 육성 등으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셋째, 농어업관측 고도화, 채소가격안정제 도입비중 확대, 수요기반 확충 및 재해대응력 강화 등을 통해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넷째, 농촌공간정비 프로젝트, 어촌뉴딜 300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가치 확산

공익기능증진 직불제의 안착을 통해 토양·생태계 보호, 공동체 유지,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가치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토대를 마련한다. 농어업이 안정적 식량공급이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 곡물의 생산단지 확대·전문화, 관련 시설 설치 확대, 유통시설 개선 등도 추진한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업의 디지털·스마트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연내 4개소 완공), 스마트양식클러스터(5개소), 스마트농어업의 혁신거점 등을 조성한다.

또한 비대면 시대에 대응한 농수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구축·지원함으로써 오프라인 중심의 농수산물거래를 온라인까지 확대해 나간다.

농수산식품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업체의 수출국 현지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 직접 진출을 지원하고, 비대면 수출 상시화에 대비하여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물류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도 확대한다.

경쟁력 있는 청년들이 농어촌에 활발히 유입되고,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농고·농대, 수산계 고교 및 대학의 실습교육, 장학금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진입 및 정착을 위해 초기정착자금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농지임대와 컨설팅, 자금 등도 패키지로 지원하여 청년농업인들의 창업 이후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농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안정적 농수산물 수급을 위해 작물 재배의향, 파종 및 작황, 수산물 품목별 생산량 및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확도 높은 농어업관측을 추진한다. 생산단계는 드론 등을 활용한 실측조사를 실시하고, 가정·단체급식 등 소비실태조사 확대 등을 통해 관측 정확도를 제고한다.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물량을 확대하고, 자조금단체의 지원을 수급조절 중심으로 개선하여 주요 채소류에 대한 사전적 수급관리기능도 강화한다.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도 확충한다.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 및 취약계층 영양섭취 지원 실증연구를 위한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초등돌봄 과일간식 등 시범사업도 연장한다.

농어업인의 안정적 영농·영어를 위해 수리시설개보수, 배수시설개선 등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내용면에서도 수리시설 원격조정, 제방변위 사전계측, 수질 자동 측정망 구축 등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통한 양식장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추진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21년 보험료 지원확대와 함께 농업인의 보장수준 선택권 확대 등 개편을 추진하고, 빈번한 재해발생에 따른 복구비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자금수요에 대응한 안정적인 신용공급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통해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농어촌지역 생활여건 개선 등 활력제고

포스트코로나시대 비대면·저밀도 환경선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농어촌지역의 부족한 인력확보를 위해 농촌인력증개센터를 대폭 확대하고, 어촌 일자리지원센터 및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지속 지원한다. 공장·축사 등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신규 지원하고, 농촌공동아이 돌봄센터 등 농촌 특화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도 보완하는 한편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게 ‘주거공간, 체험 프로그램,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어촌·어항의 노후화된 선착장 등을 현대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특화개발을 지원하는 어촌뉴딜 300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어촌 유희시설을 활용한 특화산업 지원을 통해 어촌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력 증대를 도모한다.

[표 7-1]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215,153	226,557	5.3
농업·농촌	160,705	164,991	2.7
수산·어촌	24,218	26,736	10.4
임업·산촌	22,836	25,899	13.4
식품업	7,394	8,930	20.8

7-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농업·농촌 부문

공익기능증진 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농축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 등 농업의 디지털화, 경쟁력 있는 청년농의 맞춤형 육성 지원 등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농업·농촌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을 재해예방·안전 중심으로 정비를 강화한다. 농작물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 등을 통해 재해발생 시 신속한 농가경영 복구와 안정을 돕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여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한다.

농업관측을 고도화하고, 채소가격안정제 적용물량 확대 및 자조금단체의 수급조절 기능 강화로 생산자 중심의 사전적·자율적인 농산물 수급관리를 추진한다. 농촌공간정비 계획 수립 및 보육시설 확충, 귀농귀촌 희망자의 농촌의 활력을 제고한다.

☞ (2020년) 16조 705억원 → (2021년) 16조 4,991억원 (2.7% 증가)

농업의 역할을 '생산' 중심에서 '환경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소농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직불제를 단일 직불제로 통합·개편한 공익기능증진 직불제의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의 핵심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농업의 생산·유통·수출 등 농식품 전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를 연내 차질없이 연내 완공하여 농업 혁신의 거점을 구축하고, 입주기업 등과 연계하여 스마트팜 원천기술과 인공지능에 기반한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R&D(신규, 178억원)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중심으로 거래되던 농축산물에 대해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도입(2021년 34억원)하고, 신남방 등 유망시장 온라인플랫폼 입점 등 수출업체 대상 비대면마케팅 지원(2021년 62억원)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온라인 시장 선점을 돕는다.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청년농 육성을 지원한다. 청년영농정착 지원금 신규 선발규모(1,600명 → 1,800명)와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대상

선발인원(300명 → 500명)을 확대한다. 아울러 농지임대와 컨설팅, 자금 등도 패키지로 지원하여 청년농들이 창업 이후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연재해 등에 대응한 농가의 안정적 경영 및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사전예방부터 복구까지 지원을 강화한다. 저수지, 배수시설 등 농업 생산기반 시설은 재해예방 중심으로 재편한다(1.9조원 수준).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의 2021년 보험료 지원을 확대(3,817억원 → 4,420억원)하고,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농가의 조기 경영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대책비도 대폭 늘린다(787억원 → 1,285억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 대응을 강화한다. 드론을 활용한 '언택트 방역' 도입을 위한 드론운용전담팀을 신설·운영(15억원)하는 한편, 중점방역 관리지구의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2020.10)에 따라 양돈농장 등 방역시설을 보강하고, 가축질병 검사시설(1개소 → 3개소)도 확대된다.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드론 등을 활용한 작물 재배의향, 파종 및 작황 등의 실측조사, 종합적 분석을 통해 농업예측을 고도화하고, 가정·단체급식 등 소비실태조사를 확대(5품목 → 7품목)한다. 생산자 중심의 사전적 수급관리 기능강화를 위해 배추, 무, 마늘, 양파, 건고추, 겨울대파 등 주요 채소류 6종에 대한 채소가격안정제 적용 범위를 전체 생산량 대비 15%에서 17%로 늘리고, 자조금단체의 지원은 홍보 기능에서 수급조절 중심으로 개선·강화한다.(91억원 → 106억원)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농촌지역의 부족한 인력확보를 위해 농촌인력증개센터(70개소 → 130개소)를 대폭 확대한다. 공장·축사 등 농촌공간의 체계적 정비가 시급한 5개 지역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신규 지원하고, 농촌공동아이 돌봄센터 등 농촌 특화 보육시설 확충(74개소 → 107개소)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도 보완한다.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500명 대상 '주거공간, 체험 프로그램,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136억원 → 217억원)하여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표 7-2] 농업·농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 합 계 〉	160,705	164,991	2.7
공익증진직불금	23,610	23,610	-
스마트팜 혁신밸리	798	893	11.9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314	335	6.6
맞춤형농지지원	6,460	7,718	19.5
수리시설개보수	5,381	6,365	18.3
재해대책비	787	1,285	63.3
가축위생방역지원	585	607	3.9
농업관측	169	171	1.6
농산물생산유통조정지원	251	345	37.4
농산물 온라인거래활성화	-	6	순증
축산물도매시장온라인경매플랫폼	-	26	순증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	31	순증
귀농귀촌활성화	136	217	59.6

수산·어촌 부문

어가 소득을 안정화하고 수산업의 공익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조건불리직불제를 친환경, 자원보호 등 역할을 강화하는 수산 공익직불제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수산물 할인행사 지원, 해외판매 활로개척 등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 양식 육성, 청정어장 재생 등 수산물 생산성 개선을 도모한다.

☞ (2020년) 2조 4,218억원 → (2021년) 2조 6,736억원 (10.4% 증가)

도서 및 해상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에 대해서만 지급되던 직불금(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을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분야까지 확대한다. 또한 경영이양 직불금을 신규 도입하여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고, 청년의 어촌정착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어촌의 활력을 제고한다.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을 실시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지속 추진(250개소)한다. 또한, 태풍 등에 의한 어항지역 재해발생 방지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스마트 국가어항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재해 대책비를 추가 확보하였다.

어선조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거리조업어선 위치발신기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실습형 조업 안전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회복을 위해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으로 어선감척을 지속 추진하고, 수산자원 조사와 폐어구 수거 등 수산자원관리를 강화한다.

양식산업 육성 및 생산성 강화를 위해 ICT·빅데이터 등 첨단양식 기술과 연관시설(유통·가공·사료 등)을 연계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추가로 조성(3개소 → 5개소)하고,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구축(1개소)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개체굴양식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였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청정어장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위판장 시설 개선(청정위판장)을 지속 추진하고, 생산해역 모니터링 확대(대상해역 56 → 64개),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 등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행사 지원(210(추경) → 390억원) 및 해외 온라인 시장 등 판로 개척 지원(310 → 328억원) 등을 확대하고,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산지거점 유통센터(1개소)를 지속 확충하고,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2개소)도 지속 지원하는 동시에 거점단지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원양어업의 생산성 제고 및 조업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지원하는 펀드를 확대(130억원 → 180억원) 지원한다.

[표 7-3] 수산·어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24,218	26,736	10.4
어업인 삶의 질 향상	6,462	6,230	△3.6
활력넘치는 어촌 조성	7,765	8,784	13.1
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어업 지원	3,032	4,133	36.3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화	3,557	3,791	6.6
국제협력 및 원양산업 활성화	416	441	5.9
기 타	2,987	3,357	12.4

임업·산촌 부문

경제림을 중심으로 산림자원을 육성·관리하고,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맞춤형 지원을 한다. 또한, 산촌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 조성과 정원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선제적 산림재해에 대응하고 국제산림협력을 강화한다.

☞ (2020년) 2조 2,836억원 → (2021년) 2조 5,899억원 (13.4% 증가)

경제림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산불에 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내화수림대(351ha) 조성을 신규로 추진하고,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나무심기(921ha → 1,178ha)를 실시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산림의 현황을 고려하여 조림지 사후관리를 추진하며 큰나무가꾸기(6천ha)를 신규 추진한다.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임업인 경영활성화를 위한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을 확대(880억원 → 1,180억원)한다.

산촌 및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산림일자리발전소와 사회적 기업을 지속 발굴·육성하고, 산림휴양수요 증가 등 국민적 요구를 고려하여 국립자연휴양림 조성(3개소)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4년차) 및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4년차)을 연차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효과 제고 등을 위해 차단숲 조성을 확대(93ha → 156ha)하고, 바람길숲 조성을 연차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공간 확보를 위한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 자녀안심 그린숲(50개소)을 신규 조성한다.

정원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국가정원(2개소)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생활밀착형 숲 조성을 확대(12개소 → 34개소) 추진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드닝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11개소)한다.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산불 진화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드론진화대(10개대)를 신규 운영하고,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 기초조사를 확대(5천개소 → 18천개소)하며, 산사태 피해저감 효과가 입증된 사방댐 설치를 확대(296개소 → 390개소)한다.

산림을 통한 국제산림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구 협력 등 관련예산(ODA 포함)을 확대(215억원 → 235억원)하고, 세계산림총회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계획된 예산(50억원 → 116억원)을 투입한다.

[표 7-4] 임업·산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22,836	25,899	13.4
숲가꾸기	1,977	1,884	△4.7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금)	960	1,180	22.9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1,915	2,338	22.1
정원조성관리	163	220	35.4
산림재해대책비	300	1,800	500.0
사방사업	1,461	1,628	11.4

식품업 부문

대체식품, 메디푸드 등 미래 식품산업을 견인할 K-FOOD의 핵심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농식품 수출시장을 신남방·신북방 등으로 다변화하고 현지 온라인 유통 플랫폼 중심으로 수출업체의 시장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역량있는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상품개발, 컨설팅, 해외인증등록 등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수출물류비 지원도 확대한다.

안심식당 확산 및 외식쿠폰 확대 등 침체된 외식경기를 활성화하고,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식품분야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및 기능성 HMR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미래 유망식품 분야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 (2020년) 7,394억원 → (2021년) 8,930억원 (20.8% 증가)

1인가구 증가, 건강·편의성 중시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춰 대체식품, HMR, 메디푸드 등 미래 유망식품 분야의 개발, 5G기반 안전관리 및 가공 관련 R&D 지원을 확대한다.(172억원 → 313억원)

지난해 코로나로 악화된 수출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농식품 수출의 강세를 지속하기 위해 중·미·신남방 등 유망시장 글로벌 대형 온라인몰에 '한국식품관' 입점을 확대(2020년 2개소 → 2021년 5개소)하고, 수출업체를 위한 상시 비대면 수출 플랫폼을 운영한다. 상품개발, 보험·통관 및 해외인증등록 등 수출업체가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수출업체의 물류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을 확대(412억원 → 473억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외식경기를 활성화하고, 외식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중소 외식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안심식당을 확산하는 한편, 외식업체의 경영컨설팅 지원을 강화(개소당 60만원 → 100만원)한다. 외식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외식쿠폰도 확대(330억원 → 660억원) 운영한다.

국내 식품기업과 연계한 인턴십 확대(200명 → 300명), 기업실무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지속 개발, 미래혁신식품 계약학과 교육과정 확대(2개 → 4개) 등을 통해 청년층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식품·외식분야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여 식품분야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고, 기능성 HMR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등 미래 유망식품 분야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표 7-5] 식품업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7,394	8,930	20.8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392	453	15.5
농식품글로벌비대면마케팅지원	-	62	순증
수출인프라강화	445	475	6.7
푸드서비스 선진화	26	723	2,647.1
식품산업인프라강화	114	148	30.4
기능성식품산업육성	30	61	105.3
농식품바우처실증연구	35	89	154.3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771	809	4.9

08 환경 분야



8-1 재정지원 방향

2021년 환경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17.8% 증가한 10.6조원이다. 스마트그린도시, 그린 모빌리티 등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화하고, 미세먼지, 먹는 물 등 국민 생활안전·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하였다.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 및 저감 가속화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24년까지 35% 이상('16년 대비) 개선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감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운전자, 사업장 등의 제도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다양화한다.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먹는 물 공급 전과정 혁신

전국 광역·지방상수도에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하여 수질·수량을 실시간 자동 측정·감시하고 신속히 초동 대처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질오염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투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화학물질·제품 제도이행 및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화학 물질·제품 안전관리 제도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시급성에 따라 정부가 직접 유해성 정보를 생산·지원하고 등록·승인 전 과정을 지원한다.

④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 강화

전국의 방치·불법투기·불법수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유해 폐기물(라돈·수은 등), 불법 폐기물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가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표 8-1] 환경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90,129	106,157	17.8
물환경	40,913	44,015	7.6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27,096	34,102	25.9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8,172	11,913	45.8
자연환경 및 해양환경	9,301	11,151	19.9
환경 일반	4,647	4,976	7.1

8-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④ 물환경 부문

상하수도 보급률(2018년 기준 상수도 99.2%, 하수도 93.9%)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수질개선 기초시설 설치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 물 복지 등 신규 정책수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20년부터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스마트화에 이어 '21년부터는 광역상수도 하수도를 포함한 물관리 전과정에 AI·ICT 기반의 실시간 감시·제어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예방 및 신속한 사고대응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실현을 추진한다. 수돗물 유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정수장 위생관리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수돗물 불신의 주요 요인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도 확대 추진한다.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아울러 센서(수위·강수량)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예측·분석 자동화, 소요시간 최소화 등 선제적인 AI 홍수 예보사업도 추진한다.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사업과 오염지류 유역진단 및 수변 생태수로 조성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또한 낙동강 유역 물문제 해소를 위해 수질개선사업 및 상·하류 지역 취수원 다변화 등도 추진한다.

[표 8-2] 물환경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40,913	44,015	7.6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3,816	4,676	22.5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	—	189	순증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	204	순증
빅데이터 기반 시홍수예보	—	108	순증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	115	순증
오염지류 유역진단 및 수변 생태수로 조성	—	128	순증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	20	순증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미세먼지 다량 배출시설 대상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 용자 지원('21년 10개소 3,000억원), 공공기관 가스히트펌프(GHP) 저공해화 등 핵심 배출원 저감을 강화한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20년 6,027억원 → '21년 6,282억원) 추진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중 노후 경유차의 LPG 차량 전환 지원도 대폭 확대('20년 6,000대 → '21년 8,400대)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에 친환경 보일러 구매 비용 지원금액을 상향(5만대, 50만원 → 60만원)하고,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대기질을 개선하고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무공해차를 보급한다. (전기차 '20년 7.3만대 → '21년 10.1만대, 수소차 '20년 10.3천대 → '21년 15.2천대) 아울러, 지속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견인한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20년 1,500기 → '20년 1,530기, 수소충전소 '20년 40개소 → '21년 55개소)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 환경성 질환 사전예측·원인규명 R&D 착수 등 예방관리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등 국민 노출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내 미평가 함유물질 위해성 평가(250종) 및 노후산단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실시간 원격 감시체계 구축 등 환경안전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화학물질·제품 등록·승인 전과정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표 8-3]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27,096	34,102	25.9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2,917	5,056	73.3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6,225	6,557	5.3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8,002	11,226	40.3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3,495	4,416	26.4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545	622	14.1
화학제품 안전관리	172	240	39.8

④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

다회용 포장재 재사용, 국내 석탄재 재활용 등을 통한 폐기물 발생량 원천 저감 및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체계를 강화한다.

재활용 폐기물 공공관리 기능강화를 위해 지자체 재활용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충('20년 25개소 → '21년 30개소)하고, 재활용 제품의 수량 및 가격의 급격한 등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활용품 비축기지를 구축·운영하는 등 '21년에 약 495억원을 투자한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전기·열·수소 등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 편의 시설과 연계된 주민·환경친화형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도 신규 추진한다.('21년 23억원)

중소환경기업의 해외진출 밀착지원, 미래환경산업펀드 본격 운영을 통하여 환경산업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세계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 환경산업체를 집중 지원하여 환경산업 수출확대를 도모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창업에서부터 사업화, 혁신 도약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의 오염물질 감소, 에너지 사용저감 등을 통해 친환경 공장 모델 구축을 추진한다.

청정대기, 생물소재, 자원순환 등 녹색산업 선도분야에 대하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생물소재, 녹색금융 등 신산업 분야 산학연계·공동연구 등을 통해 녹색융합 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녹색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주도의 기후 회복력 강화와 녹색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개선 제공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매체별(수질, 대기, 폐기물 등) 분산관리 체계를 과학과 기술에 기반한 매체 통합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측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과학적 기반 하에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표 8-4]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8,172	11,913	45.8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197	236	19.8
자원순환촉진지원	12	192	1500
재활용품 비축사업	94	259	175.5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사업	-	15	순증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	15	순증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	146	순증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	57	순증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254	897	253.1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	303	순증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	396	순증
스마트그린도시	—	526	순증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255	287	12.5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200	300	50.0

자연환경 부문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습지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보호지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생태계 연속성 및 생태적 기능 향상에 기여한다.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고품격·친환경 생태 체험·탐방 인프라를 조성하여 전국민(교통약자 포함) 힐링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체류시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운영 및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확대 지정, 야생생물 보호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와 공존문화 조성을 강화한다.

또한, ASF 확산 예방을 위해 야생멧돼지 예찰·신고·검사 강화, 차단·광역 울타리 등 확산방지 시설 설치도 계속 추진한다.

[표 8-5] 자연환경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6,579	8,317	26.4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1,409	2,336	65.8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198	233	17.7
습지보전관리	165	285	72.7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284	320	12.7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65	124	90.8

09 국방 분야



9-1 재정지원 방향

2021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52.8조원으로 2020년 50.2조원 대비 5.4% 증가한 규모이다.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안보' 역량을 확충하였으며, 첨단 무기체계 보강과 장병 복지 향상 등 국방개혁 2.0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였다.

특히, 차세대 잠수함 등 핵심 무기체계를 보강하고 국내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국방 R&D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반영하였다.

국방운영의 첨단화·효율화, 군구조 정예화 및 장병 사기진작

4차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여 AI기반 경계태세를 확립하는 등 국방운영을 첨단화·효율화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다. 또한, 간부·군무원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통해 전투력 강화·전문성 확보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을 반영하였으며,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병 봉급을 인상하고 단체보험 제도 등을 도입하여 복무여건을 개선하였다.

핵심 무기체계 확보 및 국방 R&D 투자 확대

핵·WMD 대응 체계는 적의 공격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표적 타격, 적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적의 공격에 즉각 대응하여 적의 지휘·통제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압도적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21년도 자주국방능력 강화를 위해 24개의 신규전력 착수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대표적인 지상전력으로 지뢰탐지기-II, 복합화기 원격사격통제체계 등이 있고, 해상전력으로는 근접방어무기체계-II를 추가 확보하며, 공중전 지원을 위한 군위성통신 체계-II, 항공통제기 2차 등을 신규로 투자한다. 더불어, 민간의 신기술 및 성숙된 기술·제품을 소요군에 신속히 도입하여 안보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시범획득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보라매 사업(KF-X), 군정찰위성사업 등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이를 뒷받침할 핵심·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전년 대비 10.5% 증가)하여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9-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전력운영 부문

국방인력구조를 정예화하고 국방운영을 첨단화·효율화하며, 장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주둔지 및 해안 경계작전태세를 확립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 전력운영비 : (2020년) 33.5조원 → (2021년) 35.8조원 (7.1% 증가)

1) 국방인력구조 정예화 및 국방운영 첨단화

첨단장비 운영에 적합한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위해 정원구조를 개선하고 병력 감소 자원을 간부·군무원으로 대체하기 위해 전투부대는 장교, 부사관 중심으로 보강하여 전투력을 강화하고, 비전투부대는 민간인력 활용으로 전문성을 확보한다.(부사관·군무원 7,682명 증원)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무선 네트워크 기반 육군 스마트 부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단 등 구축을 통해 전력운영 전반을 첨단화시킨다. 또한, 중·소대급 포병 사격 훈련용 마일즈 장비를 지속 도입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실제 전장 환경 체험이 가능한 AR·VR 기반 훈련체계를 확대하여 복무기간 단축에도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화 훈련체계를 지속 구축해 나간다.(538억원)

2) 장병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2017년 최저임금의 45% 수준으로 병 봉급을 인상하고(병장기준 60.9만원/월), 자기개발 비용을 지원한다.(23.5만명, 연 10만원) 또한, 현역 및 상근예비역 병사 전원에게 1인당 월 1만원의 이발비를 지급하고(421억원), 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한다.(153억원)

3) 경계작전태세 확립 및 비전통적 위협 대응 능력 강화

군의 경계작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경계시설을 대폭 보강하고(1,389억원), 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을 통해 주둔지 및 해안경계력을 강화한다.(1,968억원) 또한, 비축용 마스크 구매, 전 부대 대상 방제용역 실시, 의무장비·물자 등 추가 도입 등 감염병 대응 능력을 보강하고(1,152억원), 대테러·대화생방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장비·물자 도입 예산도 반영하였다.(544억원)

[표 9-1] 전력운영비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334,723	358,437	7.1
급여정책	145,906	152,058	4.2
군인·공무원 연금 기금 전출금	30,213	30,798	1.9
급식 및 피복	22,482	23,016	2.4
군수지원 및 협력	57,353	61,845	7.8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38,879	46,849	20.5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11,843	11,912	0.6
국방행정지원	7,309	8,132	11.3
군인사 및 교육훈련	7,015	8,024	14.4
국방정보화	5,640	6,424	13.9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4,125	4,991	21.0
예비전력관리	2,067	2,346	13.5
책임운영기관	1,891	2,041	7.9

방위력 개선 부문

전방위 안보위협 및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WMD 대응전력을 강화하는 한편, 무기체계 국산화 및 핵심기술개발 등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한다.

☞ 방위력 개선 : (2020년) 16.7조원 → (2021년) 17.0조원 (1.9% 증가)

북한 및 주변국의 전방위 위협과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광개토-III 이지스함,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패트리엇 성능개량 사업 등 핵·WMD 대응 전력에 중점 투자(2021년 5.8조원)하고, 230mm급다련장, 전술정보통신체계 (TICN), 사단정찰용무인항공기, 군위성통신체계 등 전시작전통제권 적기 전환을 위한 우리군의 핵심군사능력을 강화해 나간다.(2021년 2.3조원)

또한,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변화하는 작전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K-2 전차, 한국형 전투기(KF-X), 한국형 기동헬기, 울산급 호위함, 차륜형 장갑차 등 군구조개편 관련 전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한다.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개발을 위해,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원천·핵심 기술 확보에 필요한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대비 10.5% 확대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군 무기체계에 적용하여 방위력의 고도화·지능화를 촉진하는 등 미래 전장환경 변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국방벤처기업 지원 등 방산육성에 대한 예산도 대폭 확대하여 방위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무기체계 투자 확대와 더불어, 무기체계 도입 시 철저한 소요검증과 사업타당성 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 강화를 통해 매년 증가하는 방위력개선 예산의 지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표 9-2] 방위력 개선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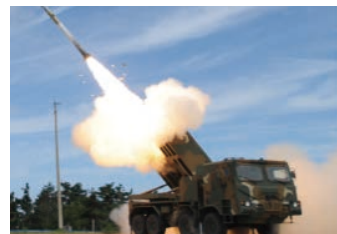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166,804	169,964	1.9
무기체계 양산 및 도입	126,826	125,682	△0.9
국방 R&D 투자	39,191	43,314	10.5
방위산업 육성	787	968	23.0



F-35A



광개토-III



230mm급다련장

10 외교·통일 분야



10-1 재정지원 방향

2021년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7조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다. 2021년은 디지털 외교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략적 ODA를 통해 능동적·선제적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경제 구현 및 평화 프로세스 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둔다.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 구축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가속화된 온라인·뉴미디어 기반 소통·교류 추세에 맞추어 비대면·디지털 외교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한 외교 인프라 및 플랫폼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 문화·지식·정책 자산을 활용한 온라인·뉴미디어에 기반하여 해외 대중과의 소통 및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외공관 시설개선에 우리의 친환경·에너지 절감 기술 적용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관련 한국판 뉴딜의 해외사업으로서 재외공관에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스마트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모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재외공관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공관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㉞ 공적개발원조(ODA) 지속 확대하여 개도국과의 동반협력기반 조성

반세기만에 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UN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2016 ~ 2030)’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보건, 농업, 산업 등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보건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ODA를 대폭 확충하고, ODA 사업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통한 ODA 융합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㉞ 한반도 평화·안보·생명공동체 기반 조성 및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참여 강화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여건 조성 시 남북교류협력기반을 확충하고, 남북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무장지대 등 남북 접경지역을 평화체험 및 공동번영의 공간으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남북간 보건·식량·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보건·방역·민생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분권과 협치’에 기반하여 지자체·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대중적 평화·통일 운동을 활성화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시대·차세대 지능형정부에 부합하는 북한정보 AI·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북한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국민 정보공유의 범위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표 10-1] 외교·통일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55,092	57,037	3.5
외교·통상 부문	40,505	41,958	3.6
통일 부문	14,587	15,079	3.4

10-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외교·통상 부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외교 인프라 조성 및 국내 그린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지원을 위해 외교통상 부문은 4조 1,958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2020년) 4조 505억원 → (2021년) 4조 1,958억원 (3.6% 증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외교의 총체적인 디지털 외교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사업을 신설한다(신규, 64억원).

동 사업을 통해 외교부 내 디지털 공공외교 인프라(전담과 사무실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P4G 정상회의·PKO 장관회의 등 2021년도 주요 외교행사 계기를 활용하여 외교 정책·현안 관련 디지털 콘텐츠 제작·확산 및 온라인 소통 행사와 글로벌 캠페인을 개최할 것이다.

또한 재외공관 주도 현지 맞춤형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 지원 및 담당자 역량강화,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발굴 및 사업 성과평가 관련 빅데이터 활용 연구 등도 적극 추진한다.

공공외교 전반적으로는 코로나19로 촉진된 비대면 사회활동과 소통 확대라는 대외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온라인을 통해 해외 한국(어)학 기반을 확대하고, 한국주간행사 및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K-pop World Festival 등 기존 대면성 사업을 현지 상황에 맞도록 대상별, 주제별 맞춤형 대면·비대면 사업으로 병행 추진하여, 해외에서의 우리 문화·지식·정책 공공외교 기반을 확대할 것이다. (803 → 844억원)

한편, 그린 뉴딜과 관련하여, 2019년 수립된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선정된 공관 3개 동에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시범사업(신규, 37억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 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평가(효과 분석 등) 후 사업계획 고도화를 통해 국내 그린 기업의 해외 진출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24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적개발원조(ODA) 분야는 부처간의 협업을 통한 ODA 분절화(fragmentation) 해소 등을 위해 융합예산의 적극적인 기획 및 발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보건분야 ODA를 대폭 확충한다.

우선, ODA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부처가 협업·연계하는 ODA 융합프로그램(예: 기재부는 다리건설 + KOICA는 교량 안전관리 역량강화)을 적극 발굴·지원(19개 부처 86개 프로그램, 3,256억원)하여, 부처 간 분절화를 해소하고, ODA 사업효과성을 제고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보건위기를 극복에 기여하고, K-방역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감염병 병원 건립, 의료기자재·백신치료제 보급 등 해외진출과 연계한 공적 원조를 확대한다.(3,377억원)

[표 10-2] 외교·통상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40,505	41,958	3.6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	64	순증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179	263	47.3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2,320	13,042	5.9

통일 부문

한반도 평화·안보·생명공동체 기반조성 및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참여 강화 등을 위해 통일 부문 총지출은 1조 5,079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통일 부문 : (2020년) 1조 4,587억원 → (2021년) 1조 5,079억원(3.4% 증가)

☞ 남북협력기금 : (2020년) 1조 2,056억원 → (2021년) 1조 2,456억원 (3.3% 증가)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남북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경제협력 인프라 구축(4,890 → 4,992억원)을 추진하고, 감염병 및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여 한반도 평화·경제·생명공동체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남북 공유하천 홍수 예방(6 → 65억원), 코로나 등 보건·의료 협력(585 → 955억원),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3,045 → 3,295억원) 등 재난대응·민생협력 분야 협력을 위한 재원도 편성하였다.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접경지역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이용하고 국민이 평화를 체감하는 공간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신규 48억원), DMZ 평화의길(신규 30억원) 등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평화통일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지자체·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권역별 평화통일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에서 시범운영 중인 '통일+센터'를 호남·강원 지역에 각각 설치하기 위해 '21년도 필요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와 구체적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한, 젊은 세대의 통일현장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고양하기 위한 '평화의 길 통일걷기' 사업(신규 7.5억원)을 추진한다.

통일·북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빅데이터화 하고 북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예측하는 북한정보 AI·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사업(신규 104억원)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 관련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생산·관리하여 전문가는 물론 대국민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표 10-3] 통일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14,587	15,079	3.4
남북경협인프라 구축 (경협기반 무상·유상)	4,890	4,992	2.1
민생협력지원	4,511	5,131	13.7
DMZ 평화적 이용	126	184	45.6
국내통일기반조성	53	96	81.9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	104	순증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11-1 재정지원 방향

2021년도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재정투자규모는 22.3조원으로 2020년 20.8조원보다 7.0% 증가하였다. 2021년은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투자,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교통안전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대형·복합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에 중점 투자하였다.

범죄피해자·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과 함께 심리치료·사례관리 등을 강화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자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변론 등 법률구조 서비스와 서민을 위한 맞춤형 법률서비스인 법률홈닥터 운영 등을 지속 지원한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시설 신증축 및 리모델링 투자를 지속하고, 교정기관 부속의원과 외부의료시설 간 원격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직업훈련과정 확대 및 작업장려금 인상 등을 통해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치안역량 강화 및 인권보호 강화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도박 등 신종범죄 급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과학 수사장비를 보강하고 전용 조사실, 영상·진술녹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 의경제도 폐지에 따른 치안공백 방지를 위해 경찰관 부대를 창설하고, 경찰관 및 경찰관서 방호인력 증원, 해안경계과학화 시설 등 의경대체 인력 및 장비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범죄 발생시 조사·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여비 지원을 확대하고 모포·사무용품 등 물품 지원, AI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 및 조서 작성, 여성·아동·외국인 전용 조사실 확충 등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해예방 투자 확대 및 대형·복합재난 대응역량 강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비하여 풍수해, 가뭄 등 피해예방을 위해 재해 발생 위험지역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산재감소, 자살예방)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활밀착형 안전투자를 확대한다.

현장에 근무하는 소방인력과 헬기를 확충하고,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전국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연안사고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해상 수색 및 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해경 함정 및 대형헬기 등 장비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표 11-1] 공공질서·안전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208,371	223,050	7.0
법원 및 헌재	21,660	21,788	0.6
법무 및 검찰	40,737	42,246	3.7
경찰	120,206	123,723	2.9
해양경찰	15,238	15,779	3.6
재난관리	10,529	19,513	85.3

11-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법원 및 헌법재판소 부문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조정전담변호사 제도 운영을 확대하고, 가족관계 사무처리의 전자화를 위한 전자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 및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를 위한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등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강화한다.

☞ 조정제도 지원 : (2020년) 117억원 → (2021년) 123억원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 (2020년) 222억원 → (2021년) 188억원

재판절차비용지원 : (2020년) 355억원 → (2021년) 362억원

대법원은 법률전문가인 조정전담변호사 운영을 확대하여(24명 → 34명)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정한 재판을 지원한다.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시스템을 새로 구축(8억원, 신규)하여 자녀 출생정보 신고 등 국민민원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가정법원의 면접교섭센터 운영을 확대(3개소 추가설치)함으로써, 갈등관계에 있는 가정구성원들의 원만한 친권행사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헌법재판소는 학술세미나 및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고, 무자력자 등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속 지원하여 국민 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표 11-2] 법원 및 헌법재판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21,660	21,788	0.6	
〈대법원〉				
• 조정제도 지원	117	123	5.0	조정전담변호사 확대
•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222	188	△15.4	전자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
• 재판절차비용지원	355	362	1.9	면접교섭센터 추가설치
〈헌법재판소〉				
• 헌재 본부운영지원	68	41	△39.8	학술세미나 · 홍보강화

법무 및 검찰 부문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를 강화하고 법률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는 한편,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장 및 출소 후 취업 등 사회복귀를 강화한다.

- ☞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 (2020년) 226억원 → (2021년) 287억원
- ☞ 교정시설 리모델링 : (2020년) 97억원 → (2021년) 166억원
- ☞ 교도작업 : (2020년) 549억원 → (2021년) 561억원

최근 빈번한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고 학대아동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21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10개소를 확충한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사들의 전문적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학대 방지 등 사례관리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 ('19) 68개소 → ('20) 71개소 → ('21) 81개소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임금채불자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변론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서민을 위한 맞춤형 법률복지 서비스인 법률홈닥터 운영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을 지속한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년 수용률 100% 수준을 목표로 유희부지 내 수용동 증축, 리모델링 등을 추진한다. 원격의료센터를 운용하여 교정기관 부속의원과 외부의료시설 간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노후화된 보호실·진정실을 리모델링하는 한편 수용자의 기본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기시설 없이 밀폐형으로 설계된 고층형 교정시설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이다.

* 과밀수용률 변화 : ('18) 114.4% → ('19) 113.4% → ('20) 110.8%

* 과밀수용 해소 목표 : ('21) 108% → ('22) 106% → ('23) 103% → ('24) 100%

수용자 및 출소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출소 후 취업이 가능한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과 연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지원사업 참여자를 확대하여 취업 기회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공항만에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제주공항 국내선 자동출도착검색대 설치, 전자여행허가제 및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운영 등 출입국관리소의 비대면 업무를 활성화한다.

[표 11-3] 법무 및 검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40,737	42,246	3.7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226	287	27.6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0개소 확충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704	797	13.2	교정시설 리모델링 등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2,202	2,293	4.1	공공요금 등 현실화
갱생보호	330	406	23.0	출소자 취업 지원 확대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	138	210	52.2	비대면 시스템 구축
교도작업	549	561	2.2	작업장려금 인상

경찰 부문

수사권 조정 및 신종범죄 대응 등 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장비를 보강하고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투자도 적극 확대한다. 또한 감염병, 사고로부터 현장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비 지원도 강화한다.

☞ 사이버안전수사활동 : (2020년) 45억원 → (2021년) 62억원

☞ 장비관리유지 : (2020년) 230억원 → (2021년) 261억원

☞ 인권피해자보호활동 : (2020년) 24억원 → (2021년) 26억원

경찰 수사과정의 책임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외부 위원을 늘리고(5명 → 8명), 수사경찰관 평가시험을 확대(1 → 2회)하는 한편 조사실 및 영상·녹화 장비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 수사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가상화폐 등 신종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휴대용 DNA 분석기, 지문진공 현출장비, 가상화폐 추적 프로그램,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과학수사 장비도 확충할 계획이다.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등 조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조사실도 인권 친화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챗봇”을 통한 비대면 상담으로 대처요령, 관련 법률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AI를 통해 진술 조서를 작성하여 2차 범죄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아동 신규 조사실 설치시 가·피해자 동선 분리와 대기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에게 모포, 사무용품 등을 제공 하는 등 인권보호에 관심을 더 기울일 계획이다.

집회, 시위, 교통질서 등을 담당하는 현장 경찰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지급 확대(131만 → 262만장), DPT 예방 접종 실시, 교통경찰관 안전모, 해외파견 경찰 방탄복 지급 등 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의경폐지에 따른 치안공백 방지를 위해 경찰서 출입통제시설을 보완하고, 해안경계 과학화 시설(56 → 66개) 및 청사방호인력(318명) 배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11-4] 경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120,206	123,723	2.9	
현장수사활동	939	1,089	16.0	수사서류 보관장소 확충
경무인사지원	88	153	75.1	경찰관서 출입통제시설
청사시설관리	1,053	1,316	25.0	노후 사격장 교체
인권피해자보호활동	24	26	11.7	피해자 응급지원 물품
여성대상범죄예방	136	153	12.6	AI조서, 챗봇 등 활용
장비관리유지	230	260	12.9	마스크 지급 확대

해양경찰 부문

빈틈없는 해양경비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항공기 도입·연안VTS 신규구축, 현장중심 필수예산을 확대 반영하였고, 안정적인 장비가동을 위해 함정·항공기 정비비를 확대 지원한다.

- ☞ 항공기도입 : (2020년) 315억원 → (2021년) 468억원
- ☞ VTS 구축운영 : (2020년) 303억원 → (2021년) 299억원
- ☞ 함정계획정비 : (2020년) 340억원 → (2021년) 395억원
- ☞ 항공기정비유지 : (2020년) 307억원 → (2021년) 341억원

동해 북방해역 경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친환경 하이브리드 대형함정(3,000톤 2척)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며, 해양사고 신속대응을 위해 해경의 노후된 헬기를 야간 임무 수행이 가능한 최신형 헬기로 대체하고 무인헬기(7대) 신규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활한 경비함정 정비·운용을 위해 함정 정비비를 증액하여 지원하고 서부정비창 착공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기엔진 충분해정비 시간 도래에 대비하여 엔진 정비비를 지원하는 등 해양경찰 장비의 가동률을 향상토록 할 계획이다.

‘민간해양구조대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및 단체 피복·보험 등을 확대 지원하고, 불법외국어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법유형별 단속 장비, 지능형 CCTV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해안가 동굴·암벽 등 고위험상황 대응을 위한 구조대 안전장비(안전헬멧, 벨트, 방수통신기)를 보강하고 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신형 연안구조정(13척) 도입을 지원한다. 또한 선박의 안전통항 및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연안 VTS를 동해권(강원·경북) 지역에 신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 11-5] 해양경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15,238	15,779	3.6	
항공기도입	315	468	48.6	노후헬기 도입 등
경비대테러역량강화	63	92	45.3	맞춤형단속장비구매 등
VTS구축운영	303	299	△1.4	동해권 연안 VTS 구축 등
서부정비창	82	132	62.2	설계비 반영
함정계획정비	340	395	16.2	함정정비비 현실화
항공기정비유지	307	341	11.1	고정익 10년 수리 등

재난관리 부문

풍수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지역을 지속 정비하고 우수저류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해예방 투자를 확대한다.

☞ 재해위험지역 등 정비 : (2020년) 5,075억원 → (2021년) 5,915억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대폭 확대(3,700 → 8,227개소), 어린이 안전법 제정('20. 5월)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제고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 (2020년) 1,274억원 → (2021년) 1,988억원

대형 재난 대응에 있어, 중앙차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중앙·지역본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방정책 수립 등 소방정책 과학화에 중점 투자한다.

☞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 (2020년) 405억원 → (2021년) 435억원

☞ 소형사다리차(19대) 및 산불전문진화차(10대) 도입 : (2021년) 95억원(신규)

☞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 (2021년) 7억원(신규)

☞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 (2021년) 10억원(신규)

최근 이상 기후로 여름철 평균 강수량과 국지성 호우빈도가 증가 추세로서 방재시설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재해도 빈발하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침수, 붕괴 등

재해위험지역을 중점 정비하고 우수저류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후적 피해 복구 소요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840억원)

특히, 재해예방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개별사업 단위'에서 '마을 단위종합정비'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예산 절감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19.12월)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2022년도까지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안전법 시행('20.11월)에 따른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 수립,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응급조치 교육이 의무화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23억원, 7만명)

전국단위 재난 통합대응 단계별 인프라 보강을 위해 전국 31대 소방헬기에 대한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좁은길 접근이 쉬운 소형사다리차 보강(신규, 57억원, 19대) 및 산림인접지역 산불 진압을 위한 전문 진화차 확충(신규, 38억원, 10대), 해상화재 대응을 위한 국가항만 소방정대 도입(신규, 14억원, 2개소) 등 적재적소 소방 특수장비 도입을 통해 화재진압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소방분야 119 빅데이터 활용·분석(신규, 10억원)을 통해 소방정책을 수립하고, 전문화된 화재원인 규명 및 체계적인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립소방연구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소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역사적 교훈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을 금년도부터 2024년까지 총 37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표 11-6] 재난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10,529	19,513	85.3	
재해위험지역 등 정비	5,075	5,915	16.6	• 재해위험지역 정비 5,220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695억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조치 교육	-	25	순증	• 교육비 23억원(7만명), 홍보비 2억원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405	435	7.3	•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 운영(2개소, +14억)
소형 사다리차/산불전문 진화차 확충	-	95	신규	• 소형사다리차 19대, 산불전문진화차 10대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	10	신규	• 화재위험 다차원 예측 · 분석과제 9건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12-1 재정지원 방향

2021년 일반·지방행정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4.7조원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한 수준이다. 2021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디지털 정부혁신 등 민간산업·사회분야 혁신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교부세(51.8조원) 및 지방채 인수(2.1조원)를 지속 지원하며,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대폭 확대(총 15조원 발행 대상)하며, 지역방역일자리·코로나대응형 청년일자리 등 코로나19 대응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혁신·사회혁신을 통한 성숙한 시민사회 구현

청년 공동체 지원 강화, 청년 자립마을 전국 확대 등 청년인구의 지역유입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다문화·북한이탈주민 등의 다양한 지역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통합체계 구축 등 지역 소멸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민간산업·사회혁신을 지원한다.

㉞ 과거사 정리에 대한 책임 있는 국가 구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지원센터 건립 지원,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가조사 등 국가의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한 사회통합 노력을 지속한다.

㉞ 국회의 원활한 입법활동 지원 및 안정적인 선거환경 조성

국회 의안문서 DB 구축, 소위원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구축, 국회부산도서관 개관 지원 등을 통해 국회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노후 선거장비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선거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기여한다.

㉞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수출·투자 지원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고도화 등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어 추진 중인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 출자를 확대하는 등 경제활력 회복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표 12-1]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790,129	846,766	7.2
지방행정·재정지원 (교부세 제외시)	537,039 (14,970)	557,303 (39,757)	3.8 (165.6)
재정·금융	195,829	229,893	17.4
입법 및 선거관리	14,184	11,009	△22.4
정부지원관리	8,702	12,690	45.8
국정운영	6,125	6,438	5.1
일반행정	28,249	29,432	4.2

12-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지속 지원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 (2020년) 53조 7,039억원 → (2021년) 55조 7,303억원 (3.8% 증가)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지속 지원하고(51.8조원) 지방채 인수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2020년 0.7조원 → 2021년 2.1조원). 또한, 지방재정 집행구조를 개선하고, 이·불용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재정집행과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노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총 15조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에 대해 발행비용 3~8%를 지원(2021년 10,522억원)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이 외에도 청년 자립마을 확대, 지역방역일자리 신설 등 사회적 여건변화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지속 지원한다.

[표 12-2]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537,039	557,303	3.8
부동산교부세	33,210	49,357	48.6
접경권발전지원	399	645	61.7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721	10,522	1,359.4

재정·금융 부문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업 수출·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재정·금융부문에 22조 9,893억원을 편성하였다.

☞ (2020년) 19조 5,829억원 → (2021년) 22조 9,893억원 (17.4% 증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시장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출자(2021년 신규 2,296억원) 및 한국수출입은행 출자(2021년 신규 1,600억원)를 확대한다.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어 추진 중인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연간 4조원 규모)을 위해 산업은행에 5,100억원을 신규 출자한다.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자 사업에 대해서도 2021년 적정 소요를 반영하여 뒷받침한다.

세계은행·IMF 등 국제기구에 대한 2021년도 출연금 납부를 위한 예산을 확대 반영(2020년 1,371억원 → 2021년 2,173억원)하고, 납세고지서 발송 등 국세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 지원(2020년 467억원 → 2021년 560억원)한다. 2020년에 크게 확대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시스템 재구축 사업 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1년 1,081억원 수준으로 추진(2019년 696억원 → 2020년 1,215억원 → 2021년 1,081억원)한다.

[표 12-3] 재정·금융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195,829	229,893	17.4
국제금융기구출연	1,371	2,173	74.5
녹색기후기금운영지원	239	269	22.1
산업은행 출자(뉴딜펀드)	-	5,100	순증
산업은행 출자(금융시장안정화)	-	2,296	순증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국회의 원활한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선거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기여한다.

☞ (2020년) 1조 4,184억원 → (2021년) 1조 1,009억원 (22.4% 감소)

국회 의안문서 DB 구축 등을 통해 국회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소위원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구축(2.2억원)하여 디지털 국회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국회부산도서관의 차질 없는 준공 및 개관(22년)을 위해 예산을 확충하였다.

2022년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변화하는 선거환경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선거범죄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노후 선거장비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선거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기여한다.

또한, 대통령선거 재외선거를 위해 공관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위법행위 사전 예방활동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 편의제고를 위해 재외선거정보시스템 기능개선과 재외투표 장비를 적기에 제작·보급하여 재외선거의 공정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표 12-4]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14,184	11,009	△22.4
입법정보화	206	238	15.5
국회부산도서관 운영	5	104	1,980
대통령선거관리	-	171	순증
위법행위 예방활동	102	144	41.2

정부자원관리 부문

급격한 디지털 행정 수요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민간산업·사회분야 혁신을 지원한다.

☞ (2020년) 8,702억원 → (2021년) 1조 2,690억원 (45.8% 증가)

재난·재해, 비대면서비스 확대 등 디지털 수요 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자원관리 부문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자체 운영 중인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공공·민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 보유현황 등을 전수조사('20.9~10월)하였고, 범정부 클라우드 이전·전환 중기계획('21~'25)을 수립하여 '21년부터 클라우드로 본격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문화 확산 등 스마트워크가 늘어나면서 사무실 밖에서도 업무망에 직접 접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유선기반의 업무망을 5G 기반의 무선망으로 대체하기 위한 속도와 보안에 대한 기술검증을 '21년까지 2년간 실시하고 ISP 등 사전절차를 거쳐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부 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바일신분증 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디지털 행정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개방하여 데이터 기반 창업, 사회문제 해결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민간산업·사회혁신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4차 산업혁신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표 12-5] 정부자원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8,702	12,690	45.8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지원	363	1,863	413.4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 신축	489	1,404	186.8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통합 구축	803	1,348	67.7
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	103	808	685.4

 일반행정 부문

과거사 정리·기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책임 있는 국가를 구현하고 경제총조사 등의 원활한 수행,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 근무환경 등을 지원한다.

☞ (2020년) 2조 8,249억원 → (2021년) 2조 9,432억원 (4.2% 증가)

2021년도 일반행정 부문 총지출은 29,432억원으로 2020년도보다 1,183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지원, 위탁 치유센터(광주·제주) 운영지원 확대 등 희생자 치유 및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라 진상조사, 명예회복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가 정책의 기초자료인 경제총조사·인구주택총조사·농림어업총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청사 등의 유지·관리, 내진보강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표 12-6] 일반행정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a)
합 계	28,249	29,432	4.2
경제총조사	14	571	4,080.6
행정안전부 정부전산백업센터 신축	273	542	98.5
정부청사 노후시설 등 정비	210	356	69.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134	204	52.5



제 3 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 1 장
2021년도 예산

제 2 장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별첨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1

제 1 장

2021년도 예산



01. 2021년도 예산 총칙
02. 일반회계
03. 특별회계규모 및 개요
04. 계속비
05. 명시이월비
06. 국고채무 부담행위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1

01 2021년도 예산 총칙



■ 제1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380,850,870,030,000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122,279,000,000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21,343,003,000,000원
④ 등기특별회계	358,792,000,000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138,372,000,000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530,827,000,000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7,443,535,000,000원
⑧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554,124,000,000원
⑨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007,268,000,000원
⑩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39,754,000,000원
⑪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36,102,000,000원
⑫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005,714,000,000원
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71,248,000,000원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44,273,000,000원
⑮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623,021,000,000원
⑯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16,771,000,000원
⑰ 양곡관리특별회계	2,057,333,000,000원
⑱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68,589,000,000원
⑲ 조달특별회계	464,271,400,000원
⑳ 우편사업특별회계	4,537,203,000,000원
㉑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166,733,000,000원

- 제2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2021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 제5조 2021년도 명사이월비는 별첨 「명사이월비」와 같다.
- 제6조 2021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5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 제8조 2021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7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40,000,000,000,000원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원

- 제9조 2021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6,000,000,000,000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77,500,000,000,000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1,500,000,000달러(미합중국화폐)

-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번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합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 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7,0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 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한함), 규제자유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 산업 재정지원, 감염병 피해지원,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규제 및 국제 통상마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재정지원, 국제부담금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 제13조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97,198,000,000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78,000,000,000원
③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95,850,400,000원
④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57,082,000,000원

-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615,355,000,000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90,394,000,000원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1,486,000,000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433,607,000,000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697,198,000,000원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77,165,000,000원

-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21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3,039,694,0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02 일반회계 General Account



2-1 세입예산 (Revenue Budget)

가. 총괄표

구분 Classification	2020년도 본예산 FY 2020 Main Budget		2020년도 추경예산 FY 2020 Supplementary Budget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 내국세 (Internal Taxes)	251,088,520	70.4	240,337,378	61.8
2. 관세 (Customs Duties)	8,791,160	2.5	7,713,968	2.0
3.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15,727,270	4.4	15,463,600	4.0
4. 교육세 (Educational Tax)	5,189,430	1.5	5,041,594	1.3
5.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3,320,970	0.9	3,320,970	0.9
6.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72,451,294	20.3	117,241,611	30.1
• 국채발행 (Borrowing from Bonds)	60,288,402	16.9	103,977,569	26.7
• 기타수입 (Others)	12,162,892	3.4	13,264,042	3.4
합계 (Total)	356,568,644	100.0	389,119,121	100.0

※ 일반회계 세입 규모임.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21년도 예산 FY 2021 Budget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추경예산 대비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239,564,700	62.9	△11,523,820	△4.6	△772,678	△0.3
8,347,200	2.2	△443,960	△5.1	633,232	8.2
15,690,300	4.1	△36,970	△0.2	226,700	1.5
5,306,600	1.4	117,170	2.3	265,006	5.3
5,113,800	1.3	1,792,830	54.0	1,792,830	54.0
106,828,270	28.0	34,376,976	47.4	△10,413,341	△8.9
93,513,725	24.6	33,225,323	55.1	△10,463,844	△10.1
13,314,545	3.5	1,151,653	9.5	50,503	0.4
380,850,870	100.0	24,282,226	6.8	△8,268,251	△2.1

구 분 Classification	2020년도 본예산 FY 2020 Main Budget
1. 국세 (Tax Total)	284,117,350
가. 내국세 (Internal Taxes)	251,088,520
나. 관세 (Customs Duties)	8,791,160
다.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15,727,270
라. 교육세 (Educational Tax)	5,189,430
마.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3,320,970
2.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72,451,294
가. 재산수입 (Property Income)	3,989,838
나. 경상이전수입 (Current Transfer)	6,375,534
다.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Sales of Goods & Services)	889,123
라. 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378,337
마. 관유물매각대 (Sales Proceeds of Government Owned Properties)	98,272
바.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Treasury Loan & Sub-Lease Loan)	3,121
사.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Trust from Other & Others from Other A/C)	60,717,068
(국채발행) (Government Bonds Floatation)	(60,288,402)
합계 (Total)	356,568,644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20년도 추경예산 FY 2020 Supplementary Budget	2021년도 예산 FY 2021 Budget	본예산 대비 증 감 Change		추경예산 대비 증 감 Change	
		금액 Amount	증감율(%) Rate	금액 Amount	증감율(%) Rate
271,877,510	274,022,600	△10,094,750	△3.6	2,145,090	0.8
240,337,378	239,564,700	△11,523,820	△4.6	△772,678	△0.3
7,713,968	8,347,200	△443,960	△5.1	633,232	8.2
15,463,600	15,690,300	△36,970	△0.2	226,700	1.5
5,041,594	5,306,600	117,170	2.3	265,006	5.3
3,320,970	5,113,800	1,792,830	54.0	1,792,830	54.0
117,241,611	106,828,270	34,376,976	47.4	△10,413,341	△8.9
4,700,972	5,304,107	1,314,269	32.9	603,135	12.8
6,875,534	6,347,872	△27,662	△0.4	△527,662	△7.7
889,123	838,740	△50,383	△5.7	△50,383	△5.7
378,337	288,316	△90,021	△23.8	△90,021	△23.8
98,272	112,253	13,981	14.2	13,981	14.2
3,121	291	△2,830	△90.7	△2,830	△90.7
104,296,251	93,936,691	33,219,623	54.7	△10,359,560	△9.9
(103,977,569)	(93,513,725)	(33,225,323)	(55.1)	(△10,463,844)	(△10.1)
389,119,121	380,850,870	24,282,226	6.8	△8,268,251	△2.1

나. 국세수입 내역 (Tax Revenues)

구 분 Classification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가. 내국세 (Internal Taxes)	251,088,520
(1) 소득세 (Income Tax)	88,417,840
(가) 신고분 (Not Withheld Income Tax)	34,170,710
(나) 원천분 (Withheld Income Tax)	54,247,130
(2) 법인세 (Corporation Tax)	64,419,010
(3) 상속세 (Inheritance Tax)	8,307,340
(가) 상속세 (Inheritance Tax)	2,917,015
(나) 증여세 (Gift Tax)	5,390,325
(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68,870,980
(5) 개별소비세 (Special Consumption Tax)	10,227,880
(6) 증권거래세 (Security Transaction Tax)	4,384,770
(7) 인지세 (Stamp Tax)	1,052,330
(8) 기타내국세 (Other Internal Tax)	5,408,370
나. 관세 (Customs Duties)	8,791,160
다.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15,727,270
라. 교육세 (Educational Tax)	5,189,430
마.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3,320,970
합계(Total)	284,117,35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21년도 예산 FY 2021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239,564,700	△11,523,820	△4.6
89,816,000	1,398,160	1.6
33,363,300	△807,410	△2.4
56,452,700	2,205,570	4.1
53,305,400	△11,113,610	△17.3
9,099,900	792,560	9.5
3,337,700	420,685	14.4
5,762,200	371,875	6.9
66,653,100	△2,217,880	△3.2
10,065,500	△162,380	△1.6
5,086,100	701,330	16.0
946,700	△105,630	△10.0
4,592,000	△816,370	△15.1
8,347,200	△443,960	△5.1
15,690,300	△36,970	△0.2
5,306,600	117,170	2.3
5,113,800	1,792,830	54.0
274,022,600	△10,094,750	△3.6

다. 소관별 세입예산 (Revenues Budget by Agencies)

소 관 Agency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0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Office of the President & Office of National Security)	243,000	0	0	243,000
02. 대통령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75,370	0	0	75,370
03. 국회 (National Assembly)	3,406,000	0	0	3,406,000
04. 대법원 (Supreme Court)	610,088,000	0	0	610,088,000
05.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183,000	0	0	183,000
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10,465,000	0	0	10,465,000
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6,000	0	0	6,000
08. 감사원 (Board of Audit & Inspection)	475,000	0	0	475,000
09.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12,439,000	0	0	12,439,000
11.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88,149,892,369	60,288,402,000	0	348,438,294,369
① 내국세 (Internal Taxes)	251,088,520,000	0	0	251,088,520,000
② 관세 (Customs Duties)	8,791,160,000	0	0	8,791,160,000
③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15,727,270,000	0	0	15,727,270,000
④ 교육세 (Education Tax)	5,189,430,000	0	0	5,189,430,000
⑤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3,320,970,000	0	0	3,320,970,000
⑥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4,032,542,369	60,288,402,000	0	64,320,944,369
1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191,202,000	0	0	191,202,000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326,541,000	0	0	326,541,000
14.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83,734,000	0	0	283,734,000
15.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2,724,000	0	0	2,724,000
16.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1,623,473,000	0	0	1,623,473,000
17.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45,584,000	0	0	245,584,000
18.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58,524,000	0	0	58,524,000
19.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58,669,000	0	0	58,669,000
20.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507,000	0	0	20,507,000
21.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217,299,000	0	0	217,299,000
22. 보건복지부 (Ministry for Health & Welfare)	500,218,000	0	0	500,218,000

(단위 : 천원)

2021년도 예산 FY 2021 Budget				증 감 Change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243,000	0	0	243,000	0	0	0	0
80,000	0	0	80,000	4,630	0	0	4,630
3,688,000	0	0	3,688,000	282,000	0	0	282,000
629,402,000	0	0	629,402,000	19,314,000	0	0	19,314,000
41,000	0	0	41,000	△142,000	0	0	△142,000
1,537,000	0	0	1,537,000	△8,928,000	0	0	△8,928,000
6,000	0	0	6,000	0	0	0	0
609,000	0	0	609,000	134,000	0	0	134,000
2,884,941	0	0	2,884,941	△9,554,059	0	0	△9,554,059
279,355,735,089	93,513,725,000	0	372,869,460,089	△8,794,157,280	33,225,323,000	0	24,431,165,720
239,564,700,000	0	0	239,564,700,000	△11,523,820,000	0	0	△11,523,820,000
8,347,200,000	0	0	8,347,200,000	△443,960,000	0	0	△443,960,000
15,690,300,000	0	0	15,690,300,000	△36,970,000	0	0	△36,970,000
5,306,600,000	0	0	5,306,600,000	117,170,000	0	0	117,170,000
5,113,800,000	0	0	5,113,800,000	1,792,830,000	0	0	1,792,830,000
5,333,135,089	93,513,725,000	0	98,846,860,089	1,300,592,720	33,225,323,000	0	34,525,915,720
241,418,000	0	0	241,418,000	50,216,000	0	0	50,216,000
330,259,000	0	0	330,259,000	3,718,000	0	0	3,718,000
198,194,000	0	0	198,194,000	△85,540,000	0	0	△85,540,000
2,820,000	0	0	2,820,000	96,000	0	0	96,000
1,930,623,000	0	0	1,930,623,000	307,150,000	0	0	307,150,000
243,948,000	0	0	243,948,000	△1,636,000	0	0	△1,636,000
59,339,000	0	0	59,339,000	815,000	0	0	815,000
61,058,000	0	0	61,058,000	2,389,000	0	0	2,389,000
20,910,000	0	0	20,910,000	403,000	0	0	403,000
209,234,000	0	0	209,234,000	△8,065,000	0	0	△8,065,000
512,866,000	0	0	512,866,000	12,648,000	0	0	12,648,000

소 관 Agency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23.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816,000	0	0	816,000
24.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85,961,000	0	0	85,961,000
25.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10,327,000	0	0	10,327,000
26.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67,244,000	0	0	167,244,000
27.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51,306,000	0	0	51,306,000
28.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01,239,000	0	0	101,239,000
29. 국가보훈처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8,277,000	0	0	8,277,000
30. 인사혁신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48,846,000	0	0	48,846,000
32.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32,437,000	0	0	32,437,000
33.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12,000	0	0	12,000
34.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42,288,000	0	0	42,288,000
35.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425,320,000	0	0	425,320,000
36.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354,191,000	0	0	354,191,000
37.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471,000	0	0	471,000
38.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1,512,000	0	0	1,512,000
3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0	0	0	0
40.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871,632,000	0	0	871,632,000
41.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143,823,000	0	0	143,823,000
43. 통계청 (Statistics Korea)	5,126,000	0	0	5,126,000
44.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216,000	0	0	216,000
45.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571,606,000	0	0	571,606,000
46. 경찰청 (National Police Agency)	869,665,000	0	0	869,665,000
47.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3,499,000	0	0	3,499,000
48.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52,952,000	0	0	52,952,000
49.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9,495,000	0	0	9,495,000
50.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77,466,000	0	0	77,466,000
52. 질병관리청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0	0	0	0
53.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2,122,000	0	0	22,122,000
55. 새만금개발청 (Saemangeum Development & Investment Agency)	1,709,000	0	0	1,709,000
56.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4,936,000	0	0	4,936,000
합계(Total)	296,280,241,739	60,288,402,000	0	356,568,643,739

(단위 : 천원)

2021년도 예산 FY 2021 Budget				증 감 Change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797,000	0	0	797,000	△19,000	0	0	△19,000
85,961,000	0	0	85,961,000	0	0	0	0
10,717,000	0	0	10,717,000	390,000	0	0	390,000
171,391,000	0	0	171,391,000	4,147,000	0	0	4,147,000
47,662,000	0	0	47,662,000	△3,644,000	0	0	△3,644,000
133,433,000	0	0	133,433,000	32,194,000	0	0	32,194,000
8,820,000	0	0	8,820,000	543,000	0	0	543,000
68,328,000	0	0	68,328,000	19,482,000	0	0	19,482,000
32,052,000	0	0	32,052,000	△385,000	0	0	△385,000
102,000	0	0	102,000	90,000	0	0	90,000
35,250,000	0	0	35,250,000	△7,038,000	0	0	△7,038,000
402,718,000	0	0	402,718,000	△22,602,000	0	0	△22,602,000
248,069,000	0	0	248,069,000	△106,122,000	0	0	△106,122,000
479,000	0	0	479,000	8,000	0	0	8,000
1,677,000	0	0	1,677,000	165,000	0	0	165,000
4,284,000	0	0	4,284,000	4,284,000	0	0	4,284,000
693,957,000	0	0	693,957,000	△177,675,000	0	0	△177,675,000
81,293,000	0	0	81,293,000	△62,530,000	0	0	△62,530,000
3,637,000	0	0	3,637,000	△1,489,000	0	0	△1,489,000
1,526,000	0	0	1,526,000	1,310,000	0	0	1,310,000
452,879,000	0	0	452,879,000	△118,727,000	0	0	△118,727,000
863,925,000	0	0	863,925,000	△5,740,000	0	0	△5,740,000
2,840,000	0	0	2,840,000	△659,000	0	0	△659,000
44,786,000	0	0	44,786,000	△8,166,000	0	0	△8,166,000
9,515,000	0	0	9,515,000	20,000	0	0	20,000
88,775,000	0	0	88,775,000	11,309,000	0	0	11,309,000
2,568,000	0	0	2,568,000	2,568,000	0	0	2,568,000
22,723,000	0	0	22,723,000	601,000	0	0	601,000
5,214,000	0	0	5,214,000	3,505,000	0	0	3,505,000
6,872,000	0	0	6,872,000	1,936,000	0	0	1,936,000
287,337,145,030	93,513,725,000	0	380,850,870,030	△8,943,096,709	33,225,323,000	0	24,282,226,291

라. 성질별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by Objects)

구 분 Classification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11. 재산수입 (Property Income)	3,989,838
51. 관유물대여료 (Rent From Land & Buildings)	73,696
52. 정부출자수입 (Dividends & Profits)	822,239
53. 전대차관이자수입 (Interest from Tied Loans)	1,615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Others)	3,092,288
12. 경상이전수입 (Current Transfer)	6,375,534
56.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Fine & Confiscation)	3,132,047
57. 변상금 및 위약금 (Indemnities & Penalties)	465,619
58. 가산금 (Penalties to Delinquency)	781,464
59. 기타경상이전수입 (Others)	1,996,404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Sales of Goods & Services)	889,123
62. 병원수입 (Hospital Income)	11,082
64. 입장료수입 (Admission Fee)	4,569
65. 면허료 및 수수료 (License & Commission Fee)	796,445
66. 입학금 및 수업료 (School Entrance & Tuition Fee)	2,516
67. 항공항만 및 용수수입 (Revenues from airport, Harbors & Water)	6,577
68. 실습수입 (Revenues from School Experiments)	4,356
69. 잡수입 (Other)	63,578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21년도 예산 FY 2021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5,304,107	1,314,269	32.9
77,640	3,944	5.4
822,239	0	0
1	△1,614	△99.9
4,404,227	1,311,939	42.4
6,347,872	△27,662	△0.4
3,395,379	263,332	8.4
296,190	△169,429	△36.4
607,225	△174,239	△22.3
2,049,078	52,674	2.6
838,740	△50,383	△5.7
13,047	1,965	17.7
5,620	1,051	23.0
737,828	△58,617	△7.4
766	△1,750	△69.6
6,737	160	2.4
4,360	4	0.1
70,382	6,804	10.7

구 분 Classification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14. 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378,337
64. 입장료수입 (Admission Fee)	15,468
65. 면허료 및 수수료 (License & Commission Fee)	329,870
66. 입학금 및 수업료 (School Entrance & Tuition Fee)	314
69. 잡수입 (Other)	32,685
15. 관유물매각대 (Sales Proceeds of Government Owned Properties)	98,272
71. 고정자산매각대 (Sales of Capital Assets)	11,243
72.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Sales of land & Intangible Assets)	52,454
73.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 (Sales of Inventory & Current Assets)	34,575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Treasury Loan & Sub-Lease Loan)	3,121
75. 융자원금회수 (Collection of Principals A/C's)	733
77. 전대차관원금회수 (Collection of Counterpart Sub-Loan)	2,388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Trust from Other & Others from Other A/C)	60,717,068
91. 전입금 (Transfer from Gen. A/C)	428,666
94. 예수금 (Collection of Trust Fund)	60,288,402
합계 (Total)	72,451,294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21년도 예산 FY 2021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288,316	△90,021	△23.8
11,500	△3,968	△25.7
245,689	△84,181	△25.5
325	11	3.5
30,802	△1,883	△5.8
112,253	13,981	14.2
7,582	△3,661	△32.6
62,766	10,312	19.7
41,905	7,330	21.2
291	△2,830	△90.7
234	△499	△68.1
57	△2,331	△97.6
93,936,691	33,219,623	54.7
422,966	△5,700	△1.3
93,513,725	33,225,323	55.1
106,828,270	34,376,976	47.4

2-2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가. 총괄표

구 분 Classification	2020년도 본예산 FY 2020 Main Budget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73,914,508	20.7
2.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19,744,805	5.5
3. 통일·외교 (National Unification & Foreign Affairs)	3,018,244	0.8
4. 국방 (National Defense)	50,392,735	14.1
5. 교육 (Education)	72,284,435	20.3
6.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3,727,550	1.0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4,960,628	1.4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62,280,324	17.5
9. 보건 (Health)	10,246,461	2.9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10,401,087	2.9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11,329,486	3.2
12.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17,916,473	5.0
13. 통신 (Communication)	430,227	0.1
14. 국토 및 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5,575,884	1.6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6,945,797	1.9
16. 예비비 (Reserve Fund)	3,400,000	1.0
합 계 (Total)	356,568,644	10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20년도 추경예산 FY 2020 Supplementary Budget		2021년도 예산 FY 2021 Budget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추경예산 대비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73,914,508	20.7	77,475,659	20.3	3,561,151	4.8	3,561,151	4.8
19,744,805	5.5	21,221,199	5.6	1,476,394	7.5	1,476,394	7.5
3,018,244	0.8	3,098,422	0.8	80,178	2.7	80,178	2.7
50,392,735	14.1	53,084,447	13.9	2,691,712	5.3	2,691,712	5.3
72,284,435	20.3	70,527,147	18.5	△1,757,288	△2.4	△1,757,288	△2.4
3,727,550	1.0	3,950,646	1.0	223,096	6.0	223,096	6.0
4,960,628	1.4	5,524,884	1.5	564,256	11.4	564,256	11.4
62,280,324	17.5	68,585,884	18.0	6,305,560	10.1	6,305,560	10.1
10,246,461	2.9	11,371,957	3.0	1,125,496	11.0	1,125,496	11.0
10,401,087	2.9	10,088,381	2.6	△312,706	△3.0	△312,706	△3.0
11,329,486	3.2	13,830,594	3.6	2,501,108	22.1	2,501,108	22.1
17,916,473	5.0	18,081,927	4.7	165,454	0.9	165,454	0.9
430,227	0.1	584,372	0.2	154,145	35.8	154,145	35.8
5,575,884	1.6	7,335,288	1.9	1,759,404	31.6	1,759,404	31.6
6,945,797	1.9	7,490,063	2.0	544,266	7.8	544,266	7.8
3,400,000	1.0	8,600,000	2.3	5,200,000	152.9	5,200,000	152.9
356,568,644	100.0	380,850,870	100.0	24,282,226	6.8	24,282,226	6.8

나. 소관별 세출예산(Expenditure Budget by Agencies)

구 분 Classification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Office of the President & Office of National Security)	99,023
2. 대통령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91,616
3. 국회 (National Assembly)	678,736
4. 대법원 (Supreme Court)	1,706,409
5.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52,713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730,121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32,476
8. 감사원 (Board of Audit & Inspection)	135,643
9.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689,530
1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Prime Minister's)	598,538
11.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17,421,225
• 예비비 (Contingency)	3,400,000
• 일반경비 (General Adm.)	14,021,225
1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72,097,627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7,170,723
14.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617,199
15.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368,569
16.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3,807,882
17.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33,472,258
18.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55,001,086
19.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2,736,013
20.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7,500,662
21.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5,403,473
22. 보건복지부 (Ministry for Health & Welfare)	51,231,555
23.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5,582,123
24.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7,118,404
25.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516,366
26.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800,547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21년도 예산 FY 2021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97,607	△1,416	△1.4
92,687	1,071	1.2
705,318	26,582	3.9
1,718,024	11,615	0.7
52,602	△111	△0.2
385,228	△344,893	△47.2
32,918	442	1.4
135,833	190	0.1
746,000	56,470	8.2
629,518	30,980	5.2
25,165,416	7,744,191	44.5
8,600,000	5,200,000	152.9
16,565,416	2,544,191	18.1
70,429,061	△1,668,566	△2.3
7,763,860	593,137	8.3
2,736,149	118,950	4.5
329,355	△39,214	△10.6
3,989,341	181,459	4.8
35,843,659	2,371,401	7.1
56,746,184	1,745,098	3.2
2,886,127	150,114	5.5
6,766,184	△734,478	△9.8
6,623,321	1,219,848	22.6
55,634,493	4,402,938	8.6
6,188,223	606,100	10.9
7,529,928	411,524	5.8
547,738	31,372	6.1
22,967,343	2,166,796	10.4

구 분 Classification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27.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3,111,131
28.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547,684
29. 국가보훈처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5,507,793
30. 인사혁신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3,254,809
31.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40,320
32.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552,564
33.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37,827
34.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62,788
35. 공정거래위원회 (Korea Fair Trade Commission)	137,256
36.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773,195
37.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90,088
38.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111,122
3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0
40.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1,837,356
41.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581,194
43. 통계청 (Statistics Korea)	483,281
44.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240,035
45.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16,680,442
46. 경찰청 (National Police Agency)	11,580,579
47.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201,134
48.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940,947
49.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885,736
50.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1,691,550
52. 질병관리청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0
53.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390,920
5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National Agency of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328,868
55. 새만금개발청 (Saemangeum Development & Investment Agency)	330,940
56.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1,490,427
57.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Special Investigation Commission on Humidifier Disinfectants & 4.16 Sewol Ferry Disasters)	18,141
58.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ruth Commission)	0
합 계 (Total)	356,568,644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21년도 예산 FY 2021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3,438,440	327,309	10.5
7,090,786	1,543,102	27.8
5,663,279	155,486	2.8
3,772,408	517,599	15.9
40,737	417	1.0
604,550	51,986	9.4
37,931	104	0.3
52,068	△10,720	△17.1
146,291	9,035	6.6
3,705,172	931,977	33.6
90,835	747	0.8
155,091	43,969	39.6
36,842	36,842	순증
1,867,962	30,606	1.7
596,201	15,007	2.6
415,297	△67,984	△14.1
244,368	4,333	1.8
16,996,420	315,978	1.9
11,926,699	346,120	3.0
220,761	19,627	9.8
1,002,613	61,666	6.6
976,019	90,283	10.2
1,938,911	247,361	14.6
378,868	378,868	순증
425,659	34,739	8.9
431,680	102,812	31.3
296,227	△34,713	△10.5
1,540,669	50,242	3.4
5,782	△12,359	△68.1
10,187	10,187	순증
380,850,870	24,282,226	6.8

다. 기능별 세출예산(Expenditure Budget by Function)

기능 Function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73,914,508	20.7
1) 입법 및 선거관리 (Legislation & Election Administration)	1,408,857	0.4
2) 국정운영 (National Administration)	600,966	0.2
3) 지방행정·재정지원 (Support for Local Administration & Finance)	52,511,814	14.7
4) 재정·금융 (Budget & Finance)	15,931,367	4.5
5) 정부자원관리 (Management of Government Resources)	870,249	0.2
6) 일반행정 (General Administration)	2,591,255	0.7
2.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19,744,805	5.5
1) 법원 및 헌재 (Law Court & Constitutional Court)	1,759,122	0.5
2) 법무 및 검찰 (Justice & Prosecution)	3,807,882	1.1
3) 경찰 (Police)	11,641,584	3.3
4) 해경 (Maritime Police)	1,484,945	0.4
5) 재난관리 (Disaster Management)	1,051,272	0.3
3. 통일·외교 (National Unification & Foreign Affairs)	3,018,244	0.8
1) 통일 (National Unification)	401,045	0.1
2) 외교·통상 (Foreign Affairs & Trade)	2,617,199	0.7
4. 국방 (National Defense)	50,392,735	14.1
1) 병력운영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19,860,001	5.6
2) 전력유지 (Maintenance of Military Force)	13,612,257	3.8
3) 방위력개선 (National Defense Improvement)	16,680,442	4.7
4) 병무행정 (Military Affairs Administration)	240,035	0.1
5. 교육 (Education)	72,284,435	20.3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Pre/Primary/Secondary School Education)	60,324,475	16.9
2) 고등교육 (College & University Education)	11,278,944	3.2
3) 평생·직업교육 (Lifelong & Vocational Education)	544,516	0.2
4) 교육일반 (General Education)	136,500	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21년도 예산 FY 2021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구 성 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77,475,659	20.3	3,561,150	4.8
1,090,546	0.3	△318,311	△22.6
631,915	0.2	30,949	5.1
53,067,422	13.9	555,608	1.1
18,783,857	4.9	2,852,490	17.9
1,269,036	0.3	398,787	45.8
2,632,883	0.7	41,628	1.6
21,221,199	5.6	1,476,395	7.5
1,770,626	0.5	11,504	0.7
3,989,341	1.0	181,460	4.8
11,989,057	3.1	347,473	3.0
1,525,681	0.4	40,736	2.7
1,946,494	0.5	895,222	85.2
3,098,422	0.8	80,178	2.7
362,273	0.1	△38,772	△9.7
2,736,149	0.7	118,950	4.5
53,084,447	13.9	2,691,712	5.3
20,587,231	5.4	727,230	3.7
15,256,428	4.0	1,644,171	12.1
16,996,420	4.5	315,978	1.9
244,368	0.1	4,333	1.8
70,527,147	18.5	△1,757,288	△2.4
58,428,301	15.3	△1,896,174	△3.1
11,412,441	3.0	133,497	1.2
548,403	0.1	3,887	0.7
138,002	0.0	1,502	1.1

기 능 Function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금 액 Amount	구 성 비(%) Composition
6.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3,727,550	1.0
1) 문화예술 (Culture & Arts)	2,493,515	0.7
2) 관광 (Tourism)	8,811	0.0
3) 체육 (Sports)	3,211	0.0
4) 문화재 (Cultural Properties)	940,947	0.3
5) 문화 및 관광일반 (General Culture & Tourism)	281,066	0.1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4,960,628	1.4
1) 해양환경 (Marine Environment)	177,140	0.0
2) 환경일반 (General Environment)	4,783,488	1.3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62,280,324	17.5
1) 기초생활보장 (Basic Livelihood Guarantee)	13,965,939	3.9
2) 취약계층지원 (Support for the Underprivileged)	3,580,949	1.0
3) 공적연금 (Public Pension)	3,070,631	0.9
4) 보훈 (Patriots & Veterans Affairs)	5,507,793	1.5
5) 주택 (Housing)	2,572,616	0.7
6) 사회복지일반 (General Social Welfare)	1,079,809	0.3
7) 아동·보육 (Children and Child Care Centers)	8,467,464	2.4
8) 노인 (Senior)	16,400,353	4.6
9) 여성·가족·청소년 (Women, Family, and Youth)	516,366	0.1
10) 고용 (Employment)	6,493,927	1.8
11) 노동 (Labor)	99,694	0.0
12) 고용노동일반 (Employment and Labor (General))	524,783	0.1
9. 보건 (Health)	10,246,461	2.9
1) 보건의료 (Healthcare)	1,378,366	0.4
2)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8,315,531	2.3
3) 식품의약품안전 (Food & Drug Safety)	552,564	0.2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10,401,087	2.9
1) 농업·농촌 (Agriculture & Farming Villages)	8,386,398	2.4
2) 임업·산촌 (Forestry & Mountain Villages)	1,691,550	0.5
3) 수산·어촌 (Fisheries & Fishing Villages)	323,139	0.1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21년도 예산 FY 2021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구 성 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3,950,646	1.0	223,096	6.0
2,642,462	0.7	148,947	6.0
8,629	0.0	△182	△2.1
3,128	0.0	△83	△2.6
1,002,613	0.3	61,666	6.6
293,814	0.1	12,748	4.5
5,524,884	1.5	564,256	11.4
175,841	0.0	△1,299	△0.7
5,349,043	1.4	565,555	11.8
68,585,884	18.0	6,305,560	10.1
15,324,343	4.0	1,358,404	9.7
3,972,988	1.0	392,039	10.9
3,578,641	0.9	508,010	16.5
5,663,279	1.5	155,486	2.8
3,704,694	1.0	1,132,078	44.0
1,110,914	0.3	31,105	2.9
8,514,066	2.2	46,602	0.6
18,639,293	4.9	2,238,940	13.7
547,738	0.1	31,372	6.1
6,855,547	1.8	361,620	5.6
125,360	0.0	25,666	25.7
549,021	0.1	24,238	4.6
11,371,957	3.0	1,125,496	11.0
1,915,214	0.5	536,848	38.9
8,852,193	2.3	536,662	6.5
604,550	0.2	51,986	9.4
10,088,381	2.6	△312,706	△3.0
7,742,203	2.0	△644,195	△7.7
1,938,911	0.5	247,361	14.6
407,267	0.1	84,128	26.0

기능 Function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11,329,486	3.2
1) 산업금융지원 (Support for Industry Finance)	264,000	0.1
2) 무역 및 투자유치 (Trade & Investment Inducement)	992,217	0.3
3) 산업·중소기업일반 (General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2,348,811	0.7
4) 산업혁신지원 (Support for Industrial Innovation)	4,536,736	1.3
5) 창업 및 벤처 (Start-up and Venture)	668,033	0.2
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upport)	2,519,689	0.7
12.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17,916,473	5.0
1) 도로 (National Road)	7,430,829	2.1
2) 철도 (Railroad)	6,808,587	1.9
3) 해운·항만 (Marine Transportation & Ports)	1,684,863	0.5
4) 항공·공항 (Aviation & Airport)	24,736	0.0
5) 물류 등 기타 (Distribution & Others)	1,967,458	0.6
13. 통신 (Communication)	430,227	0.1
1) 방송통신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235,821	0.1
2) 정보통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194,406	0.1
14. 국토 및 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5,575,884	1.6
1) 수자원 (Water Resources)	1,290,906	0.4
2) 지역 및 도시 (Region & City)	4,211,718	1.2
3) 산업단지 (Industrial Complex)	73,260	0.0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6,945,797	1.9
1) 과학기술연구지원 (Support for Science & Technology Research)	3,373,471	0.9
2) 과학기술일반 (General Science & Technology)	567,911	0.2
3) 과학기술인력 및 문화 (Science and Technology - Human Resources and Culture)	116,641	0.0
4) 과학기술연구개발 (Science and Technology - Research Development)	2,887,774	0.8
16. 예비비 (Reserve Fund)	3,400,000	1.0
1) 예비비 (Reserve Fund)	3,400,000	1.0
합 계 (Total)	356,568,644	10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21년도 예산 FY 2021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구 성 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13,830,594	3.6	2,501,108	22.1
36,500	0.0	△227,500	△86.2
1,115,320	0.3	123,103	12.4
3,147,835	0.8	799,024	34.0
5,616,864	1.5	1,080,128	23.8
973,147	0.3	305,114	45.7
2,940,928	0.8	421,239	16.7
18,081,927	4.7	165,454	0.9
5,949,521	1.6	△1,481,308	△19.9
8,082,651	2.1	1,274,064	18.7
1,828,237	0.5	143,374	8.5
24,591	0.0	△145	△0.6
2,196,927	0.6	229,469	11.7
584,372	0.2	154,145	35.8
232,079	0.1	△3,742	△1.6
352,293	0.1	157,887	81.2
7,335,288	1.9	1,759,404	31.6
1,591,452	0.4	300,546	23.3
5,624,451	1.5	1,412,733	33.5
119,385	0.0	46,125	63.0
7,490,063	2.0	544,266	7.8
3,412,625	0.9	39,154	1.2
602,017	0.2	34,106	6.0
161,453	0.0	44,812	38.4
3,313,968	0.9	426,194	14.8
8,600,000	2.3	5,200,000	152.9
8,600,000	2.3	5,200,000	152.9
380,850,870	100.0	24,282,226	6.8

라. 성질별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by Functions)

구 분 Classification	2020년도 예산 FY 2020 Budget
10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38,250,416
11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38,250,416
200 물건비 (Goods Services)	22,023,154
210 운영비 (Office Operation)	16,842,757
220 여비 (Travel Expenses)	615,244
230 특수활동비 (Special Operation Expenses)	253,115
240 업무추진비 (Management Expenses)	178,726
250 직무수행경비 (Work Operation Expenses)	1,003,089
260 연구용역비 (Research and Service Expenses)	2,440,693
270 안보비 (National Security Expenses)	689,530
300 이전지출 (Current Transfers)	209,536,690
310 보전금 (Compensation)	16,018,594
320 민간이전 (Transfers to Privates)	12,057,246
330 자치단체이전 (Transfers to Local Gov't)	152,385,772
340 해외이전 (Transfers to Abroad)	1,581,196
350 일반출연금 (General Funding)	11,525,559
360 연구개발출연금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s)	15,968,323
400 자산취득 (Asset Acquisition)	22,778,825
410 건설보상비 (Compensation Cost for Construction & Facilities)	204,616
420 건설비 (Construction & Facilities Assets)	6,441,567
430 유형자산 (Tangible Assets)	14,406,781
440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43,651
460 융자금 (Lending)	0
460 출자금 (Investment)	1,618,429
490 지분취득비 (Share of Assets)	63,782
50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9,498,563
51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9,498,563
600 전출금 등 (Transfers)	51,078,691
610 전출금 등 (Intra-Gov't Transactions)	51,078,691
700 예비비 및 기타 (Contingency & Others)	3,402,305
710 예비비 및 기타 (Reserve Fund & Others)	3,402,305
합계 (Total)	356,568,644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21년도 예산 FY 2021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39,510,935	1,260,518	3.3
39,510,935	1,260,518	3.3
22,953,353	930,199	4.2
17,596,531	753,774	4.5
585,590	△29,653	△4.8
237,888	△15,227	△6.0
170,326	△8,400	△4.7
1,019,660	16,572	1.7
2,597,357	156,664	6.4
746,000	56,470	8.2
219,177,309	9,640,619	4.6
16,658,318	639,724	4.0
13,467,027	1,409,781	11.7
156,706,628	4,320,856	2.8
1,761,000	179,804	11.4
12,839,798	1,314,239	11.4
17,744,538	1,776,215	11.1
24,535,411	1,756,586	7.7
211,872	7,256	3.5
7,415,185	973,618	15.1
14,658,960	252,180	1.8
66,232	22,581	51.7
0	0	0
2,162,653	544,224	33.6
20,509	△43,273	△67.8
10,962,656	1,464,093	15.4
10,962,656	1,464,093	15.4
55,109,052	4,030,361	7.9
55,109,052	4,030,361	7.9
8,602,154	5,199,850	152.8
8,602,154	5,199,850	152.8
380,850,870	24,282,226	6.8

마. 2021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기능별 성질별 분류

구분 Classification	인건비(100) Personnel Expense					
	계 Total	보수(110-01) Wages	기타직보수(110-02) Wages for Non-Public Officials	상용임금(110-03) Wages for Fixed- Term Contract Employees	일용임금(110-04) Wage for Daily Employees	연가보상비(110-05) Stipends for Non- Used Vacations
1.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3,590,256	3,196,395	72,970	228,314	59,144	33,434
2.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 Safety)	14,044,479	13,375,057	207,598	324,921	4,372	132,531
3. 통일·외교 (National Unification & Foreign Affairs)	630,327	423,072	3,268	199,619	2,745	1,624
4. 국방 (National Defense)	15,341,846	14,891,718	20,114	245,528	4,316	180,170
5. 교육 (Education)	2,111,339	1,934,407	1,597	167,736	930	6,669
6.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503,977	291,413	13,463	192,137	4,139	2,825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160	0	0	160	0	0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1,023,282	733,347	132,485	118,885	30,599	7,967
9. 보건 (Health)	221,007	140,690	3,111	75,487	215	1,504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915,508	646,701	67,195	149,051	45,818	6,743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244,227	218,591	12,730	10,836	64	2,004
12.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536,295	459,952	55,946	15,306	304	4,788
13. 통신 (Communication)	103,194	92,191	7,373	2,463	114	1,053
14. 국토 및 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26,446	19,744	79	6,405	4	214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218,589	186,243	6,655	23,674	97	1,920
16. 예비비 (Reserve Fund)	0	0	0	0	0	0
합계 (Total)	39,510,935	36,609,520	604,582	1,760,524	152,860	383,449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물건비(200) Goods Service	이전지출(300) Current Transfer	자산취득(400) Asset Acquisition	상환지출(500) Repayment of Loans	전출금등(600) Transfers	예비비및기타(700) Contingency & Others	합 계 Total
2,830,555	54,946,481	1,774,034	10,958,248	3,374,334	1,750	77,475,659
3,441,479	2,481,839	1,102,716	0	150,381	305	21,221,199
591,286	1,697,040	76,110	3,659	100,000	0	3,098,422
12,392,206	4,798,283	17,462,747	0	3,089,365	0	53,084,447
448,709	62,335,512	982,181	749	4,648,657	0	70,527,147
606,668	2,192,846	441,913	0	205,230	13	3,950,646
19,049	102,529	54,102	0	5,349,043	0	5,524,884
592,602	58,658,029	204,938	0	8,106,952	80	68,585,884
339,783	10,409,867	99,919	0	301,381	0	11,371,957
648,876	1,390,216	487,156	0	6,646,619	6	10,088,381
171,260	7,982,156	63,881	0	5,369,070	1	13,830,594
311,379	3,675,217	274,302	0	13,284,733	0	18,081,927
75,035	386,870	7,787	0	11,486	0	584,372
262,817	1,279,196	1,354,285	0	4,412,544	0	7,335,288
221,646	6,841,228	149,342	0	59,257	0	7,490,063
0	0	0	0	0	8,600,000	8,600,000
22,953,353	219,177,309	24,535,411	10,962,656	55,109,052	8,602,154	380,850,870

바. 2021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성질별 기능별 분류

구 분 Classification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외교·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국 방 National Defense	교 육 Education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10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3,590,256	14,044,479	630,327	15,341,846	2,111,339	503,977
110 보수 (Wages)	3,196,395	13,375,057	423,072	14,891,718	1,934,407	291,413
110 기타직 보수 (Wages for non-public Officials)	72,970	207,598	3,268	20,114	1,597	13,463
110 상용임금 (Wages for Fixed-term employees)	228,314	324,921	199,619	245,528	167,736	192,137
110 일용임금 (Daily Wages)	59,144	4,372	2,745	4,316	930	4,139
110 연가보상비 (Stipends for non-used vacations)	33,434	132,531	1,624	180,170	6,669	2,825
200 물건비 (Goods Services)	2,830,555	3,441,479	591,286	12,392,206	448,709	606,668
210 운영비 (Office Operation)	1,487,308	2,309,951	486,958	10,552,132	389,466	523,532
220 여비 (Travel Expenses)	169,735	103,736	51,898	153,388	6,400	14,748
230 특수활동비 (Special Operation Expenses)	23,187	94,481	2,554	114,476	0	0
240 업무추진비 (Management Expenses)	46,846	33,004	19,063	48,782	1,318	2,945
250 직무수행경비 (Work Operation Expenses)	126,658	794,672	2,231	44,282	21,869	2,611
260 연구용역비 (Research and Service Expenses)	230,821	105,636	28,583	1,479,146	29,655	62,833
270 안보비 (National Security Expenses)	746,000	0	0	0	0	0
300 이전지출 (Current Transfers)	54,946,481	2,481,839	1,697,040	4,798,283	62,335,512	2,192,846
310 보전금 (Compensation)	74,405	210,879	46,721	605,299	77,471	16,432
320 민간이전 (Transfers to Private Sector)	332,707	450,356	154,502	456,228	446,962	1,315,859
330 자치단체이전 (Transfers to Local Gov't)	52,987,349	1,501,023	18,646	0	54,303,766	678,398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사회복지 Social Welfare	보건 Health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통신 Communication	국토 및 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예비비 Reserve Funds	합계 Total
160	1,023,282	221,007	915,508	244,227	536,295	103,194	26,446	218,589	0	39,510,935
0	733,347	140,690	646,701	218,591	459,952	92,191	19,744	186,243	0	36,609,520
0	132,485	3,111	67,195	12,730	55,946	7,373	79	6,655	0	604,582
160	118,885	75,487	149,051	10,836	15,306	2,463	6,405	23,674	0	1,760,524
0	30,599	215	45,818	64	304	114	4	97	0	152,860
0	7,967	1,504	6,743	2,004	4,788	1,053	214	1,920	0	383,449
19,049	592,602	339,783	648,876	171,260	311,379	75,035	262,817	221,646	0	22,953,353
5,582	460,197	182,545	557,159	123,424	175,122	56,346	108,050	178,758	0	17,596,531
250	17,924	10,386	22,041	13,300	12,437	3,063	1,621	4,662	0	585,590
0	0	0	0	0	0	2,748	0	442	0	237,888
22	6,121	856	2,515	3,522	2,432	647	524	1,730	0	170,326
420	13,504	1,254	3,730	2,345	3,011	898	288	1,888	0	1,019,660
12,775	94,856	144,742	63,430	28,670	118,376	11,333	152,335	34,166	0	2,597,357
0	0	0	0	0	0	0	0	0	0	746,000
102,529	58,658,029	10,409,867	1,390,216	7,982,156	3,675,217	386,870	1,279,196	6,841,228	0	219,177,309
520	7,670,369	7,937,434	17,309	1,116	171	30	5	156	0	16,658,318
53,811	4,916,132	1,249,519	414,088	2,156,280	754,997	20,536	705,249	39,801	0	13,467,027
17,704	45,137,537	463,250	554,015	348,123	133,648	0	549,983	13,186	0	156,706,628

구 분 Classification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외교·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국 방 National Defense	교 육 Education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340 해외이전 (Transfers to Abroad)	300,483	7,883	554,285	547,043	92,121	8,784
350 일반출연금 (General Funds)	730,715	147,206	922,886	0	5,276,316	25,000
360 연구개발출연금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s)	520,823	164,491	0	3,189,712	2,138,876	148,372
400 자산취득 (Asset Acquisition)	1,774,034	1,102,716	76,110	17,462,747	982,181	441,913
410 건설보상비 (Compensation Cost for Construction & Facilities)	0	0	0	70,544	3,660	20,115
420 건설비 (Construction & Facilities Assets)	244,604	383,262	32,568	4,287,676	796,779	189,633
430 유형자산 (Tangible Assets)	269,411	709,761	43,536	13,103,140	168,933	116,383
440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2,213	9,692	5	1,387	809	982
460 출자금 (Investment)	1,254,097	0	0	0	12,000	114,800
490 지분취득비 (Share of Assets)	3,709	0	0	0	0	0
50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10,958,248	0	3,659	0	749	0
51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10,958,248	0	3,659	0	749	0
600 전출금 등 (Transfers)	3,374,334	150,381	100,000	3,089,365	4,648,657	205,230
610 전출금 등 (Transfers and Others)	3,374,334	150,381	100,000	3,089,365	4,648,657	205,230
700 예비비 및 기타 (Contingency & Others)	1,750	305	0	0	0	13
710 예비비 및 기타 (Reserve Fund & Others)	1,750	305	0	0	0	13
합계 (Total)	77,475,659	21,221,199	3,098,422	53,084,447	70,527,147	3,950,646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사회복지 Social Welfare	보건 Health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통신 Communication	국토 및 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예비비 Reserve Funds	합계 Total
1,401	66,741	24,057	128,286	4,181	8,358	4,398	2,643	10,335	0	1,761,000
29,093	863,104	56,248	32,572	2,490,097	2,022,958	130,081	21,316	92,206	0	12,839,798
0	4,145	679,358	243,947	2,982,359	755,085	231,825	0	6,685,544	0	17,744,538
54,102	204,938	99,919	487,156	63,881	274,302	7,787	1,354,285	149,342	0	24,535,411
0	5,857	8,962	67,382	0	0	0	35,282	70	0	211,872
43,460	109,538	42,873	323,676	17,181	69,772	2,948	750,242	120,971	0	7,415,185
10,642	48,561	47,195	74,261	8,396	21,501	4,789	4,945	27,508	0	14,658,960
0	40,982	890	1,836	1,804	4,528	50	260	793	0	66,232
0	0	0	20,000	36,500	178,500	0	546,756	0	0	2,162,653
0	0	0	0	0	0	0	16,800	0	0	20,509
0	0	0	0	0	0	0	0	0	0	10,962,656
0	0	0	0	0	0	0	0	0	0	10,962,656
5,349,043	8,106,952	301,381	6,646,619	5,369,070	13,284,733	11,486	4,412,544	59,257	0	55,109,052
5,349,043	8,106,952	301,381	6,646,619	5,369,070	13,284,733	11,486	4,412,544	59,257	0	55,109,052
0	80	0	6	1	0	0	0	0	8,600,000	8,602,154
0	80	0	6	1	0	0	0	0	8,600,000	8,602,154
5,524,884	68,585,884	11,371,957	10,088,381	13,830,594	18,081,927	584,372	7,335,288	7,490,063	8,600,000	380,850,870

03 특별회계규모 및 개요

Special Accounts



회계별 Account	2020년도 본예산 FY 2020 Main Budget
(15) 농어촌구조개선 (Agri. & Fisheries Structure Adjustment S/A)	11,995,945,000
(17) 교통시설 (Transportation Facilities S/A)	15,816,982,000
(18) 등기 (Registration S/A)	332,466,000
(20) 교도작업 (Prison Operation S/A)	127,177,000
(24) 에너지 및 자원사업 (Energy & Resources Management S/A)	5,536,333,000
(25) 환경개선 (Environment Improvement S/A)	6,391,305,000
(26)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s S/A)	2,072,511,000
(29) 우체국보험 (Postal Insurance Service S/A)	996,577,000
(34) 주한미군기지이전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of U.S. Armed Forces in Korea S/A)	699,679,000
(3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Construction of Administrative City S/A)	340,638,000
(36) 국방·군사시설이전 (Relocation of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 S/A)	926,557,000
(37) 혁신도시건설 (Construction of Innovation City S/A)	342,291,000
(3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Construction of Cultural Hub City of Asia S/A)	112,960,000
(39) 국가균형발전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A)	9,520,448,000
(40) 유아교육지원(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 S/A)	4,031,608,000
(51) 양곡관리 (Grain Management S/A)	2,106,505,000
(52) 책임운영기관 (Agency)	1,082,680,000
(56) 조달 (Public Procurement S/A)	406,294,000
(57) 우편사업 (Postal Programs S/A)	4,637,333,000
(58) 우체국예금 (Postal Office Deposit S/A)	3,064,437,000
총계 (Gross Total of Special Accounts)	70,540,726,000
순계 (회계간, 계정간거래 제외) (Net Total of Special Accounts)	65,025,123,000
순계 (계정간거래 제외) (Net Total of Special Accounts)	68,459,693,000
순계 (일반지출) (Net Total of Special Accounts)	55,079,989,0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20년도 추경예산 FY 2020 Supplementary Budget	2021년도 예산 FY 2021 Budget	2020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2020년도 추경예산 대비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11,995,945,000	12,122,279,000	126,334,000	1.1	126,334,000	1.1
15,816,982,000	21,343,003,000	5,526,021,000	34.9	5,526,021,000	34.9
332,466,000	358,792,000	26,326,000	7.9	26,326,000	7.9
127,177,000	138,372,000	11,195,000	8.8	11,195,000	8.8
5,536,333,000	5,530,827,000	△5,506,000	△0.1	△5,506,000	△0.1
6,391,305,000	7,443,535,000	1,052,230,000	16.5	1,052,230,000	16.5
2,072,511,000	2,554,124,000	481,613,000	23.2	481,613,000	23.2
996,577,000	1,007,268,000	10,691,000	1.1	10,691,000	1.1
699,679,000	739,754,000	40,075,000	5.7	40,075,000	5.7
340,638,000	436,102,000	95,464,000	28.0	95,464,000	28.0
926,557,000	1,005,714,000	79,157,000	8.5	79,157,000	8.5
342,291,000	371,248,000	28,957,000	8.5	28,957,000	8.5
112,960,000	144,273,000	31,313,000	27.7	31,313,000	27.7
9,520,448,000	10,623,021,000	1,102,573,000	11.6	1,102,573,000	11.6
4,031,608,000	3,916,771,000	△114,837,000	△2.8	△114,837,000	△2.8
2,106,505,000	2,057,333,000	△49,172,000	△2.3	△49,172,000	△2.3
1,082,680,000	1,068,589,000	△14,091,000	△1.3	△14,091,000	△1.3
406,294,000	464,271,400	57,977,400	14.3	57,977,400	14.3
4,637,333,000	4,537,203,000	△100,130,000	△2.2	△100,130,000	△2.2
3,064,437,000	3,166,733,000	102,296,000	3.3	102,296,000	3.3
70,540,726,000	79,029,212,400	8,488,486,400	12.0	8,488,486,400	12.0
65,025,123,000	72,663,211,600	7,638,088,600	11.7	7,638,088,600	11.7
68,459,693,000	76,797,366,000	8,337,673,000	12.2	8,337,673,000	12.2
55,079,989,000	60,198,115,600	5,118,126,600	9.3	5,118,126,600	9.3

04 계속비

Multiyear Expenses



회계 및 소관	사업별	계속비총액	계속비연부액			
			2013	2014	2015	2016
	2020 예산	2,480,734,000	37,369,000	229,956,000	540,943,000	508,411,000
	2021 예산	2,483,266,000	37,369,000	229,956,000	540,943,000	508,411,000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교통부)	1. 지역간선국도 8차건설					
	2020 예산	1,575,732,000	37,369,000	229,956,000	302,543,000	323,011,000
	2021 예산	1,579,152,000	37,369,000	229,956,000	302,543,000	323,011,000
	2. 익산-대야복선전철					
	2020 예산	400,798,000	-	-	93,000,000	79,000,000
	2021 예산	400,476,000	-	-	93,000,000	79,000,000
	3. 군장산단인입철도건설					
	2020 예산	504,204,000	-	-	145,400,000	106,400,000
	2021 예산	503,638,000	-	-	145,400,000	106,400,000

(단위 : 천원)

계 속 비 연 부 액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505,852,000	243,651,000	215,752,000	96,540,000	102,260,000	—
505,852,000	243,651,000	215,752,000	96,540,000	104,792,000	—
320,852,000	221,351,000	100,752,000	21,940,000	17,958,000	—
320,852,000	221,351,000	100,752,000	21,940,000	21,378,000	—
80,000,000	14,500,000	68,400,000	36,000,000	29,898,000	—
80,000,000	14,500,000	68,400,000	36,000,000	29,576,000	—
105,000,000	7,800,000	46,600,000	38,600,000	54,404,000	—
105,000,000	7,800,000	46,600,000	38,600,000	53,838,000	—

05 명시이월비

Authorized Carryover Expenses



(단위 : 천원)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20예산	2021예산	증 감
		-	-	-

06 국고채무 부담행위

Act of Treasury to Bear Liabilities



(단위 : 천원)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20예산	2021예산	증 감
		-	-	-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1

제 2 장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01. 기금요약
0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03. 기금수입
04. 기금지출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1

01 기금요약

Summary of Funds



구분 Classification	기금명 Name of Fund
사회보험성기금 Social Security Fund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Teacher's pension fund)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계정성기금 Account Fund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 복권기금 (Lottery Fund) -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금융성기금 Financial Fund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Guarantee Fund)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 Fishing Houses)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 무역보험기금 (Korea Trade Insurance Fund) -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demption Fund)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사업성기금 Project Fund (4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 국제교류기금 (Fund for International Exchanges) - 국제질병퇴치기금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Geum River)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구분 Classification	기금명 Name of Fund
사업성기금 Project Fund (4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Direct Payment Fund for the Promotion of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문화예술진흥기금 (The Korean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 문화재보호기금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und)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 보훈기금 (Patriots and Veterans Fund)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 사학진흥기금 (Private School Promotion Fund)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Fund for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Damage Relief Fund)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Micro Enterprise & Market Promotion Fund) -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Fund for the Patriotic Martyrs and Patriots) -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 양성평등기금 (Gender Equality Fund)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eongsan and Sumjin River) - 영화발전기금 (Film Development Fund) - 원자력기금 (Atomic Energy Fund) - 응급의료기금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Auto Accident Victim Support Fund)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Agricultural Fund for Performance of Free Trade Agreement)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al Industry Foundation Fund) -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 주택도시기금 (National Housing & Urban Fund)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 청소년육성기금 (Youth Fostering Fund) -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합계	총 67개 기금

0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Size of Fund Management



단위 : 조원(In Trillion KRW)

구분 Classification		운용규모 Fund Operation		
		2020년도 FY 2020	2021년도 FY 2021	증감률(%) Rate
운용규모 (Total)		724.8	773.7	6.8
수입	■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172.9	182.2	5.4
	■ 정부내부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184.8	184.6	△0.1
	■ 차입금 (Borrowings)	151.9	198.9	30.9
	■ 여유자금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215.2	208.0	△3.3
지출	■ 사업비 (Project Cost)	148.9	169.8	14.0
	- 사회보험성 (Social Security Fund)	76.7	85.8	11.9
	- 사업성 (Project Fund)	63.0	72.0	14.3
	- 금융성·계정성 (Financial/Account Fund)	9.2	12.0	29.4
	■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2.6	2.6	1.1
	■ 정부내부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334.8	371.7	11.0
	■ 여유자금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238.4	229.5	△3.7

03 기금수입

Fund Revenues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계 Total
총계 (Total)	1,821,841	1,845,957	1,988,920	2,080,224	7,736,941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145,497	40,002	-	38,849	224,348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9,531	855,020	1,763,855	4,919	2,633,324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169,205	42,886	-	28,522	240,614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12,730	48,694	-	-	61,424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139	2,572	-	358	3,068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10,412	3,378	-	2,835	16,625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31,049	9,173	-	3,408	43,629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697,207	102	-	640,379	1,337,688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16,992	5,160	-	4,686	26,839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11,403	151	-	5,110	16,664
국제교류기금 (Korea Foundation Fund)	412	615	-	670	1,697
국제질병퇴치기금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566	-	-	86	651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4,487	6	-	3,890	8,383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7,392	28,182	-	500	36,074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계 Total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1,779	1,146	-	2,179	5,104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Kum River)	1,309	-	-	257	1,566
기술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Fund)	11,866	3,547	-	13,693	29,106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2,515	-	-	126	2,641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1,543	14,740	-	472	16,75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3,820	9,894	-	6,785	20,49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22,824	-	-	3,227	26,05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 Fishing Houses)	341	341	-	2	684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490	1,000	-	3,789	5,279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Direct Payment Fund for the Promotion of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25	23,919	-	228	24,172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16,039	3,487	-	8,982	28,507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2,469	11,072	-	127	13,668
무역보험기금 (Korea Trade Insurance Fund)	12,804	3,500	-	29,842	46,146
문화예술진흥기금 (The Korean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662	2,675	-	1,902	5,239
문화재보호기금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und)	59	1,339	-	20	1,41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9,775	21,559	-	33,479	64,812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10,443	3,739	-	237	14,418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39	1,061	-	-	1,100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계 Total
보훈기금 (Merit Reward Fund)	2,024	2,631	-	3,704	8,360
복권기금 (Lottery Fund)	55,195	3,442	-	6,123	64,76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Korea Teacher Pension Fund)	57,022	9,407	-	63,706	130,135
사법서비스진흥기금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775	4	-	674	1,453
사학진흥기금 (Private School Promotion Fund)	1,727	2,034	-	942	4,70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462	144	-	5,859	6,464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Fund for Advance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960	1,226	-	466	2,652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94,907	14,717	-	72,340	181,964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Damage Relief Fund)	143	7	-	242	39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Micro Enterprise & Market Promotion Fund)	21,361	31,400	-	3,456	56,218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6,923	1,055	-	2,272	10,249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Governmental Fund for Patriotic Martyrs & Independence Fighters)	73	808	-	732	1,613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25,329	3,620	-	66,912	95,862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3	1,971	-	251	2,225
양성평등기금 (Gender Equality Fund)	204	4,677	-	310	5,191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255	-	-	85	34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eongsan and Sumjin River)	937	-	-	239	1,176
영화발전기금 (Film Development Fund)	611	762	-	1,680	3,052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계 Total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Fund for Redemption of Deposit Insurance Fund Bonds)	25,683	—	2,000	2,847	30,529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18,097	398,930	18,255	618,757	1,054,039
원자력기금 (Atomic Energy Fund)	3,159	—	—	1,752	4,911
응급의료기금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220	2,688	—	171	3,079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5,482	2,031	—	2,570	10,083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Auto Accident Victim Support Fund)	536	—	—	2,071	2,60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Agricultural Fund for Performance of Free Trade Agreement)	4,190	872	—	451	5,5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8,306	3,636	—	4,830	16,772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 Power Industry Basis Fund)	25,024	32,943	—	5,973	63,940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10,848	4,605	—	732	16,18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13,505	60	—	31,392	44,957
주택도시기금 (National Housing & Urban Fund)	174,157	165,222	150,000	335,483	824,862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35,588	15,331	54,810	—	105,728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2	87	—	11	100
청소년육성기금 (Youth Fostering Fund)	87	1,287	—	315	1,690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6,993	1,404	—	1,957	10,354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5,227	—	—	1,362	6,589

04 기금지출

Fund Expenditures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정부내부 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여유자금 운영 Surplus Asset Management	합계 Total
총계 (Total)	1,698,010	26,141	3,717,465	2,295,326	7,736,941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187,414	1,028	1,344	34,561	224,348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21,028	1	2,606,483	5,812	2,633,324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210,325	718	863	28,708	240,614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159	1	60,988	276	61,424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965	7	1,612	484	3,068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13,244	6	232	3,143	16,625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34,241	1	5,477	3,910	43,629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294,713	5,312	-	1,037,663	1,337,688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15,662	296	6,216	4,664	26,839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10,308	28	4,000	2,328	16,664
국제교류기금 (Korea Foundation Fund)	512	143	200	842	1,697
국제질병퇴치기금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421	7	-	223	651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6,073	-	950	1,360	8,383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35,426	4	-	644	36,074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정부내부 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계 Total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1,891	397	606	2,209	5,104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Kum River)	1,157	26	-	383	1,566
기술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Fund)	13,515	2,035	-	13,557	29,106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2,443	41	-	157	2,641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12,431	25	3,253	1,048	16,75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3,493	557	-	16,449	20,49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22,010	544	-	3,498	26,05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 Fishing Houses)	671	0	-	13	684
농어업재해보험기금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1,500	6	-	3,773	5,279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Direct Payment Fund for the Promotion of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23,920	2	12	239	24,172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16,091	809	5,500	6,106	28,507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2,834	208	177	449	13,668
무역보험기금 (Korea Trade Insurance Fund)	7,258	1,228	27	37,633	46,146
문화예술진흥기금 (The Korean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3,015	216	78	1,930	5,239
문화재보호기금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und)	1,348	1	39	31	1,41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1,609	14	25,000	38,189	64,812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12,516	44	84	1,774	14,418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1,053	1	27	19	1,100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정부내부 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계 Total
보훈기금 (Merit Reward Fund)	1,448	10	1,809	5,092	8,360
복권기금 (Lottery Fund)	40,283	8	19,581	4,888	64,76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Korea Teacher Pension Fund)	53,350	558	625	75,602	130,135
사법서비스진흥기금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807	1	300	345	1,453
사학진흥기금 (Private School Promotion Fund)	2,457	90	986	1,170	4,70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154	108	-	6,202	6,464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Fund for Advance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427	12	1,752	461	2,652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77,014	3,976	25,000	75,974	181,964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Damage Relief Fund)	207	19	-	165	39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Micro Enterprise & Market Promotion Fund)	47,442	514	8,261	-	56,218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5,384	14	1,000	3,851	10,249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Governmental Fund for Patriotic Martyrs & Independence Fighters)	866	1	-	747	1,613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28,746	3,604	-	63,512	95,862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	-	1,872	352	2,225
양성평등기금 (Gender Equality Fund)	4,677	0	112	402	5,191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210	2	-	129	34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eongsan and Sumjin River)	786	16	-	374	1,176
영화발전기금 (Film Development Fund)	1,053	117	-	1,882	3,052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정부내부 지출 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계 Total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Fund for Redemption of Deposit Insurance Fund Bonds)	788	36	29,571	134	30,529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	8	407,406	646,625	1,054,039
원자력기금 (Atomic Energy Fund)	3,221	13	-	1,677	4,911
응급의료기금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2,461	3	515	100	3,079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7,169	135	1,000	1,779	10,083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Auto Accident Victim Support Fund)	516	1	-	2,090	2,60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Agricultural Fund for Performance of Free Trade Agreement)	5,135	46	-	332	5,5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6,039	750	3,000	6,983	16,772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 Power Industry Basis Fund)	26,834	79	23,900	13,127	63,940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13,845	244	351	1,744	16,18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3,712	681	2,000	38,564	44,957
주택도시기금 (National Housing & Urban Fund)	313,904	4	424,424	86,530	824,862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63,669	1,268	40,792	-	105,728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87	6	-	7	100
청소년육성기금 (Youth Fostering Fund)	1,395	0	32	263	1,690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9,418	17	7	912	10,354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5,263	91	-	1,235	6,589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1

별첨

—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1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박정현	예산관리과 과장	종합 편집
이기웅	예산관리과 사무관	"
김진수	예산관리과 사무관	"
배경은	예산관리과 주무관	"
나한솔	예산관리과 에디터	"
박준호	예산총괄과 과장	제3부 제1장 2021년도 예산, 예산통계
김영임	예산총괄과 서기관	"
김한필	예산총괄과 사무관	"
안광선	예산총괄과 사무관	"
이성민	예산총괄과 사무관	제3부 중 예산통계
이재환	예산총괄과 사무관	"
신형진	예산총괄과 사무관	"
천혜린	예산총괄과 주무관	"
박창환	예산정책과 과장	제2부 제1장 2021년도 나라살림 종합, 제2장 2021년도 재원배분 방향,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박상우	예산정책과 사무관	"
구정대	예산정책과 사무관	"
이상희	예산정책과 사무관	"
김정아	예산정책과 사무관	"
김재영	예산정책과 주무관	"
남기범	예산정책과 주무관	"
계강훈	예산기준과 과장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이기훈	예산기준과 사무관	"
김영진	예산기준과 사무관	"
전성현	예산기준과 사무관	"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송성일	예산기준과 사무관	"
서해경	예산기준과 주무관	"
김경연	예산기준과 주무관	"
이민호	인력예산팀 팀장	"
강보형	인력예산팀 사무관	"
차경은	인력예산팀 주무관	"
고정삼	기금운용계획과 과장	제3부 제2장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기금통계
정윤홍	기금운용계획과 사무관	"
임주현	기금운용계획과 사무관	"
이영훈	기금운용계획과 사무관	"
최창선	기금운용계획과 사무관	"
이성국	기금운용계획과 주무관	"
오상식	기금운용계획과 주무관	"
장운정	고용환경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일자리, 환경 분야
안재영	고용환경예산과 사무관	"
박성준	고용환경예산과 사무관	"
허성용	고용환경예산과 사무관	"
이성택	고용환경예산과 사무관	"
이승우	고용환경예산과 사무관	"
김진웅	고용환경예산과 사무관	"
문근기	고용환경예산과 주무관	"
김민주	고용환경예산과 주무관	"
박호성	교육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교육 분야
신경아	교육예산과 사무관	"
권혁순	교육예산과 사무관	"
곽인수	교육예산과 사무관	"
진선홍	교육예산과 주무관	"
박수현	교육예산과 주무관	"
유형선	문화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문화·체육·관광분야
성기웅	문화예산과 사무관	"
김낙현	문화예산과 사무관	"
박주선	문화예산과 사무관	"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최동호	문화예산과 사무관	"
김희태	문화예산과 주무관	"
정사랑	문화예산과 주무관	"
임영진	국토교통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SOC분야
윤지원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김남호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김금비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임성빈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공현철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허장범	국토교통예산과 주무관	"
이용호	국토교통예산과 주무관	"
장보영	산업중소벤처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정민철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사무관	"
하지승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사무관	"
김기문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사무관	"
홍단기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주무관	"
오미화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주무관	"
김위정	농림해양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농림·수산·식품분야
문희영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성석연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이미숙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정주현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장영훈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김성규	농림해양예산과 주무관	"
윤동형	농림해양예산과 주무관	"
육현수	연구개발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R&D분야
조병규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김병철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전형용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김다현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조기문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임상균	연구개발예산과 주무관	"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연영민	연구개발예산과 주무관	"
이성원	정보통신예산과 과장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성인영	정보통신예산과 사무관	"
홍현문	정보통신예산과 사무관	"
박성현	정보통신예산과 사무관	"
정석현	정보통신예산과 사무관	"
최경남	정보통신예산과 주무관	"
김태곤	복지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보건·복지분야
최상구	복지예산과 사무관	"
김형은	복지예산과 사무관	"
박진훈	복지예산과 사무관	"
신민경	복지예산과 사무관	"
권동한	복지예산과 주무관	"
천민지	복지예산과 주무관	"
정유리	연금보건예산과 과장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정록환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정효상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김형욱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송기선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김정수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박형민	연금보건예산과 주무관	"
송유경	연금보건예산과 주무관	"
한재용	안전예산과 과장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유동훈	안전예산과 사무관	"
김중석	안전예산과 사무관	"
손우승	안전예산과 사무관	"
박선영	안전예산과 주무관	"
허승철	법사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공공질서·안전 분야
이승도	법사예산과 사무관	"
허영락	법사예산과 사무관	"
강민기	법사예산과 사무관	"
정채환	법사예산과 사무관	"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유이슬	법사예산과 사무관	"
신진욱	법사예산과 주무관	"
유승우	법사예산과 주무관	"
남동오	행정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외교·통일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김남희	행정예산과 사무관	"
윤흥기	행정예산과 사무관	"
이지훈	행정예산과 사무관	"
조강훈	행정예산과 사무관	"
송유민	행정예산과 주무관	"
조성현	행정예산과 주무관	"
정희철	지방재정팀 팀장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이숙경	지방재정팀 사무관	"
김유정	지역예산과 과장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이은숙	지역예산과 사무관	"
박영식	지역예산과 사무관	"
이선호	지역예산과 사무관	"
박혜강	지역예산과 사무관	"
양경모	지역예산과 주무관	"
강혜숙	지역예산과 주무관	"
최병완	국방예산과 과장	제2부 제3장 국방분야
이만구	국방예산과 사무관	"
김재오	국방예산과 사무관	"
김기동	국방예산과 사무관	"
안준영	국방예산과 사무관	"
정민기	국방예산과 주무관	"
문강기	국방예산과 주무관	"
김장훈	방위사업예산과 과장	제2부 제2장 중점추진과제
김민석	방위사업예산과 서기관	"
윤인형	방위사업예산과 사무관	"
김길남	방위사업예산과 사무관	"
김혜은	방위사업예산과 사무관	"
홍주연	방위사업예산과 주무관	"

- 예산개요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개요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

- 발간등록번호 11-1051000-000020-10
- 발 행 처 기획재정부
- 발 행 인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
- 발 행 일 2021년 2월
- 연 락 처 Tel. 044-215-7191
Fax. 044-215-8041

